

고하 송진우선생 서거 70주기

추모 학술세미나

고하 송진우선생의
항일 독립운동과 건국에 관한 이념과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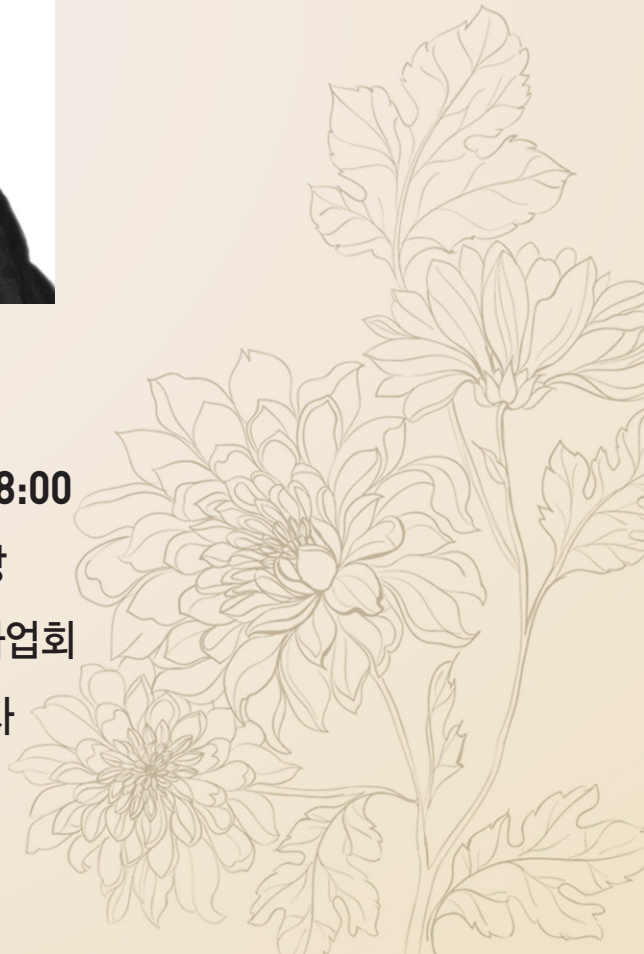


일시 2015. 10. 20(화) 13:00-18:00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재단법인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후원 국가보훈처 · 광복회 · 동아일보사



프로그램

사 회 : 심지연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13:00-13:30	등 록
13:30-14:00	개회식 국민의례 개회사 : 김창식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축 사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축 사 : 김학준 (단국대학교 우석한국영토연구소 소장)
14:00-15:40	제 1부 : 고하 송진우의 독립 사상에 대한 재조명
14:00-14:30	발표 1 : 고하 송진우의 근대국가 사상과 민족운동가로서의 위상 윤덕영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14:30-15:00	발표 2 : 고하 송진우의 독립 방략에 대한 고찰 이철순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5:00-15:40	토 론 : 김현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명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5:40-16:00	휴 식
16:00-17:40	제 2부 : 고하 송진우의 건국 사상에 대한 재조명
16:00-16:30	발표 1 : 근대를 향해, 국민국가를 향해, 민주주의를 향해 : 송진우의 길, 중용적 진보의 길 박명림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16:30-17:00	발표 2 : 해방 후 고하 송진우의 정치 구상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17:00-17:40	토 론 :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교수) 김영명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17:40-18:00	폐 회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창식입니다.

광복 70주년인 금년 한 해 동안 정부는 이를 기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여 왔는데, 마침 금년은 고하선생께서 불의의 흉탄에 서거하신지 70주기가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해서 국가보훈처의 후원으로 “고하 송진우선생의 항일독립운동과 건국에 관한 이념과 사상”이란 주제로 선생의 생애를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학술세미나에서 격조높은 발표와 토론을 수락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행사를 지원해주신 국가보훈처와 김학준 박사님,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참으로 어둡고 흑독했던 일제강점기에 정부도 없던 시절 동아일보를 짊어지고 불굴의 정신으로 민족을 이끌고 민족에게 희망과 빛을 주어 갈 길을 밝히면서 국내 항일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고, 광복이 되자마자 나라 세우기에 앞장섰던 탁월한 지도자인 고하 송진우선생에 관한 여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이 학술세미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하선생은 3·1운동을 주도하여 옥고를 치른 후에는 당시 민족의 대변자 동아일보를 통하여 국내에서 꺼져가는 민족의식을 끊임없이 일깨우는 일방 중국의 임시정부, 만주의 무장독립단, 노령의 독립운동그룹, 구미의 각종 독립활동을 국내외적으로 연결하고 지원하는 중심점의 역할을 줄기차게 수행했습니다. 해외독립운동의 밀사들을 접견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한 경우 동아일보에 독립운동의 정보를 대서특필하였으며 독립운동자금을 전달하는 연결과 확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광복이 되자 고하선생께서는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공산주의 정당들과 대항하여 결성된 한국 민주당의 수석총무로 추대되고 그후 重刊된 동아일보의 사장으로 선임되자 해방 정국에서 가장 강력한 두 기관의 총수로서 민주건국의 길에 매진하

셨습니다. 고하의 평생의 친구요 동지인 위당 정인보는 그를 충무공과 비견하면서 지조와 경륜을 겸비한 지도자 고하의 독야청청의 일생을 기렸습니다. 또한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조선이 낳은 두 인물로서 율곡과 고하를 들면서 임종시에 고하를 여러 번 부르다가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여러 갈래로 추진되어온 독립운동이 모두 우리의 광복에 큰 기여를 하였는데도 유독 고하가 중심이 된 국내독립투쟁은 공정한 평가를 못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고하의 줄기찬 항일투쟁과 민주건국의 생애, 선진적이고도 진보적인 사상, 그리고 웅대한 정치, 경제, 사회구상과 활동이 널리 알려지거나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였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상한 연구도 없이 고하의 업적을 이념적 틀로 쉽게 재단하여 평가하는 시각도 있고, 엉뚱하게도 고하의 입장을 일제강점기에 자치운동을 추진한 타협적 우파 민족주의자라고 단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외의 여러 가지 이유로 고하선생을 부당하게 격하하는 움직임조차도 있어 왔습니다. 오늘의 학술세미나에서 고견을 개진해주실 학자 및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사실과 공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당하고도 객관적인 학문적 평가를 해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권위 있는 발표와 토론이 고하선생에 대한 종래의 부당한 평가, 왜곡 내지 격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하 송진우선생 서거 70주기를 맞이하여 선생의 독립운동과 건국구상, 생애와 활동, 정치가, 언론인 및 교육자로서의 사상과 업적을 재조명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고 민족통합에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金昶植 (古下 宋鎮禹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축사

고하 송진우 선생의 서거 70주기를 맞이해 선생의 사상과 생애를 다시 살펴보는 학술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고하는 나라의 운명이 각박해지던 구한말에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애국자 기삼연 선생의 훈도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는 사리사욕을 버리는 것은 물론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던 기삼연 선생은 결국 항일의병장으로 활약하다 순국했는데, 고하는 스승의 고귀한 순국에 감동해 스스로도 그 뜻을 이어받으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하여 고하는 역사상 흑독하기 짝이 없었던 일제강점기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민족정신을 지키며 생활했던 것입니다. 3·1운동에 참여해 투옥됐던 사실, 그리고 동아일보사에서 사장 등 주요한 직책들을 맡으며 ‘민족불멸론’을 전파하면서 항일민족노선을 지키다가 다시 투옥됐던 사실이 그의 올곧은 심지와 행동을 증명합니다.

일제는 패망에 직면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조선민중이 신뢰하는 지도자에게 정권을 넘겨주려고 획책했습니다. 고하에게도 접촉과 대화의 손길을 뻗었을 때, 선생은 단연 거부했습니다. 일제로부터 권력을 받으면 괴뢰가 된다는 지론 때문이었습니다. 대신에 고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환국을 도와야 하며 연합국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해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해방은 분단과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고하는 새로운 상황에서 연합국 가운데 주도국이던 미국의 남한군정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독립정부를 세우기 위한 기회로 평가하면서 임정봉대와 연합국환영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의 노력은 일차적으로 한국민주당의 창당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 한민당은 대한민국의 탄생을 위한 주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야당으로 민주화운동을 이끌어 오늘날 까지도 한국정당사에서 현대적 국민정당의 원형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고하는 1945년 12월 하순 모스크바협정이 발표된 직후의 격앙된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분별없는 테러리스트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수호하고자 노력했던 민족주
의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후대에 계승되고 있습니다.

고하의 '나라사랑 겨레사랑'의 높은 정신을 다시 새기기 위한 이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재
단법인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그리고 주제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을 비롯한 참석자 여
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준 (단국대학교 우석한국영토연구소 소장)

고하 송진우의 근대국가 사상과 민족운동가로서의 위상

윤덕영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1. 머리말

고하 송진우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상당한 위상을 갖고 있는 중요한 인물임에도 다른 주요 인물들에 비해 크게 덜 알려져 있다. 일제 강점하 민족운동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많은 연구들에서 송진우를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송진우를 중심으로 놓고 연구가 진행되기 보다는 주로 인촌 김성수와 관계 속에서, 그리고 김성수를 중심으로 놓은 동아일보 계열, 우파 민족주의 세력의 활동 속에서 송진우를 부차적으로 파악하여 연구하고 있었다. 송진우를 직접 대상으로 한 연구도 2000년대 중반까지는 별로 없는 실정이었다.¹⁾

강동진, 송건호, 박찬승의 연구 이래 상당수 연구에서는 1920년대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 자치제를 실시하려 했고, 이에 보조를 맞추어 우파 민족주의 세력들이 타협적 성격을 갖는 자치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에 맞서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이 신간회를 결성하였다고 파악했다. 이런 전제하에서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으로서 동아일보 계열의 활동과 송진우의 활동이 조망되었다.²⁾ 이에 대해 송진우의 평전을 썼던 김학준은 송진우를 민족주의적 민주주의자이자 문화주의자로 정리하였다. 한편 학술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송진우를 문화민족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 정당다원주의자, 정치현실주의자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또한 송진우를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파 민족주의로 일관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경제적 자유와 생존권 보장을 강조하고 해방 후 역사 발전 단계를 사회민주주의 혁명 단계로 파악하면서 전향적 사회관과 경제관을 가진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또한 균형있는 중도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었다. 현재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또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송진우는 다양하게 기억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논의들의 상당수는 동아일보 계열의 중심에 김성수를 놓고 송진우를 그의 자장하에 있는 인물로 보는 일반적 경향에 기반해서 송진우를 파악하고 있다. 동아일보와 경성방직의 김성수 자본만을 보는 이런 인식은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널리 있어 왔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³⁾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송진우는 일제시기 잡지에서 조선을 대표하는 ‘政客’으로

1) 심지연, 1988, 「고하 송진우」, 『한국현대인물론』, 을유문화사 ; 김학준, 1990, 『고하 송진우평전』, 동아일보사 ; 이시형, 1995, 「보수우익 지도자들의 건국사상-이승만·김구·송진우를 중심으로-」, 경희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 심재욱, 1999, 「1920~30년대 초 고하 송진우의 사상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2 ; 윤덕영, 1999, 「고하 송진우의 생애와 활동」, 『한국현대사인물연구』 2, 백산서당.

2) 송건호, 1979, 『한국현대사론』, 한국신학연구소 ; 강동진, 1980,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 박찬승, 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 김경택, 1998, 『1910-20년대 동아일보 주도층의 정치경제사상 연구』,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 김정인, 2001, 「1920년대 전반기 민족담론의 전개와 좌우투쟁」, 『역사와 현실』 39 ; 강명숙, 2001, 「1920년대 초반 동아일보에 나타난 자치에 관한 인식」, 『역사와 현실』 41 ; 강정민, 2005, 「자치론과 식민지 자유주의」, 『한국철학논집』 16 ; 이나미, 2006, 「일제시기 조선 자치운동의 논리」, 『민족문화연구』 44, ; 김동명, 2006,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정치운동』, 경인문화사 ; 박찬승, 2007, 『민족주의의 시대』, 경인문화사.

3) 1932년 유광열의 인물평을 보면 그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 지를 잘 묘사하고 있다. “세인 중에는 씨를 평하여 ‘김성수의 병정’이라고 하는 이도 있다. 병정이라면 그런 병정은 없을 것이다. 조석으로 김씨 집에 출입하며 씨가 관계하는 대소사를 보고 상의하느니만큼 진실로 忠勤스런 병정이다. 그러나 부자의 병정으로서 대개는 그 부자를 끌고 기생집에 가고 요정에 가는 것이 상례인데, 씨는 김씨 상투를 잘라 일본으로 끌고 가는 그런 병정이요, 중앙학교를 하게하고, 방직회사를 하게하고, 동아일보사를 하게하는 그런 병정이다. 그러나 씨가 단순하고 호락호락한 병정은 아니다.”

자주 묘사될 만큼 대단히 정치적인 인물이면서도,⁴⁾ 국내외 정세와 운동현실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일가견을 갖고 있었고 정치적 능력이 뛰어났다.⁵⁾ 송진우를 핵심으로 하는 동아일보계열 및 호남정치 세력의 1920년대 초반부터 해방직후에 이르기까지 노선과 활동에 대해서는 최근 일련의 새로운 연구 성과가 제출되었는데,⁶⁾ 본 연구는 그에 기반하여 송진우의 사상과 민족운동노선, 민족운동사에서의 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서구 근대 사상의 수용과 특징

1910년대 후반부터 유학의 경험을 통해 신지식을 습득하고, 신사상으로 무장한 새로운 청년, 지식인들이 속속 귀국하여 한국의 민족운동에 합류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일정하게 차별적인 ‘신지식층’으로 1910년 중반에서 1920년대 초반까지 세계정세의 변화 그리고 일본 정계와 사회의 변화를 직접 접하면서 민족운동의 새로운 운동양상을 만들게 된다. 특히 1920년대 전반 정치적으로 형성된 민족주의 세력의 주요 인물들은 대개 일본 유학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일본 유학시절부터 재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이하 학우회)을 중심으로 서로 교류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⁷⁾

이들이 유학을 했던 1910년대에서 20년대 전반까지의 시기의 일본은 소위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시기로 정당정치세력과 민중이 급속히 성장하던 시대였고, 민본주의 사상을 비롯한 일본 특유의 민

연전에 김씨와 송씨와 쟁론하는 일 장면에, 송씨는 김씨에게 「오 네가 신문사나 경영한다고 친구도 몰라 --- 나를 내보내려무나. 네 富者는 얼마나 있겠느냐 네집에 OO이 들어갈 줄 알아라」하고 怒罵하였다. 이럴 때에 명민한 김씨는 묵묵 不語하고 그 자리에서 나가고 말고 다른 친구가 송씨에게 「송선생이 너무하외다」 한 일이 있었다 한다.” 유광렬, 「신문독재자 송진우론」, 『삼천리』 4-9, 1932년 9월호.

김성수전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둘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40년 동안 함께 지내는 사이에 충돌도 없지 않았다. 남의 눈에는 다시는 상종도 할 것 같지 않을 만큼 크게 싸우는 일도 있었다. 「내 다시는 이놈의 집에 안온다!」고 인촌집의 문을 박차고 나선 일도 있었다. 인촌이 수그러드는 것도 아니었다. 「꼭 되다 만 되놈이라니까,」 마침 옆에 있던 사람이 걱정하였다. 「선생님, 고하선생을 그렇게 마구 취급을 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나 인촌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아, 고하는 총독이나 상대하지, 나는 상대도 안 되는 조선의 인물이야」 [인촌기념회, 1976, 『인촌 김성수전』, 인촌기념회, 495~496쪽].

- 4) 1932년 황석우의 인물평을 보면 송진우에 대해서 “씨는 이론가는 아니다. 그는 모략중흥의 가장 활동적인 정객이다. 조선안의 인물로서는 정치가로의 그럴듯한 소질이 제일 풍부한 인물은 송씨일 것이다. 그는 조선안의 젊은 인물로서는 벌써 정치가로의 급제점 이상을 돌파한 인물이다” 라고 평하였다. 황석우, 「나의 팔인관」, 『삼천리』 4-4, 1932년 4월호.
- 5) 동아일보를 거쳐 조선일보, 시대일보에서 사회부장을 수차례 역임했고 1932년 당시에는 중앙일보의 지방부장이던 유광렬은 송진우에 대해 “조선에 낳으니 일 신문경영자이지 조건이 좋은 곳에 낳으면 반듯이 정계에 출마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씨의 倨傲自大한 자아와 정치가적 공명심”이 큰 인물로 “씨는 책략이 중횡한 사람이다. 아마 현재 조선에서 歷歷名流를 갔다 놓고 책략으로써 씨름을 하라면 씨의 위에 나올 이가 몇이 못 될 것이다. 모든 일에 얹고 팻득한 재사의 才가 아니라 深謀遠慮! 능히 人의 상상을 뛰어넘는 영똥한 것을 꾸며내는 위인” 이라 하고 있다. 유광렬, 「신문독재자 송진우론」, 『삼천리』 4-9.
- 6) 윤덕영, 2010, 「1920년대 전반 민족주의 세력의 민족운동 방향 모색과 그 성격」, 『사학연구』 98 ; 2010, 「1920년대 전반 동아일보 계열의 정치운동 구상과 ‘민족적 중심세력론」, 『역사문제연구』 24 ; 2010, 「1920년대 중반 민족주의 세력의 정세인식과 합법적 정치운동의 전망」, 『한국근현대사연구』 53 ; 2010, 「1926년 민족주의 세력의 정세 인식과 ‘민족적 중심단체’ 결성 모색 -소위 ‘연정회’ 부활 계획에 대한 재해석-」, 『동방학지』 152 ; 2010, 「신간회 창립과 합법적 정치운동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5 ; 2011, 「신간회 창립 주도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의 정치 지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8 ; 2011, 「송진우-한국민주당의 과도정부 구상과 대한국민시정부 지지론」, 『한국사학보』 42 ; 2011, 「1945년 한국민주당 초기 조직의 성격과 주한미군정 활용」, 『역사와 현실』 80 ; 2012, 「1930년대 동아일보 계열의 정세인식 변화와 배경」, 『사학연구』 108 ; 2014, 「미군정 초기 정치 대립과 갈등 구조의 중층성- 1945년 말 한국민주당 주도세력의 정계 개편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65.
- 7) 학우회에 대해서는 김인덕, 1990, 「학우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 66 ; 박찬승, 2003, 「1910년대 독일유학과 유학생활동」, 『호서사학』, 34 참조.

주주의 사상이 크게 확산되던 시대였다. 조선의 유학생들은 이러한 동향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송진우도 마찬가지였다. 1912년 12월부터 시작된 제1차 호헌운동은 송진우를 비롯한 제일조선인 유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 대중적 정치운동을 몸으로 경험하고 체득하게 하는 최초의 계기였다.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와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정당정치세력과 지식인들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또한 각종 집회와 연설회를 통해 일본의 번벌세력을 맹렬히 비난하고, 민주주의적 정치질서를 역설하였다. 제1차 호헌운동을 계기로 형성된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주도한 것은 대학과 언론계에 기반을 둔 지식인과 언론인들이었다. 제일유학생의 다수가 다닌 와세다대학의 정치학의 다카다 사나에(高田早苗), 우키다 가쓰타미(浮田和民), 오야마 이쿠오(大山郁夫), 경제학의 아마노 다메유키(天野爲之), 아베 이소오(安部磯雄), 식민지정책학의 나가이 류타로(永井柳太郎), 역사학의 우치가사키 사쿠사부로(内崎作三郎) 등⁸⁾과 도쿄제국대학의 정치학의 미노베 다즈키치(美濃部達吉),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철학의 쿠와키 겐요쿠(桑木巖翼), 게이오대학의 후쿠다 도쿠조(福田徳三) 등의 지식인들, 그리고 『주요고론(中央公論)』의 타키타 테츠타로(湧田哲太郎), 『오사카 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의 토리이 테루오(鳥居赫雄), 하세가와 노제칸(長谷川如是閑) 등의 언론인이 주축이 되어 신문과 잡지의 각종 논설을 통해 일본 특권정치를 비판하고 민주주의 사상을 확산시켰다.

그런데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주도 인물들은 당시 제일조선인유학생들과 상당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우선 제일 조선인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던 와세다대학에는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주요 이론가들이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이론과 이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한편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대표적 이론가인 요시노 사쿠조는 1913년 9월, 제일조선인유학생 김우영과 처음 만난 이래, 송진우를 비롯한 장덕수, 백남훈, 김성수, 최두선, 현상운 등과 만났고, 1917년 이후부터는 빈번하게 제일유학생들과 교류하였다.⁹⁾ 다이쇼 민주주의 이론가들의 제일조선인 유학생들에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¹⁰⁾ 그리고 이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헌정회 계열의 일본 정당정치세력과 조선의 민족주의 세력은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때문에 조선의 신지식층, 민족주의 세력이 받아들인 서구의 사상, 근대 민주주의 사상은 고전적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상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 서구의 부르주아 사상은 19세기 중반까지는 영국의 존 로크(John Locke)와 애덤 스미스(Adam Smith)로 대변되는 고전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이 대표적이었고, 그 외 18세기말 프랑스혁명의 급진성과 민중운동의 고양에 대한 반발과 위기를 반영하여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를 중심으로 보수주의 사상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고전적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상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커다란 한계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의 극심한 빈곤과 열악한 노동환경, 극심한 빈부격차와 사회 양극화, 자본의 독점화 및 중소 상공인의 몰락, 주기적 불황 등,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노정되었다. 이는 사회 갈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위기를 불러왔고,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부터 변혁하려는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는 배경이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상을 수정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일군의 사조가 등장하는데, 곧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 또는 ‘사회적 자유주의’라 불리는 사조였다.¹¹⁾ 영국의 밀(John

8) 와세다대학의 학풍과 학문별 주요 인물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早稻田大學70周年記念 社會科學部門編纂委員會編, 1957, 『近代日本の社會科學と早稻田大學』, 早稻田大學; 早稻田大學出版部, 1981, 『近代日本と早稻田の思想群像』, 早稻田大學.

9) 요시노와 만난 제일조선인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松尾尊兌, 1997, 「吉野作造と朝鮮・再考」,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5, 8쪽 표 참조.

10) 당시 제일 조선인 유학생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박찬승, 2003, 「식민지 시기 도일 유학생과 근대 지식의 수용」, 『지식변동의 사회사』, 문학과지성, 177~181쪽; 이철호, 2008, 「1910년대 후반 도쿄 유학생의 문화 인식과 실천」, 『한국문학연구』 35집, 328~330쪽.

11) 영국에서 사회적 자유주의라 불리는 신자유주의가 대두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송규범, 1998, 「신

Stuart Mill)과 그린(Thomas Hill Green) 등의 개혁적 지식인들의 영향, 그리고 기독교 개혁주의와 기독교 사회주의의 종교적이념적 배경을 갖고 형성된 신자유주의 사상은 특정 단체나 조직의 정형화된 이념이 아니라 다양한 행태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엽에 걸쳐 영국 지식인 사회에서 광범하게 유포되고 있었다. 『데일리 크로니클(Daily Cronicle)』, 『스타(Star)』, 『맨체스터 가디언(Manchester Guardian)』, 『네이션(Nation)』 등의 언론매체가 신자유주의 이념을 형성하고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홉하우스(Leonard Trelawny Hobhouse), 홉슨(John A. Hobson)에 의해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골격이 형성되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서구로 유학을 갔다 왔거나, 당시의 학문적·정치사상적 동향을 흡수한 지식인들이 일본 대학 강단에서, 그리고 언론 출판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있었다. 미우라 테스타로(三浦溟太郎)는 1914년 『政治と生活』에서 홉하우스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도 홉하우스가 1911년 간행한 『자유주의(Liberalism)』를 완독하고 1915년 와세다 문학강연회에서 『新自由主義の發達』이라는 강연도 하고, 『동양경제신보』에 시론을 발표하였다.¹²⁾ 민본주의를 비롯한 일본의 정치사상도 그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요시노는 사상적 친근성 때문에 홉하우스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¹³⁾ 민본주의는 구체제로부터의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절대국가로부터 시장과 사회의 독립을 추구한 고전적인 자유주의의 비판적 수용 위에서 국가에 의한 시장과 사회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화를 구상한 점에서 일본의 ‘신자유주의’ 정치이론 이었다.¹⁴⁾ 이들은 정치적 구심체이자 최고통치기관으로서 천황의 존재는 인정하였고, 그 대신에 입법권의 우위와 정치의 천황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했다.

당연히 1910년대에서 20년대 초반에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대부분의 조선의 신지식층, 민족주의 세력은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대학 정도를 수학한 1910~20년대 조선인 유학생들이 서구 정치사상과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사상과 이론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받아들인 것이 18세기에서 19세기 초의 고전적 민주주의론과 자유주의 사상이거나 보수주의 사상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이미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엽의 서구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을 배우고 있었으며, 이를 일본적 현실에서 고민하며 대안을 찾던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사상을 배우고 있었다. 특히 그들은 일제에 의해 민족적 차별과 식민지적 억압을 받는 식민지 지식인, 청년학생이었기에 제국주의 체제에 안주하면서 타협할 수 있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지식인들과는 처지가 근본적으로 달랐다. 더 급진적으로 발전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고, 실제로도 그러했다.¹⁵⁾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신자유주의 이념이 주목될 필요가 있다. 당시 영국의 신자유주의는 단순한 지적 論究가 아니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영국의 정치와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사회개혁운동이었다. 영국의 신자유주의는 시민운동과 종교운동으로 출발해서 진보적 자유주의 정당 결성 운동으로 나타났고, 1900년부터는 영국 자유당 내 개혁파와 본격적으로 결합하여 자유당이 1906년 총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1908~11년 영국 자유당의 사회개혁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¹⁶⁾ 신자유주의는 자유당 내 개혁파의 중요한 이념적 기반으로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당을

자유주의, 『서양의 지적운동』 I, 지식산업사; 1999, 오인영, 『영국의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의 이념적 성격과 사회개혁노선- 1891~1914』,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30쪽; 박우룡, 2003, 『전환시대의 자유주의』, 신서원, 23~94쪽.

12) 宮本盛太郎, 1986, 『日本人のイギリス觀-新自由主義-國民主權論のモデル』, 御茶の水書房, 68~88쪽.

13) 飯田泰三, 1980, 『吉野作造』, 小松茂夫·田中浩 編, 『日本の國家思想』 下, 青木書店, 52~55쪽.

14) 한정선, 2004, 『다이쇼 민본주의 재평가』, 『동양사학연구』, 87집, 225쪽.

15) 민본주의자들이 일본 특유의 천황제와 타협하여 주권과 권력의 소재로서 천황제를 인정하고 결국은 천황제 지배질서에 편입되어 간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는 데 반해, 식민지 독립을 위해서는 일제 지배질서와 천황제를 배격할 수밖에 없는 식민지 엘리트 지식인들은 당연히 더 급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개혁정당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들 중 일부는 1차 세계대전 중 자유당에서 노동당으로 당적을 바꾸어 영국 노동당의 성장과 체제내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러한 신자유주의 사상을 동아일보 계열의 핵심인물이었던 송진우가 일정하게 수용하여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내용이 잘 드러나는 것이 1925년 1월 12일부터 15일에 4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사설로서 발표한 「자유권과 생존권」 제하의 논설이다.¹⁷⁾ 송진우는 인류의 진보가 19세기 자유권의 발전시대로부터 20세기 생존권의 확충시기로 들어섰다고 바라보았다. 그는 19세기 자유권이 “정치적으로는 모든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생활상 기회균등을 파괴하였으며, 계급적 관념을 도발케 한 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면서, “요컨대 문제는 자유권의 병적 발전, 곧 불합리 무절제한 자본주의를 저주할 뿐이다. 환언하면 과거 봉건시대에 특권계급인 무사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었던 정치적 권리가 자유권의 발전에 의하여 일반 민중에게 均布된 것 같이 현대의 자본계급의 독점된 경제적 권리가 생존권의 각성에 의하여 평균적으로 분배될 것도 必至의 운명”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전망 위에서 송진우는 “자유권은 정치적 생존권이며, 생존권은 경제적 자유권”이라 하며, “자유권이 없는 곳에 개성이 확충될 수 없으며, 생존권이 없는 곳에 평등적 문화를 완성할 수 없다”고 하였다.¹⁸⁾ 이러한 인식은 신자유주의자들이 근대 정치적 자유를 위한 자유주의의 역사적 의의는 인정하면서도 독점과 빈부격차, 빈곤의 문제를 노정할 것을 비판하며 부의 공정한 분배를 촉구한 것, 자유와 민중의 생존적 권리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송진우는 현재의 세계에서 “자유권의 극단적 발전이 경제상으로는 세계대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동시에 모처럼 얻었던 정치적 자유권까지 유린하는 기현상을 발견”하게 된다면서, “자본과 노동이 대립된 사회에서 자유의 경쟁을 허하면 자본주의가 그 세력을 전횡할 것은 물론이다. 어찌 그러나 하면 자본은 선천적이며 노동은 후천적이다. 그러므로 경쟁의 출발지가 벌써 수평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런 파악은 신자유주의자들이 구자유주의의 모순과 자유경쟁의 불공평성을 지적하는 것과 대동소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현재의 문화의 총화는 전 인류의 工作”이라면서 때문에 “그 문화의 享樂은 共受”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이 “사회의 연대적 책임감이 생하며 평등적 관념이 發하며 노동승배의 진리가 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으로서 사회에 대하여 최소한도에 있어서 최후의 생존권을 주장할 이유가 自任하며, 사회에서도 각개의 생존을 확보할 의무가 固有할 것”이라고 한다. 곧 “정신적으로 각개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과 물질적으로 각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원리에 있어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¹⁹⁾ 이런 그의 주장은 사회와 국가가 모든 개인이 자아실현과 공동체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신자유주의의 주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의 향유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중에 대한 노동권과 교육권 등 사회적 권리의 보장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송진우는 이런 인식하에서 조선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 대해 자유권을 요구하는 민족운동이 생존권을 아울러 주장하게 되고, 생존권을 주장하는 사회운동이 아울러 자유권을 주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선진국가의 자본주의 성숙에 따라 강대민족의 지배가 무력적 정치적 정복에서 경제적 자본적 정복으로 변환하고, “정복보다는 회유며 위압보다는 착취”의 방법을 취하기에 현대의 정복된 약소민족

16) 자세한 것은 다음 참조. 오인영, 1999, 『영국의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의 이념적 성격과 사회개혁노선—1891~1914』,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38~204쪽. ; 오인영, 2001, 『영국의 신자유주의와 자유당의 사회개혁입법(1908~1914)』, 『영국연구』 5, 2001. 43~63쪽. ; 박우룡, 앞의 책, 219~253쪽.

17) 이하의 내용은 윤덕영, 2010, 「1920년대 전반 민족주의 세력의 민족운동 방향 모색과 그 성격」, 『사학연구』 98, 360~364쪽의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18) 「자유권과 생존권 (上) 차이점과 일치점」, 『동아일보』 1925. 1. 12.

19) 「자유권과 생존권 (中) 차이점과 일치점」, 『동아일보』 1925. 1. 13.

은 자유의 고통보다도 생존의 위협에 더 심하게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약소민족의 대부분은 ‘무산군’이며, 극소수의 자본계급도 자본주의의 3대 지주인 ‘자유교통·금융’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무산군의 운명에 떨어지게 될 것이 명확한 사실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자유사상에서 출발한 민족운동이 생존권화 하여 가고 생존의식에서 출발한 사회운동이 자유권화 하여 가는 것이 현하의 대세”라고 파악하였다.²⁰⁾ 이러한 송진우의 주장은 ‘자유사회주의’를 주장하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의 통합을 구했던 신자유주의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신자유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계급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계급이익에 반대하고 사회적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종의 윤리적 이상으로서의 사회주의로 이해한 것과 비슷하게 사회운동을 소비에트 러시아(소련) 방식을 예외로 하고 서구의 노동당과 일본의 무산정당에서 보이는 의회주의적, 합법적 운동방식을 합리적 운동으로 상정한 가운데, 그 합리적 운동으로서 사회운동과 민족운동의 상호 연관성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신자유주의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통합을 구했지만 결국 자유주의의 수정이자 자본주의의 체제내적 사상인 것처럼 송진우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민족운동의 일정한 수정을 통해 사회운동을 그 내부로 포괄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송진우는 자유는 인류의 神像이며 우리의 생명이지만, 불합리한 자유는 왕왕히 평등을 파괴하며 정의를 무시한다면 “완전한 자유는 평등에 있고 평등의 기초는 생존권의 보장”에 있다고 하여 “생존권이야말로 평민문화의 토대가 될 것이며 核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빈곤과 평등의 문제, 분배와 기회 균등의 문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결론적으로 자유가 없고 생존의 보장까지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의 질문을 제기하고, “인류의 문명은 心力의 발전”이라는 랄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의 명언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다 못 가진 바는 心力뿐이다. 心力의 힘을 확립하고 心力의 힘을 결합하여 이천만 心을 일심으로 하여 우리의 목적을 達하기까지 노력하자. 이에 인간미가 있고 또한 인생의 가치가 발휘 된다”고 주장하였다.²¹⁾ 이런 그의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사회의 물질적 요소들이나 물리적 장애를 ‘사회 속의 개인’으로서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과 통제로써 극복하고자 했던 것을 일정하게 연상하게 한다.

송진우의 논설은 그 용어에서 일정한 차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영국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아주 유사하게 그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체제내적 사상으로 민족자본주의적 발전을 지향하는 송진우를 중심으로 한 동아일보 주도세력의 입론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념이 송진우의 전체적 이념과 노선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송진우의 이념과 노선은 훨씬 더 다층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민족주의 세력의 주요 인물이자 동아일보 계열의 핵심인 송진우가 비록 한 부분이거나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주도하는 민족운동이 경성방직으로 대변되는 조선인 대자본가의 이해를 단순하게 반영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구의 경우 모든 대자본가들이 보수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식민지적 조건 하에서의 일부 자본가들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물론 조선인 대자본가로서 경성방직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제와 타협하고 협력도 하지만, 그들의 지원을 받는 정치적 운동체로서 동아일보세력과 그 핵심인물인 송진우의 운동은 그와는 일정하게 구별되게 자신의 분명한 이념과 노선을 가지고 독자적 행보를 하고 있었다.

3. 전통 사상의 재해석과 한국 민족주의 사상의 모색

20) 「자유권과 생존권 (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동아일보』 1925. 1. 14.

21) 「자유권과 생존권 (下) 우리는 猛省하자」, 『동아일보』 1925. 1. 15.

송진우는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웠고, 을미사변과 단발령 시행을 계기로 1896년 전남 장성에서 봉기하였던 의병장 奇三衍이 그의 집으로 잠시 피신 온 것이 인연이 되어 기삼연에게서 위정척사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노사 奇正鎭 문하의 유학을 수학하였다. 그렇지만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한국이 사실상 식민지로 전락하자, 그는 유학 수학에 한계를 절감한다. 송진우는 일본 유학을 통해 고루한 주자학, 전통적 성리학의 타파를 주장하게 된다. 송진우는 1915년 메이지대학을 졸업하면서 그동안 그가 경험했던 사상적 변화와 인식의 지평을 드러내는 글을 재일유학생 기관지 『학지광』에 발표한다.²²⁾

송진우는 유교사상이 ‘慕古思想의 원천’으로 ‘인문진보의 원리에 배치’되며, 정치적 인간인 民을 수동적인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전제사상의 단서’로 ‘자치권리의 평등정치를 실현하는 현대조류’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고, 동시에 사상자유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문명사상에 반하는 ‘배타사상의 표현’이라고 맹공하면서 유교사상의 타파가 시대요구의 급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봉건적 혈연질서와 특권의식을 타파하기 위해 그 근간이 되는 봉건제 가족제와 강제연애의 타파를 주장하였다. 그는 유교사상 대신 ‘國粹’ 발휘와 단군 숭배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그가 민족적 일체감과 구심점으로 단군을 위치시키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단군 숭배는 종교적이거나 국수주의적 숭배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세계 근대국가 건설과정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이, 근대국가 건설과정에서 필요한 근대 민족의식을 한국인들에게 일깨워주고 민족의 단합을 이루는 상징물이자 민족구심체의 상징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는 ‘國粹’인식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무함으로써 역으로 근대적 자각, 근대적 사상 개혁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그의 ‘國粹’ 발휘와 단군 숭배 주장은 대중교나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의 단군 숭배 등과는 일정한 차이를 갖는 것이었다.

송진우는 일본과 중국의 근대 국가 건설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서, 제국주의 침략을 받은 식민지에서 서구의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사상의 수용만으로는 자주독립된 근대국가를 건설하는 사상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것을 일찍이 깨우쳤다. 또한 그는 민족혁명을 넘어서 사회주의 이행까지를 전망하는 공산주의 세력의 신국가 건설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192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상황에서, 더군다나 격화되는 중국의 국공내전 상황과 코민테른의 ‘계급 대 계급’ 전술에 따른 공산주의 세력의 공세를 지켜 보면서 이에 대항하여 조선 민족주의 운동의 이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을 깊이 느끼고 있었다. 때문에 송진우는 우리의 독자적인 사상적 문화적 전통과 역사를 확립하는 것이 민족운동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통해 민족주의 세력 주도의 자립적 근대국가건설 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또한 공산주의 세력 주도의 국가건설운동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했다.

1931년 5월 신간회가 민족주의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세력의 주도하에 해소되었다. 송진우는 강력한 중심단체의 결성이 필요하지만, 민족운동 세력의 분열과 사상 대립, 그리고 국내외적 정세의 변화에 따라 조직 결성은 어렵다고 보았다.²³⁾ 그는 민족운동 내의 사상적 대립과 불일치가 민중들의 의식과 자각이 낮은 데서 오는 것으로 보아 ‘민중의 자각과 문화정도의 향상’이 사상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면서, 대중에 대한 정치운동의 ‘기본운동’이자 ‘준비운동’으로 ‘문화운동’의 제창과 민족운동의 사상 통일을 위한 ‘사상혁신론’을 주장하게 된다. 송진우가 전권을 휘두르던 당시 동아일보 사설은 신간회의 해소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기존 민족운동, 정치운동의 문제점은 운동의 형태만 과학적 신문화, 신사조를 표방했지, 실제 근본 사상과 행동은 여전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낙후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때문에 운동이 통일되고 단결되기 위해서는 사상의 혁신, 운동 문화의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 깃발을 든다고 주장했다.²⁴⁾ 그리고 사상혁신을 위해서는 조선만의 사상을 마련해

22) 송진우, 「사상개혁론」, 『학지광』 제3권1호, 1915. 5.

23) 송진우, 「농민대중의 훈련부터」, 『동방평론』 1, 1932. 4.

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타의 존재를 연구하기 보다는 먼저 조선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²⁵⁾ 이렇게 조선 자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언어를 알고 우리의 문자를 알고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학, 우리의 철학을” 알아야 하며, “우리에게는 좀 더 우리 것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주장하였다.²⁶⁾ 한편 조선을 표시할 사상은 민족주의로, 민족주의가 조선 민족의 지도원리이자, 사상 혁신의 기준이라고 주장하였다.²⁷⁾ 그리고 이러한 민족주의는 단순히 과거의 문화를 연구하여 진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 정신을 기반으로 한 자기의 발전을 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²⁸⁾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인식하는 사상적 바탕은 무엇인가? 이점에서 송진우와 동아일보의 주장은 당대 양명학의 대가이며 최고의 조선학 연구자였던 위당 정인보의 주장 및 일련의 작업과 연결되어 있었다.²⁹⁾ 송진우는 정인보와 협력하여, 근대사상으로 새롭게 해석된 혁신 유학으로서의 양명학의 소개, 조선후기 실학에 대한 적극적 발굴과 확산, 조선 역사에 대한 재조명, 國朝신앙이나 민족 위인들의 유적지 보전 운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정인보는 1933년 『동아일보』에 「양명학연론」을 연재하였다. 「양명학연론」은 일반인은 물론 지식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내용과 문장으로 되어 있어 대중 신문에 수록되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1933년 9월 8일자부터 12월 17일자까지 장장 66회에 걸쳐, 그것도 줄곧 1면에 게재되었다. 이는 정인보의 「양명학연론」이 송진우가 주도하는 동아일보의 사상 혁신 및 민족운동 기획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정인보의 「양명학연론」에서의 주장은 ‘良知’를 통해 ‘自心’을 찾고 ‘心魂’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사상적 바탕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사상혁신을 위해서 자주적 정신을 기반으로 조선을 연구해야 한다는 송진우와 동아일보 주장에 정인보가 전면적으로 대응한 것은 「오천년간 조선의 얼」 논설이었다. 이는 1935년 1월 1일부터 1936년 8월 27일까지 무려 1년 8개월간 283회에 걸쳐서 연재되었는데, 192회까지는 1면에서 연재되다가, 1936년 3월 17일 193회부터는 3면으로 옮겨서 연재되었다.

이러한 송진우와 정인보의 일련의 활동은 민족의 사상적 기초공사를 세우는 것으로, 조선 고유의 문화와 사상을 제고함으로써 근대 민주주의 사상과 ‘조선적인 것’의 결합을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근대국가 건설의 독자적 사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³⁰⁾ 이런 그들의 활동이 극복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보다 우선은 일제의 식민지배 이데올로기였다. 다음으로는 문명개화론, 서화론 등으로 상징되는 서구 근대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입하는 경향에 대해서였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계급 대계급’ 전술에 입각하여 민족주의 사상과 이념을 전면 부정하고, 소련과 코민테른을 추종하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비판까지도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가 주장하는 민족주의는 일제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민족적 주장인 동시에 전 세계적 운동성을 갖고 국가적 경계를 넘어 확산되던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경계와 대립으로서의 글로벌한 차원의 자유주의, 반공주의의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송진우와 정인보의 모색은 독자적인 한국 민족주의 사상의 정립으로 완결되지 못한다.

24) 「文化革新을 提唱함」, 『동아일보』 1932. 4. 18.

25) 「사상과 행동—우선 행동하라」, 『동아일보』 1932. 1. 25.

26) 「다시 우리 것을 알자」, 『동아일보』 1932. 7. 12.

27) 「조선 민족의 지도원리—가족주의로서 민족주의에」, 『동아일보』 1932. 12. 27.

28) 「조선을 알자—자기발견의 기원」, 『동아일보』 1933. 1. 14.

29) 1930년대 동아일보 ‘사상혁신’론의 내용과 그것이 당시 정인보의 일련의 저작들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자세한 것은 윤덕영, 2015, 「위당 정인보의 조선학 인식과 지향」, 『한국사상사학』 50, 442~453쪽 참조.

30) 정인보와 송진우의 관계는 아주 긴밀하였다. 정인보는 1926년 중반 송진우와 가까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1945년 12월 30일 송진우가 암살당할 때까지 정치 사회적 활동을 거의 같이 하였다. 정인보는 송진우를 당대 민족운동가 및 정치인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였으며 그의 활동에 적극 호응하였다.

중국의 경우 타오시성(陶希聖)을 비롯한 중국본위문화파와 신유가들의 주장이 여러 논쟁을 거쳐 일정한 성과에 이른 반면, 식민지 조선의 경우는 1930년대 중반부터 식민지 억압과 통제가 강화되면서 논쟁은 커녕 사상적 이론적 모색과 연구조차도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허울뿐인 ‘내선일체’를 주장하면서 보다 강화된 사상 통제와 황민화 정책을 추진했고, 일체의 조선적인 사회·문화·학술 활동을 억압했다. 특히 1936년 8월 손기정 일장기말소사건을 계기로 동아일보가 무기정간에 처해지면서, 주요 지면 자체가 사라졌다. 그리고 전시총동원체제에 따라 전방위적인 친일 전향의 압박이 가해졌다. 이를 견디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적 활동은 물론 학술적 활동조차도 해서는 안될 상황에 이르렀다. 8·15해방이 되면서 이런 모색을 다시 할 수 있었지만, 제대로 착수하기도 전인 1945년 12월 송진우가 암살되면서 미완으로 끝나고 만다.

4. 일제 식민통치 정책의 실상과 합법적 정치운동

송진우가 일제 강점하에서 추진했던 운동 노선과 내용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1920~30년대 일본 정계와 중국 정계의 변동, 더 나아가 세계 정치 변동, 그리고 일제의 조선 식민통치 정책의 실상 및 당시 국내 민족운동에서 확산되고 있었던 합법적 정치운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을 대륙(러시아) 침략으로부터 일본을 지키고 대륙(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일본의 국방상·안보상 사활적 위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때문에 일본 군부를 비롯해 일제 권력 핵심부는 조선의 경영에 큰 주의를 두고 있었고, 1919년 관제 개혁 이후에도 조선총독은 사실상 군부 출신만이 올 수 있었다. 일반적인 식민정책은 조선총독과 정무총감이 결정할 수 있었지만 지배체제의 커다란 변화, 예컨대 소위 ‘내지연장주의’ 정책과 ‘문화정치’, ‘참정권제’, ‘자치제’ 등의 시행은 일제 지배 핵심 블록 내의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 천황제 권력체계 특유의 권력분립체계 속에서는 1920년대 특권 번벌세력이 해체되고 정당정치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중의원에 기반한 정당정치세력이 조선 식민정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었다. 한편 3·1운동 직후 일본내 일부 자유주의자들과 일부 헌정회 계열의 인사들, 그리고 식민학자들에게서 조선에서 자치제 실시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자치제 주장은 식민지 조선이 일본의 안보·국방상 갖는 전략적 위치, 군부의 반발, 추밀원과 궁정, 귀족원, 관료집단내 보수세력들의 강한 거부감, 정관계와 민간의 국가주의 세력의 반발, 우경화하는 국민정서 등에 의해 곧 소멸되어 갔다. 보수적인 정우회는 말할 것도 없고, 헌정회와 자유주의 정치인,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조선 자치제 실시 주장은 1920년대 중반이 되기도 전에 이미 거의 사라지게 된다. 심지어 무산정당을 추진하던 사회주의 세력들도 식민지 조선에서 자치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을 공개하는 데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때문에 조선 총독과 정무총감의 정책결정권자 차원에서는 1926년 말까지는 중앙정치 차원의 조선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정치 차원의 조선 지방의회도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제시한 적이 없었다. 물론 토착관료(하에누키 관료)들 사이에서 자치제의 모색은 분명 있었지만, 그들은 ‘참정권제’, ‘자치제’ 같은 식민지 지배의 핵심 정책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³¹⁾

1920년대 중반 미츠야 미야마츠(三矢宮松) 경무국장과 사이토 총독의 자문인 아베 미츠이에(阿部充家) 라인에서 추진한 것은 자치제 정책이 아니라 자치제를 매개로 조선의 민족주의 세력과 민족운동을 분열시키려는 자치공작적 성격이 지배적이었다.³²⁾ 1927년 초에 사이토 총독은 총독부 관료들을 배제

31) 윤덕영, 2010, 「1920년대 중반 일본 정계변화와 조선총독부 자치정책의 한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 168~187쪽.

32) 윤덕영, 2010, 「1920년대 중반 민족주의 세력의 정세인식과 합법적 정치운동의 전망」, 『한국근현대사연구』, 53,

한 채 비밀리에 참정권안과 조선지방의회안을 만들지만, 이는 일본 지방행정제도의 성격을 갖는 조선지방의회안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이었고, 그 초차도 본국 정부와 제대로 협의도 못한채 사문화 되어 버리고 만다.³³⁾ 1929년 사이토가 조선총독으로 재부임하면서 조선총독부 관료들과 함께 조선지방의회안을 만들지만, 그 초안에서부터 결론안에 이르기까지 1927년에 마련한 ‘참여의견’보다도 대폭 후퇴된 구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보수 세력의 반대에 부딪치자, 곧 바로 포기하고 지방제도 개정에만 합의하면서 도부면회의 대단히 제한된 권한만을 갖는 의결기관화라는 일제 말단 행정제도 개선책으로 결론나고 말았다.³⁴⁾

다음으로 1920~30년대 타협적 자치운동을 전개한 주체가 누구였는가 하는 점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일제는 제국을 통치하는데 있어 본국인 내지와 식민지인 외지를 정치적으로 차별하였다. 때문에 거의 70여 만에 달한 재조 일본인들의 상당수는 참정권, 곧 중의원 선거권 및 귀족원 선임권을 요구하거나, 식민지 조선에 자치의회를 설립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때문에 1920년대 조선에는 내정독립론, 즉 조선 자치를 주장하는 친일정치세력이 정치적 실체로서 현존하고 있었다. 3·1운동 직후 유민회, 1922년 동광회와 내정독립기성회 등이 내정독립과 자치운동을 주장하며 활동하였다. 또한 1924년 6월 결성된 갑자구락부(甲子俱樂部)도 참정권운동과 자치제 운동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다.³⁵⁾ 중요한 것은 이들이 민족주의 세력이 아닌 재조 일본인과 친일파 한국인들로 구성된 친일 정치세력이라는 점이다. 송진우는 타협적 자치를 주장하는 이런 친일 정치세력과 가장 대립하고 있었다. 1924년 3월 25일 재경 11개 친일 단체가 연합하여 ‘각과유지연맹’을 결성하였는데, 동아일보는 각과유지연맹에 대한 비판에 가장 앞장섰다.³⁶⁾ 이에 각과유지연맹의 친일세력들은 폭력으로 대응하였다. 1924년 4월 2일 친일파 박춘금은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와 대주주 김성수를 식도원으로 불러 집단 폭행을 가하고 권총으로 위협하는 ‘식도원 육혈포 협박사건’을 일으켰다.³⁷⁾ 그리고 이런 친일파들의 행동은 조선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다.

한편 1922년 영국의 아일랜드 신페인당 주도의 아일랜드 자유국 수립, 1924년 3월 일본 보통선거 실시를 위한 중의원 선거법 개정안 통과, 1925년 8월 헌정회 단독내각 수립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 정계에서 특권 및 군부세력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서구의 의회민주정치와는 큰 차이를 가지기는 하지만 정당정치가 진행되었다. 일본에서는 보통선거 실시를 겨냥하여 합법적 정치운동론이 확산되었고, 다양한 성격을 갖는 무산정당이 결성되었다. 그와 동시에 식민지 조선에서도 일본과 중국의 정계 변화를 기대하며 합법적 정치운동론이 민족주의는 물론 사회주의 세력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었다. 이는 1920년대 초반 ‘민족적 중심세력 형성’론³⁸⁾ 1920년대 중반 ‘민족적 중심단체’건설 주장³⁹⁾으로 나타났는데, 송진우는 이런 논의에 주도적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적 정치단체, 곧 합법적 민족운동 단체 건설 주장은 1926년 7월 중국 국민당 정부의 북벌을 계기로 하여 구체적인 조직 결성으로 진행되게 된다. 송진우를 중심으로 한 언론계, 천도교와 기독교계의 주요 인물들이 단체의 발기준비위원회 결성 모임을 갖는 것까지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우파 민족주의 세력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고, 좌우파를

97~104쪽.

33) 윤덕영, 2010, 「1920년대 중반 일본 정계변화와 조선총독부 자치정책의 한계」, 187~195쪽.

34) 윤덕영, 2011, 「1930년 전후 조선총독부 자치정책의 한계와 동아일보 계열의 비판」, 『대동문화연구』 73, 354~376쪽.

35) 이태훈, 2010, 「일제하 친일정치운동연구」,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18~143쪽, 183~188쪽, 206~232쪽.

36) 「所謂 各派有志聯盟에 對하여」, 『동아일보』 1924. 3. 30; 「官民野合의 漁利運動」, 『동아일보』 1924. 4. 2.

37)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1990, 『고하 송진우 전기』, 동아일보사, 231~243쪽; 인촌기념회 편, 1976, 『인촌 김성수전』, 268~278쪽.

38) 윤덕영, 2010, 「1920년대 전반 동아일보 계열의 정치운동 구상과 ‘민족적 중심세력론」, 『역사문제연구』 24, 15~42쪽.

39) 윤덕영, 2010, 「1920년대 중반 민족주의 세력의 정세인식과 합법적 정치운동의 전망」, 『한국근현대사연구』 53, 82~108쪽.

망라한 민족주의 세력의 전반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한 것이었다. 민족주의자들은 이런 활동을 자치운동의 시도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더불어 한위건과 김준연 같은 조선공산당의 인물들도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 세력 내부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 내부에서 각기 서로 다른 별도의 대립이 일어났고, 이런 대립이 중첩되면서 민족운동 단체를 결성하기 위한 활동은 결렬되었다.⁴⁰⁾ 이런 우연곡절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1927년 2월 신간회 결성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⁴¹⁾

신간회운동은 거시적으로 보면 서구와 일본에서의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의회적 정당정치 정찰과정에서 나타난 근대 민주주의 정치질서 수립운동, 합법적 대중정치운동의 전 세계적 확산과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합법적 대중정치운동의 전개가 서구와 일본에서는 정당형태로, 중국에서는 국공 합작을 통한 단일당 형태로 나타났지만, 식민지 조선의 경우는 국외에서는 민족유일당운동으로, 국내에서는 단일한 대중정치단체인 신간회 결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신간회는 비타협주의와 기회주의 배격을 표방했지만, 그 형식은 일제의 승인을 받는 합법적 운동단체로서 조직되었고, 이를 고수하였다.⁴²⁾ 송진우는 당시 일제에 의해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간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1927년 하반기 들어 국내의 정세가 변화하자, 신간회 내외의 민족주의 세력들은 거의 동시에 ‘민족적 총역량 집중’을 주장하면서 신간회에 집결하기 시작하는데, 송진우도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평양의 조만식과 함께 이때 신간회에 참여한다.⁴³⁾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송진우는 합법적 조직 결성에만 머물렀고, 국외운동과 연결하여 비합법적인 민족운동 조직을 결성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민족운동가로서 한계도 가지고 있었다.

5. 민족운동의 지형과 민족운동사에서의 위상

송진우가 한국 민족운동사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자. 일찍이 일본 유학시절부터 그는 당시 제일 유학생 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제일 유학생들의 모임인 학우회가 결성되는 과정 및 학우회의 기관지로서 1910년대 역사와 민족운동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인 『학지광』을 창간하고 초기 논지를 이끌어 갔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송진우와 김병로였다.⁴⁴⁾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는 송진우와는 일본 유학시절부터 시작해서 일제 말기까지, 그리고 해방 후까지도 자타가 공인하는 오랜 동지이자 아주 밀접한 사이였다.⁴⁵⁾

40) 윤덕영, 2010, 「1926년 민족주의 세력의 정세 인식과 ‘민족적 중심단체’ 결성 모색 -소위 ‘연정회’ 부활 계획에 대한 재해석-」 『동방학지』 152, 270~285쪽.

41) 윤덕영, 2011, 「신간회 창립 주도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의 정치 지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8, 100~117쪽.

42) 윤덕영, 2010, 「신간회 창립과 합법적 정치운동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5, 133~153쪽.

43) 윤덕영, 2011, 「신간회 초기 민족주의 세력의 정세인식과 ‘민족적 총역량 집중’론의 제기」 『한국근현대사연구』 56, 64~72쪽.

44) 송진우는 1915년까지의 일본유학생 졸업자 5백여 명중 대학본과를 졸업한 단 9명에 해당될 뿐 아니라, 제일유학생 사회에서 리더적 역할을 수행했다. [「일본유학생사」, 『학지광』 총6호, 12쪽]. 한편 김병로는 『학지광』 1호와 2호의 편집 겸 발행인이었는데, 송진우는 「도덕론」이라는 두드러진 장편논문을 실었다고 한다. [김병로, 「방랑, 교수, 변호사」, 『삼천리』 1-2, 1929년 9월, 34쪽]. 황석우는 초기 『학지광』이 송진우의 개인잡지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황석우, 「半島에 幾多人材를 내인 英·美·露·日 留學史-東京 留學生과 그 活躍-」, 『삼천리』, 5-1, 1933년 1월, 25쪽].

45) 김병로는 공자와 율곡 정도만 존경할 역사적 인물로 보는 등 사람 평가에 대단히 인색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송진우에 대해서만은 예외였다. 김병로는 1935년 조선 민중의 지도자를 뽑는 『삼천리』의 「조선 민중의 지도자 총관」에서 민중의 지도자로 송진우를 내세우는 글을 직접 쓸 정도로 송진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었다(김병로, 「언론계의 至寶 송진우」, 『삼천리』 7-3, 1935년 3월호). 이들의 관계는 해방 후 송진우가 암살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김병로는 1960년 10월 8일자 『동아일보』와의 회견에서 「古下(송진우)가 간 뒤엔 사람이 없어」라고 회고할 정도로 남다른 평가를 했다(「5분간 스캐췌: 金炳魯翁」, 『동아일보』 1960. 10. 8). 심지어 김병로는 우리 ‘역사의 인물’로 율곡과 고하 송진우 두 사람을 꼽을 정도였다(김진배, 1983, 『가인 김병로』, 가인기념회, 452쪽). 김병로는 1964년 1월 13일 죽었는데, 그 며칠 전부터 그는 부모와 함께 유일하게 고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되불렀다고 한다(김진배,

1919년 3·1운동 당시 송진우는 중앙학교 교장으로로서 3·1운동의 계획과 조직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최린, 이승훈, 현상윤 등과 함께 모의과정과 초기 확산을 사실상 주도하였고, 그가 교장인 중앙학교는 3·1운동의 모의와 확산의 주요 연락처이자 거점이었다. 그는 민족대표 33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48인으로 옥살이를 하게 된다. 그는 3·1운동을 주도한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⁴⁶⁾

일제하 민족운동 세력은 일제가 강점기 내내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정당을 결성할 수가 없었다. 때문에 일제하 민족주의 세력은 사회주의 세력과는 달리 대체로 종교계와 언론계 등을 기반으로 세력을 형성하였다. 기독교 계열에는 기호지역 기독교세력이 있었는데,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동지회·홍업구락부가 대표적 조직이었다. 또한 서북지역 기독교세력이 있었는데, 안창호를 중심으로 하는 흥사단·수양동우회 및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대표적이었다. 천도교계열에는 우선 최린을 중심으로 천도교청년당과 조선농민사를 기반으로 주로 평양 남북도와 함경남도 지방에 주요 근거를 두고 있는 1920년대 최대 민족운동세력인 신파가 있었다. 다음으로 천도교청년동맹을 기반으로 남한지방에 주요 근거를 두고 있는 권동진, 오세창, 이종린 등으로 대표되는 소수 세력인 구파가 있었다. 국외 민족주의운동 세력으로는 다양한 조직 분화 및 재편 과정을 거치지만 최종적으로 한국국민당과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이 1939년 통합하여 결성한 한국독립당이 대표적으로, 김구와 조소앙이 중심인물 이었다.

이들과 더불어 민족주의 세력의 일익을 담당한 것이 언론계 세력이었다. 이들 세력으로는 동아일보와 중앙학교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여기에 호남지역 정치세력이 결합하면서 유력한 민족주의 정치세력으로 형성된 동아일보 계열이 대표적인데, 송진우가 핵심적 인물로 김성수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신간회 창립을 주도하였던 조선일보 계열은 특정 주도적 인물을 중심으로 결집된 단일한 세력이 아니며, 서로 계열을 달리하는 몇 개의 세력이 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을 뿐 아니라, 독자적 지역적 기반도 갖지 못하였고, 단일한 정치세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곧 소멸하고 말았다.⁴⁷⁾

송진우는 1921년 9월 그가 동아일보에 관여할 때부터 1937년 6월 이전까지, 내외의 역풍으로 인해 다양한 직책을 가지고 동아일보를 운영하였지만,⁴⁸⁾ 동아일보의 모든 경영활동과 편집활동을 사실상 관장하였다. 김성수가 동아일보의 사주로서, 또한 1924년 10월부터 1927년 10월까지의 직접 사장으로서 동아일보 경영에 일정하게 관여했지만, 동아일보는 기본적으로 송진우의 권한 하에 있었다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 인식이었다.⁴⁹⁾ 물론 1924년 4월까지의 이상협과 편집권을 나누고 있었고, 1924년 4월부터 1925년 4월까지 1년 동안은 동아일보에 경영과 편집 일선에서 물러난 적도 있었지만, 1920년대 중반부터는 편집에 이르기까지 신문의 거의 모든 내용을 관장했다. 송진우는 직접 사설을 쓰기도 하면서 ‘신문독재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동아일보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⁵⁰⁾ 또한 신문 사설에 관여했던

1983, 앞의 책, 453쪽).

46) 송진우의 3·1운동의 인식과 평가에 대해서는 윤덕영, 2010, 「1920년대 전반 민족주의 세력의 민족운동 방향 모색과 그 성격」, 『사학연구』 98, 365~369쪽 참조. 그의 1926년 두 번째 구속도 3·1운동과 관련된 것이었다.

47) 일제하 국내 민족주의 세력의 정치지형에 대해 자세한 것은 윤덕영, 2011, 「신간회 창립 주도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의 정치 지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8, 참조.

48) 송진우는 1921년 9월부터 1924년 4월까지 사장으로, 1924년 10월부터 1925년 4월까지의 고문으로, 1925년 4월부터 1927년 10월까지의 주필로, 그리고 1927년 10월부터 1936년 11월까지의 사장으로 동아일보를 운영하였고, 1940년 8월 동아일보가 폐간되자 청산위원장 및 사후 건물관리회사인 동본사 사장을 맡았다. 동아일보사, 1975, 『동아일보사사』 1권, 동아일보사, 411~413쪽.

49) 수양동우회의 인물로 동아일보의 편집국장을 역임했던 이광수는 “동아일보는 말할 것도 없이 사장 송진우의 전권이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하였다. 이광수, 「人物月旦, 金性洙論」, 『동광』 25, 1931년 9월호.

50) 송진우는 신문경영에서 뿐만 아니라 1920년대 중반부터는 동아일보의 논조와 기사의 방향, 활동 등 모든 면을 관장했다. 그래서 신문독재자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사내에 모든 명류기자를 억압하고 儼然 독재자로 자임한다 하야

김준연, 박찬희, 설의식, 장덕수, 함상훈, 김양수, 최원순 등과 주요 논객이었던 이순탁, 정인보 등 사이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있었다. 그 때문에 동아일보에 다양한 계열의 인물들과 심지어 다수의 사회주의 기자들이 거쳐 갔고, 이들에 의해 다양한 논설이 쓰여졌지만, 동아일보의 입장을 반영하는 주요 사설과 논설들은 대체로 비슷한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일제하 동아일보는 일반 보도만 하는 신문이 아니었다. 창간 시 사시로서 ‘민족의 표현기관임을 자임한다’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처럼, 송진우를 중심으로 한 동아일보 계열과 호남 정치세력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지인 동시에 민족운동의 주요 의제와 방향을 이끌어가는 민족운동의 주도지였다.

그렇지만 1936년 8월 손기정 일장기말소사건을 계기로 무기정간에 처해졌던 동아일보는 총독부의 폐간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송진우를 비롯한 13명의 간부와 사원의 퇴진, 총 18개항에 이르는 강력한 언론통제장치인 「언문신문지면쇄신요항」을 받아들이면서 1937년 6월에야 다시 속간되게 된다. 그리고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되면서부터 동아일보는 일제에 굴종하는 오욕의 역사를 남기게 된다.⁵¹⁾ 당시 송진우는 동아일보의 고문으로 위촉되었지만 예전과 달리 신문 경영이나 신문 내용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정치·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⁵²⁾ 국내외 정세 동향에 대단히 민감하고 정세 파악이 빠른 그는 아마 중일전쟁이 발발하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동아일보가 민족운동의 표현기관으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또한 신문사를 운영하는 한 친일적 행위는 불가피할 지도 모른다는 것을 감지했을 수도 있다. 아무튼 송진우는 정간 해제 이후 신문사 경영 일선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이는 일제 총독부가 원하는 바이기도 했다. 일제 하 민족주의 세력도 안창호를 비롯한 지도적 인사들이 민족운동과정에서 돌아가시고, 다수 인물들이 일제 말기 친일로 돌아서면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송진우와 김병로, 정인보 등 그 주변 인물들은 지조를 지키면서 해방을 맞이하였다.

송진우는 조선을 대표하는 ‘政客’으로 자주 묘사될 만큼 대단히 정치적인 인물이면서도, 일제 하 민족운동에서도 뚜렷한 정치적 입지와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이런 그의 정치적 능력은 광복 직후에 바로 빛을 발하게 된다. 송진우는 한국민주당의 결성과 초기 활동에 수석총무로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초기 한민당은 지역적·분파적 대립으로 화합하지 못했던 일제하 주요 민족주의 세력의 대부분이 망라되고, 심지어 사회주의운동에서 활동하던 사회주의 우파세력도 상당수 가담한 강력한 정당으로 출범하였다.⁵³⁾ 또한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지론을 앞장서서 확산시키면서 좌익의 국가건설 운동에 대항해서 임정을 중심으로 한 과도정부 수립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국민대회준비회를 조직하여 장차 수립될 신국가 의회 조직의 모태를 준비하려고 했다.⁵⁴⁾ 1945년 12월에 이르러서는 임정세력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광범한 정계 개편운동을 전개하면서 신정부 수립을 앞장서서 추진하였다.⁵⁵⁾ 송진우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었지만, 광복 직후 국내 민족주의 세력의 인물 중에 송진우에 견줄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당시 정치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논해졌고, 해외에서 귀국한 이승만과 김구에 필적할만한 지도자로 부각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한반도에 신탁통치를 둘러싼 광풍이 몰아치면서 송진우는 눈을 감게 되었다. 그의 사후에 우익 3당의 합동운동, 남조선과도입

다소 불평의 소리도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씨의 자아에 강한 성격은 사내사외로 어떠한 말이 있든지 자기의 소신하는 바를 향하여 돌진”하였다고 한다. 유광렬, 「신문독재자 송진우론」, 『삼천리』 4-9, 1932년 9월호.

51) 윤덕영, 2012, 「1930년대 동아일보 계열의 정세인식 변화와 배경-체제비판에서 체제굴종으로-」, 『사학연구』 108, 235~249쪽.

52) 「송진우씨는 무엇하고 계신가 - 前新聞社長の 그 뒤 消息(其二)」, 『삼천리』 10-5, 1938년 5월호.

53) 윤덕영, 2011, 「1945년 한국민주당 초기 조직의 성격과 주한미군정 활용」, 『역사와현실』 80, 252~269쪽.

54) 윤덕영, 2011, 「송진우-한국민주당의 과도정부 구상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지론」, 『한국사학보』 42, 265~277쪽.

55) 윤덕영, 2014, 「미군정 초기 정치 대립과 갈등 구조의 중층성-1945년 말 한국민주당 주도세력의 정계 개편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65, 268~293쪽.

법의원 설립과 과도정부 수립, 제헌헌법과 대한민국의 탄생 등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었지만, 그 원형은 이미 1945년 송진우의 활동에서 다수 나타나고 있었다.

6. 맺음말

본고에서는 고하 송진우의 근대국가 사상의 기반으로 우선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의 서구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 사상의 동향 특히 영국의 신자유주의 경향과 일본의 다이쇼 테모크라시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던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서화론으로 상징되는 서구의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사상의 일방적 수용을 비판하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사상적 문화적 전통과 역사를 확립하는 것을 통해 민족주의 세력 주도의 자립적 근대국가건설 운동의 사상적 이념적 기반을 마련하려 했던 그의 활동을 해명하였다. 그는 조선 고유의 문화와 사상을 제고함으로써 근대 서구의 민주주의 사상과 ‘조선적인 것’의 결합을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한국 근대국가 건설의 독자적 사상 기반과 이념을 만들려 했다. 그의 이런 활동은 공산주의 세력 주도의 국가건설운동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했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을 일본 국방상안보상 사활적 위치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1920년대 정당정치 시대에도 조선에서 자치제 실시를 사실상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일본에 보통선거법이 통과되고 헌정회가 집권하며, 무산정당이 등장하는 등 일본 정계가 변화하면서, 일본과 중국의 정세 변화를 기대하면서 합법적 정치운동론이 민족주의 세력은 물론 사회주의 세력에게까지 확산되었다. 그리고 1926년 중국국민당의 북벌을 계기로 민족적 정치단체, 곧 비타협적이지만 합법적인 민족운동 단체 결성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는 결국 신간회 결성으로 귀결되었다. 송진우는 신간회 이전까지는 이런 활동의 중심에서 있었지만, 일제에 의해 구속된 관계로 신간회 결성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흐름은 거시적으로 보면 서구와 일본에서의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의회적 정당정치의 정착과정에서 나타난 근대 민주주의 정치질서 수립운동, 합법적 대중정치운동의 전 세계적 확산과정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이를 선도한 것이 송진우였다.

이와 관련하여 송진우의 사상과 활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동아시아의 정치 사회 및 사상적 변화, 더 나아가 세계 정치 사회 변화를 함께 파악하면서 동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또는 1950~60년대에 들어서야 한국에서 제대로 된 서구 사상 및 학문의 수용과 정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50~60년대 전개된 많은 논의들이 비록 낮은 수준이고 그 내용도 극히 제한되었지만 서구나 일본과 비슷하게 이미 20~30년대부터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민지 조선의 민족 엘리트, 지식인들은 유학과 고등 교육을 통해 당대 서구와 일본의 학문과 사상을 공유하거나 또는 비판하였다. 그들의 시야는 한반도에 머무르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변동으로, 더 나아가 세계로 확대되어 있었다. 1920년대 중반이후 조선어 각 신문, 특히 송진우가 주도하는 동아일보의 1면이 지속적으로 국제면 기사와 논설로 채워지는 것은 좌우를 막론하고 조선의 민족 엘리트들과 민족운동세력이 동아시아 정세와 세계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를 자신들의 활동과 연계시키고 있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일제 강점하 전개된 민족운동들은 일본과 중국의 정치 및 사회변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20세기 전반 한국과 중국, 일본의 지식인들과 엘리트, 정치세력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지금 생각과는 다르게 상당히 국제적이었고, 상당히 폭넓은 이념적 기반을 가지면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그 수준도 서구 지식인에 비해 결코 낮지 않았고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구 사상과 문명을 섭렵하면서도 동시에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의 문화와 사상이

동아시아 근대사회로의 이행 및 근대 민족국가 건설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작용해야 할지를 고민하였다. 송진우는 이점에서 누구보다 앞선 생각을 하는 인물이었다. 때문에 그를 현재의 이분법적 또는 현재 기준의 편협한 잣대로 파악하는 것은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윤덕영 :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

한국사학회 이사 역임, 국사편찬위원회 연구편찬실장 역임.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원.

고하 송진우의 독립 방략에 대한 고찰¹⁾

이철순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 머리말

고하 송진우는 가인 김병로, 애산 이인과 더불어 일제 말기까지 국내에서 변절하거나 일제에 협력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정통 민족주의 우파세력의 뛰어난 지도자로 일단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고하가 처한 현실적 조건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투쟁한 지도자들도 높이 평가해야 하겠지만 그 자체가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의 악조건 속에서 변절하지 않고 자신의 지조를 지켰다는 점에서 고하를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고하는 주지하다시피 한말 위정척사파 계열의 성리학자인 기삼연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그의 부친인 송훈의 영향으로 구한말의 자강론에 근거한 실력양성론에 자신의 사상을 귀착시켰고 이에 기반하여 중앙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운동, 민립대학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 대중계몽운동 등을 실행했다. 고하의 실력양성론은 국내의 합법적인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국내의 현실적인 권력이었던 총독부와 타협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의 작은 틈새에서나마 최선의 방책을 추구하려고 했던 유연하고 합리적이며 융통성 있는 정치적 현실주의자였다. 또한 그는 무모한 명분에 치우쳐 일을 그르친 적이 거의 없었던 신중한 지도자이기도 하였다. 그는 식민지시대에는 엄혹한 일제의 권력과 직접 대면하고 해방 이후에는 외세가 진주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처해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세 판단을 해야 했고, 그의 예리한 정세판단은 대부분 적중했다.

이 글에서는 고하가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어떤 방략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떻게 그 방략을 실천하고자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고하가 그러한 방략을 갖게 된 사상적 배경도 먼저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사상 형성 과정

1) 일본 유학 이전의 고하의 사상 형성

고하의 인격과 초기 사상형성 과정에 처음으로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성리학자 기삼연(奇三衍)이었다. 고하는 7세 때부터 6년여에 걸쳐 기삼연으로부터 수학하였는데 이때 그의 민족의식과 구국의식이 싹트게 되었다.²⁾ 그러나 그의 사상형성과 관

1) 이 글은 초고이므로 인용하실 경우 저자의 동의를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스승 기삼연의 고하에 대한 영향에 관해서는 동아일보사, 『고하 송진우 전기: 독립을 향한 집념』

련된 기삼연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기삼연과 관련된 고하의 행적은 사상의 측면이 아니라 인성과 기질과 관련된 것으로서 기삼연의 위정척사사상은 고하에게 전수되지 않았다.

유교사상에서 벗어난 고하는 부친 훈(薰)으로부터 한말 이래의 자강운동의 세례를 받게 된다. 부친의 신학문 권유를 받아들인 고하는 만 16세 되던 해인 1906년 4월, 고정주가 설립한 창평의 영학숙(英學塾)에 들어가 신학문을 경험한다. 이어서 그는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등을 구독³⁾하면서 한말 이래의 실력양성론과 자강운동론에 접하게 되었다. 당시 장지연, 박은식 등 유교개혁론의 입장에서 있던 『황성신문』 계열의 자강론은 국권 상실의 원인을 우리 내부의 실력부족에서 찾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양성하고, 점진적인 문명개화를 이룰 것을 주장했다.⁴⁾ 이러한 논지는 아직 유교 사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고하에게 수용되기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고하는 자강론자들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거나 사상을 습득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 유학을 결심하고, 1908년 10월 만 18세의 나이에 김성수와 함께 일본 유학을 결행했다.⁵⁾

2) 일본 유학 시절의 경험: 민주주의 사상의 형성

1909년 4월 김성수와 함께 와세다 대학 예과에 입학한 고하는 1910년 8월 일제의 한국강점 소식을 듣고 며칠씩 통곡으로 밤을 지새웠다. 고하는 통탄함을 이기지 못하고 귀국한 후 방황하다 부친 훈으로부터 새로운 용기를 얻어 1911년 봄 다시 도일하여 메이지 대학 법학부로 옮기게 되었다.

그가 유학중이던 1911년에서 1915년 사이는 일본 근대사에서 정치적 격변기였다. 메이지 천황이 죽고 다이쇼 천황이 즉위하면서 ‘다이쇼 정변’ 또는 제1차 헌정운동이라 불리는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주도 아래 민주적 정당정치를 수립하려는 국민적 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였다. 고하는 또한 유학 과정 중에 일본의 특권지배층의 균열과 자유민주주의 정치세력의 등장, 상호 대립과 투쟁, 타협의 과정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각종 언론과 대중집회를 주도하던 일본 헌정옹호회 계열의 정당인·언론인들의 보수적 민주주의 사상과 정치적 지향, 정치적 행동 양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런 경험이 고하의 사상 형성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⁶⁾ 한편 고하가 유학하던 당시 일본의 지성계는 영국의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 사상의 영향 하에 있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에 제한을 가해 부의

(서울: 동아일보사, 1990), 39-45쪽 참조.

3) 동아일보사, 『인촌 김성수』 (서울: 동아일보사, 1986), 48-49쪽; 동아일보사, 『고하 송진우 전기: 독립을 향한 집념』 (서울: 동아일보사, 1990), 50쪽.

4)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2), 69-82쪽.

5) 동아일보사, 『고하 송진우 전기: 독립을 향한 집념』 (서울: 동아일보사, 1990), 61쪽.

6) 윤덕영, “고하 송진우의 생애와 활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현대사인물연구2』 (서울: 백산서당, 1999), 109-112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배를 지향하며 국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사회 개혁적 사상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조화와 공동선을 추구하고 급격한 혁명적 변혁 대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민주적 제도 내에서 해결하려는 점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이념이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논설이 고하가 1925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발표한 “자유권과 생존권”이었다.⁷⁾

3) 『학지광(學之光)』에 발표된 “사상개혁론”

또 한편 일본에서의 유학 경험이 잘 드러나는 논설이 “사상개혁론”이라는 논설이었다. 고하는 1915년 5월 재일유학생 기관지 『학지광(學之光)』에 발표된 “사상개혁론”에서 다섯 가지 분야에서 사상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孔敎打破와 國粹發揮’였다. 둘째는 ‘가족제의 타파와 개인 자립’, 셋째는 ‘강제연애의 타파와 자유연애의 고취’였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허영교육의 타파와 실리교육’, ‘常識실업의 타파와 과학실업의 환흥’이었다. 고하는 이 글에서 유교사상과 허영적 사조의 타파, 개인에 대한 강조를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개인을 중심하여 유동하는 통상시대는 현재에 도래하였”다고 보았으며, 실리교육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현대는 실리문명이니 영웅은 단체로 유출(幼出)되고 정치는 생활로 변형되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과학실업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과학실업은 적극적으로 과학을 활용하여 발전을 이루는 생활유지의 방편이며 산업발전의 터전이 된다고 주장했다.

고하는 이 다섯 가지의 사상이 개혁되지 않으면, 사회는 남에게 의존하려는 풍조가 만연하며 민족은 자립의 길을 구하지 않게 되어 요행, 운수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⁸⁾ 전반적으로 이 글을 통해 고하가 실리, 과학, 개인, 통상 등을 강조하면서 실력양성 운동으로 나갈 것을 암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한말 이래의 자강론적 실력양성론과 일정부분 연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3·1운동 참여와 교훈: 강력한 정치적 구심체의 필요성

고하는 일본 유학을 마치고 1915년 7월 귀국한 후 김성수가 인수한 중앙학교의 학감으로 취임하면서 교육계에 발을 들여 놓게 된다. 고하는 중앙학교에 재직하면서 구습의 타파와 신교육과 실력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족의식·민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사회의 민족의식 고양을 위해 단군, 세종대왕, 이순신 3성을 받드는 삼성사건립기성회를 1917년경 조직하고 경향각지

7)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윤덕영, “1920년대 전반 민족주의 세력의 민족운동 방향 모색과 그 성격: 동아일보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제 98호, 2010년, 349-364 쪽.

8) 송진우, “사상개혁론,” 『거인의 숨결: 고하송진우관계자료문집』 (서울: 동아일보사, 1990), 14-22 쪽.

에서 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일본에서 귀국한 이후 3·1운동까지의 고하의 활동은 구관습·구사상을 개혁하고 실력을 양성하여 독립의 기회를 기다린다는 종래의 실력양성론과 기회론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1919년 3·1운동 당시 만 29세였던 고하는 중앙학교 교장으로서 김성수, 현상윤, 최린, 최남선 등과 함께 3·1운동 준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그는 비록 독립선언서의 33인 민족대표로서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의 3·1운동의 핵심적인 인물이며 민족대표 48인 중의 한 명이었다. 3·1운동의 경험이 그에게 미친 영향은 1925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논설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에 잘 나타나 있다.

고하는 우선 3·1운동을 4천 년 간 지속되어 온 동양적 생활양식을 정신적·문화적·정치적·근본적·민중적으로 파괴·건설하려는 내재적 생명의 폭발로 보았다. 또한 3·1운동을 새로운 축으로 하여 우리 민족이 교육적 각성과 경제적 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3·1운동 이후 민족운동이 “그 내용을 일변하여 경제적 의식, 곧 생활의 토대 위에서 그 근거를 발견하게 된 것은 일대 진보”라고 평가했다.⁹⁾ 그는 3·1운동을 통해 구습타파에 의한 민족적 자각과 실력양성이라는 기존의 운동노선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고하는 3·1운동을 통해 대중을 지도하고 운동을 통일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조직 부재의 한계에 대해 절감했다. 그는 1924년 4월 1일 『개벽』에 발표한 논설에서 3·1운동에 대해 “선전이 부족한 것도 아니며 사상이 박약한 것도 아니건마는 최후의 공을 주(奏)치 못한 것은 물론 대세의 관계도 불무(不無)할 것이나 이 운동을 통일·계속할 만한 중심적 단결력이 부족했든 것이 불경(不輕)할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모든 주의가 사상의 실현에 토대가 되고 근거가 될 만한 ‘힘’, 곧 단결력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¹⁰⁾ 이러한 평가는 그가 독립기회의 필수조건으로 대중을 자각시키고 동원하며, 운동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중심적 단결력’, 강력한 정치적 구심체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이러한 그의 인식은 1920년대 『동아일보』를 통한 ‘민족적 중심세력의 결집’이라는 주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3. 『동아일보』와 실력양성운동

9) 송진우,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 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편, 『거인의 숨결: 고하송진우관계자료문집』 (서울: 동아일보사, 1990), 33-38쪽.

10) 송진우, “무엇보다도 ‘힘’(최근의 감),” 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편, 『거인의 숨결: 고하송진우관계자료문집』 (서울: 동아일보사, 1990), 27-28쪽.

11) 고하는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에서 다음과 같이 중심세력의 확립을 강조했다. “吾人은 외세의 과동보다 타인의 원조보다 중심세력의 확립과 자체세력의 해결을 절규·역설하는 바이다. 요컨대 조선문제는 민족자체의 단합이 확립하는 그날부터 해결될 것을 확인하는 바이다.” 송진우,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 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편, 『거인의 숨결: 고하송진우관계자료문집』 (서울: 동아일보사, 1990), 49쪽.

3·1 운동 이후 1년 반 동안의 옥고를 치르고 고향에서 휴식을 취한 고하는 1921년 4월 하순 서울로 상경해 1920년 4월 창간된 『동아일보』에 투신했다. 그는 『동아일보』가 폐간될 때까지 사장, 주필, 취체역, 고문 등으로 계속 재직하면서 『동아일보』를 사실상 주도하였다.

『동아일보』투신 직후 고하는 1921년 7월 30일에 결성된 ‘조선인산업대회’에 깊이 관여했다. 이 조직은 1921년 9월, 총독부가 한국산업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산업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발표에 대응하여, 조선인 자본가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였다. 고하는 조선인산업대회의 중앙위원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동아일보』의 지면을 활용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여러 기고문을 통해 조선의 산업이 정치,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이 조선과 일본 양국이 공존할 수 있는 방도임을 주장했다. 이것은 정치운동을 위해서는 그 토대로서 경제적 실력양성이 필요하며, 정치와 경제의 결합, 즉 정치운동가와 자본가의 상호 긴밀한 연대를 생각한 고하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¹²⁾

그러나 9월 15일 개최된 총독부 측의 산업조사위원회는 한국 산업정책의 기본방침은 일본제국의 산업정책에 순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총독부의 방침은 한국인 자본가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이에 『동아일보』는 “일본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조선을 지배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철저히 조선을 예속케 하려” 한다고 총독부의 정책을 맹비난하면서 조선의 자본가들에게도 분발할 것을 촉구했다.¹³⁾

이렇게 일본 상품의 침투에 대응해서 조선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시 민족주의자들의 인식은 물산장려운동으로 발전했다. 그 결과 경제적 실력양성운동으로서 1923년 1월 ‘조선물산장려회’가 창립되었고 전국적 광범한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여러 난관에 봉착하면서 1924년에 이르면 거의 활동 중단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동아일보』는 논설과 기사를 통해 물산장려운동을 지원했지만, 정작 고하는 이 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이미 조선인산업대회의 경험을 통해 경제적 실력양성운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알았던 고하는 그러한 실력양성운동이 가능한 조건 창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하는 그러한 조건의 창출은 민족적 중심세력을 결집을 통해 민족운동의 정치적 구심체, 정치단체를 결성하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민족의식을 가진 민족엘리트의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당시 급속히 확산되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과 맞물려 민립대학 설립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고하는 1922년 2월부터 『동아일보』의 지면을 통해 민립대학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동년 11월 23일에 발족한 민립대학기성준비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고하가

12) 윤덕영, “고하 송진우의 생애와 활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현대사인물연구2』 (서울: 백산서당, 1999), 118-119쪽.

13) “산업조사회의 결의안,” 『동아일보』, 1921년 9월 23일.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당시 『동아일보』의 논설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동아일보』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민족적 기치하의 대단결’, ‘민족적 중심세력의 결집’과 무관하지 않았다. 고하는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통해 미래의 민족엘리트를 배출하는 동시에 전국 각지의 민족주의세력의 연결과 결집, 민중들의 민족적 각성과 민족운동의 부흥을 꾀하는 계기로 모색하려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사상의 유입에 따라 분열과정에 있던 민족운동의 사상적 경향을 부르조아민족주의 사상의 주도 아래 통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⁴⁾

그러나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1923년 하반기부터 점차 약화되었고 고하의 계획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하지만 고하는 그 과정에서 확보된 세력과 힘을 바탕으로 그의 구상을 계속 진행시켜 나갔다.

4. 자치론과 고하의 신간회 참여

1) 고하와 자치론

1924년 1월 초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이 『동아일보』에 발표되자 자치론을 둘러싼 민족운동 내부의 논쟁이 뜨거워졌다. 이광수는 논설에서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나 조선 내에서 전민족적인 정치운동을 하도록 신생면(新生面)을 타개할 필요가 있으며”, “조선 내에서 허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우리 당면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둘째, 조선인을 정치적으로 훈련하고 단결하여 민족적 정치적 중심세력을 만들어 이로써 장래 구원(久遠)한 정치운동의 기초를 이루기 위하여”라고 두 가지를 제시했다.¹⁵⁾ 이런 합법적 정치운동을 주장하는 이광수의 논지는 타협적 민족운동, 곧 자치운동으로 일반에게 받아들여져 비판 여론이 일어나게 되었다.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 1924년 1월 29일자 기사에서 해명했지만¹⁶⁾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고, 그 결과 1924년 4월에는 『동아일보』 계열이 총독부 관리와 협의하여 자치운동 단체로서 연정회(研政會)를 구성하려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동아일보』는 다시 해명 기사를 게재했지만¹⁷⁾ 논란의 중심인물로 고하가 거론되고 결국 그는 사장직을 사퇴하고 이사진의 개편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면 당시 고하는 정말로 자치운동을 구상하고 있었을까? 또한 이를 총독부 관리들과 협의하여 그 일환으로 정치조직 결성을 추진했던 것일까? 이광수의 논설이 고하의 사전 허락 하에 발표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1924년 5월 이전 시점에

14) 윤덕영, “고하 송진우의 생애와 활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현대사인물연구2』 (서울: 백산서당, 1999), 120-121쪽.

15) “민족적 경륜(2),” 『동아일보』, 1924년 1월 3일.

16) “정치적 결사와 운동에 대하여,” 『동아일보』, 1924년 1월 29일.

17) “양문제의 진상,” 『동아일보』, 1924년 4월 23일.

서 고하가 총독부와 연계되어 자치론을 주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첫째, 당시 총독부의 정책은 1925년까지는 내지연장주의, 참정권론의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1924년 5월 이전 시점에 일본에서는 번벌세력이 막강했고 정당 정치 추구 세력은 미약했다. 이런 사정 하에서 총독부 관리가 본국정책을 무시하고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유화책인 자치제를 조선의 한국의 민족주의자들과 협의하여 추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고하의 입장에서 볼 때도 자치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대조선정책의 변화, 또한 그 배경으로 일본의 기존 정계구도의 변화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하가 아직도 참정권조차 허락하지 않는 보수적인 일본정부를 상대로 자치제 실시를 목표로 운동을 전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적어도 1924년까지 고하가 자치제를 목표로 운동을 전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의 민족적 대단결, 정치적 중심세력 형성, 유력 민족단체 건설 등의 주장은 3·1운동과 실력양성운동의 경험을 거치면서 형성된 당시 민족주의자들 일반의 정치적 각성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즉, 고하는 ‘생활문제의 최후 결전은 정치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 실력양성을 뒷받침할 정치운동의 전개를 주장했다. 또한 단결된 정치적 구심, 정치조직의 통일적 지도가 부재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3·1운동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적 준비가 절실한 것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국내외 정세변화에 대비한 ‘준비운동으로서의 정치운동’, 정치적 실력양성운동을 모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당시 고하의 행적을 보아도 그런 점을 볼 수 있다. 고하는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정체기에 들어갔음에도 정치적 중심세력을 결성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진행시켜 갔다. 그는 ‘민족의 총문화를 지배하는 정치상의 유력한 발언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를 위한 중심세력의 형성을 주장했다. 그는 1923년 가을부터 최린, 김성수, 신석우 등과 여러 차례 회합하여 ‘유력한 민족단체’ 결성을 협의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924년 1월 중순에는 천도교의 최린, 이종린, 『동아일보』의 김성수, 기독교의 이승훈, 평양의 조만식, 대구의 서상일, 그 외 신석우, 안재홍 등 16,17명의 모임을 주선하여 정치결사의 조직문제를 협의했다. 하지만 당시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자치운동에 대한 경계로 이 회합은 아무 소득이 없었다.

고하는 1924년 10월에는 『동아일보』의 고문으로, 1925년 4월에는 주필이 되어 다시 『동아일보』를 이끌게 되었다. 그는 1925년 7월 1일 하와이에서 개최된 범태평양회의에 참석하고 8월에 귀국한 이후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라는 장편의 논설을 『동아일보』에 연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당시의 국제정세를 예리하게 진단하면서 조선의 문제는 자주적 행동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외세의 파동보다, 타력의 원조보다 중심세력의 확립과 자체 세력의 해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첫째, 복잡한 우리 사상계를 통일·정리해야 하며, 둘째 정리·통일된 사상 하에서 중심적 단결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⁸⁾

이런 그의 주장은 그가 이전까지 견지하고 있던 정치적 민족중심단체 결성을 국제 정세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하의 외유를 전후하여 일제 총독부 지배정책에 일정한 변화가 일어났다. 총독부는 장기적으로 자치제를 실시하되 단기적으로는 한국인들의 자치운동을 일으켜 민족운동을 분열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당시 『경성일보』 사장 소에지마와 사이토 총독의 정치참모인 아베, 일본 중의원 의원 이노우에 등이 『동아일보』를 비롯해 수양동우회, 최린의 천도교 신과 인사들을 접촉하면서 자치제 실시를 은밀히 협의했다. 이에 따라 연정회 부활운동으로 알려진 자치운동이 본격적으로 대두하였다. 최린 등은 1926년 10월 들어 자치운동단체 발기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비타협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반대 속에 사실상 무산되었다.

총독부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당시 일본 정계의 변화를 보면서 고하는 조선에서도 자치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일본에서는 1925년 3월 가토 내각이 보통선거법을 통과시켰고, 1925년 8월에는 헌정회 단독내각이 출범하여 시데 외상이 영미협조, 중국내정 불간섭을 표방하면서 유화적 외교정책을 전개했다. 1926년 1월에는 일본 정계인사들이 중앙조선협회를 결성하고 총독부의 자치론을 지원했다. 소수내각인 헌정회는 1926년 6월 들어 의회해산과 보통선거법에 의거한 총선거 실시를 추진했고, 보통선거법 실시에 대응하여 급속히 확산된 일본 내 무산정당 단체들은 즉각적 총선거를 주장하고 나섰다.

고하는 일본의 보통선거 실시 후 일본이 “적로(赤露) 사회주의적 색채가 농후하여질 것인가, 혹은 미국의 자본주의가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¹⁹⁾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양자 어느 경우에도 조선의 자치제 실시에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보통선거의 연기라든지 균벌, 반동정치로의 회귀는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하는 일제의 식민정책 변화와 자치제 실시에 따라 열리는 합법적 대중정치 공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고하의 현실주의적 정치노선과 총독부의 자치정책은 접점이 있었다. 이제 고하의 정치운동론은 분명 독립에 대한 열망은 포기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단계적인 독립론, 즉 독립을 차후의 과제로 두고 우선 자치제 관철을 통해 정치적 자각과 훈련, 민중생활의 향상을 모색하는 독립론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의 정치적 중심 건설론은 자치에 대비한 합법적 정치단체 건설론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동아일보』는 1926년 10월 6일 “반성과 기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치제 실시라는) 이 환경과 이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만들기 위해” 일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투쟁방법을 반성하고, 이제는 “민족적 일대 결심”을 하여야 한다²⁰⁾며 당시 고하 노선의 변화를 암시적으로 드러냈다.

18) 송진우,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 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편, 『거인의 숨결: 고하송진우관계자료 문집』 (서울: 동아일보사, 1990), 31-49쪽.

19) 송진우,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 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편, 『거인의 숨결: 고하송진우관계자료 문집』 (서울: 동아일보사, 1990), 43쪽.

20) “반성과 기회,” 『동아일보』, 1926년 10월 6일.

그런데 고하의 정치노선은 곧바로 총독부의 자치정책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총독부 자치정책의 목적은 현재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민족독립운동 세력의 분열을 조장하고, 총독부 통제 범위 하에서 자치의회(조선의회)의 결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동아일보』 계열의 목표는 자치제 실시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동아일보』에 실린 각국의 자치운동 상황에 대한 보도와 이에 대한 평가, 또한 당시의 논조를 통해 자치제에 대한 생각을 유추해 낼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볼 때 그들의 목표는 대체로 자치제 실시 관철을 통해 대중의 정치적 자각과 민족주의 세력의 정치적 결집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 결집된 힘으로 총독부와 일본정부에 한편으로는 압력을 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협을 하면서 조선독립의 실질적 내용을 단계적으로 쟁취해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었는가 한다. 그런 면에서 고하와 총독부 사이의 자치제에 대한 생각은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고하와 동아일보 계열의 타협성과 합법지향성은 제대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고하의 자치론이 총독부의 자치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일정한 긴장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는 고하가 1926년 11월 징역 6개월의 실행 선고를 받은 사실로도 알 수 있다. 고하는 『동아일보』에 “국제농민본부의 조선농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게재한 혐의로 1926년 4월 불구속 기소중인 상태에 있다가 실행을 선고 받고 구금된 것이다. 이에 반해 천도교의 최린은 1926년 10월 일본으로 건너가 직접 일본 정계를 상대로 자치제 실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 일본 정계의 변화와 고하의 신간회 참여

1927년 4월 소수내각이며 유화적 대외정책을 표방했던 헌정회 내각이 물러나고 육군대장 출신의 정우회 총재 다나카 내각이 성립했다. 다나카 내각은 헌정회 내각 시대 외상의 대중국 유화정책을 비판하면서 강경한 대외정책을 주장했고, 1927년 12월에는 유화적 식민정책을 취했던 사이토 총독이 경질되고 다나카의 측근인 야나마시 전 육군대신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런 정세 변화를 지켜 본 고하는 자치제 실시가 불투명해졌으며, 따라서 이에 대비한 합법적 정치조직 건설 역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하는 1927년 2월 15일 조선일보계의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자들이 연합하여 자치운동을 배격하고 비타협적 운동을 전개한다는 목표 아래 결성된 신간회에 대해 애초에 가졌던 관망하는 태도를 버리고 신간회 참여로 노선을 바꾸었다. 고하는 ‘민족적 총역량을 집중’시키고 민족운동의 지도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신간회 내로 들어가 민족주의자들과 연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고하는 1928년 1월 경성지회에 입회하였고, 이는 신간회 중앙을 장악하고 있던 민족주의 세력들과

의 합의에 따라 ‘민족적 역량을 총집결’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다.²¹⁾

신간회에 입회한 후 고하는 특별한 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다. 신간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전민족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민족의 대단결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일정한 사상과 이념의 지도 아래 노선의 통일과 구성원의 자기 헌신의 기초 위에서 수립될 때만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는 각 정치세력의 연합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 연합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노선과 방향에 대한 연합 내의 합의와 이를 주도할 조직적·사상적 헤게모니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가 주장한 정치적 중심세력 형성은 민족운동 내 다양한 운동노선의 산술적 연합이 아니라, 강력한 사상적·조직적 헤게모니를 가진 정치주도세력의 형성을 의미했다.

그런 면에서 민족주의세력과 사회주의세력이 수평적으로 연대해서 조직된 신간회는 그에게 불만족스러운 것이었다. 그는 민족주의세력이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주의세력과의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고하가 신간회 내에 머무른 까닭은 민족주의 세력이 신간회 중양을 장악하고 있고, 당시의 유동적인 국내외 정세에 비추어 볼 때 신간회가 유용한 조직이었기 때문이었다.

일본 정계가 1929년 7월 민정당 하마구치 내각이 수립되면서 변화하고, 1929년 8월 사이토 총독이 조선총독으로 재부임하면서 자치운동은 다시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하나 『동아일보』의 움직임은 신중했다. 그는 최린 등의 자치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 고하는 당시 자치제의 실현 가능성, 일본 정계의 동향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신간회 해소에 대한 입장에서 잘 드러났다. 당시 자치론자들은 신간회를 해소하고 새로운 대협동기관·민족기관, 즉 자치기관 형성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고하는 현재의 정세로 보아 신간회 해소에 대해 신중해야 하며 신간회를 그대로 두고 형편에 따라 운동의 방향만을 적당히 바꿀 것²²⁾과 현재 새로운 대협동기관 조직은 필요 없다²³⁾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신간회 중양을 장악하고 있던 김병로 등 민족주의 세력의 주장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고하와 자치운동과의 관련은 총독부의 조선자치 건의가 일본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1930년말 자치문제가 지방제도의 개정으로 일단락되면서 끝나게 된다. 고하는 자치제 실시의 가능성이 사라지자 자치운동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문화운동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

21) 한상구, “1926-28년 민족주의세력의 운동론과 신간회,” 『한국사연구』 86집, 1994년, 172-180쪽.

22) 송진우, “맹목적 해소는 문제,” 『別乾坤』 제6권 제2호, 1931년 2월.

23) 고하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그러한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민족의 협동기관이라 하면 외면으로는 물론 좋고 다수인의 결합이니까 힘이 강할 것 같지마는 실상은 아무 힘도 없고 그냥 또 시시부지하고 말기가 쉽습니다.”, 송진우, “대협동기관조직의 필요와 可能 如何?”, 『擘星』 제1권 제1호, 1931년 3월, 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편, 『거인의 숨결: 고하송진우관계자료문집』 (서울: 동아일보사, 1990), 66-67쪽.

5. 1930년대의 문화운동

1930년 말 지방제도 개정으로 조선에서 자치제 실시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1931년부터 일본정계 및 국내외 정세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자 『동아일보』 계열의 우파 민족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운동방향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31년 3월에는 소위 ‘3월사건’이라는 일본 극우 군부세력의 쿠데타 모의 사건이 일어났고, 6월에는 ‘3월사건’의 배후인물로 알려진 전 육군대신 우가키 총독이 부임했다. 또 9월에는 일제의 만주 침략이 일본 군부의 주도하에 감행되었고, 10월에는 ‘10월사건’이라 불리는 또 한 번의 쿠데타 계획이 발각되었다. 1932년에는 5월에는 이누카이 수상이 암살되는 5·15사건까지 일어났다. 일본의 정당정치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군국주의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 본 우파 민족주의 세력들은 일본의 조선지배 정책이 더욱 강경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정치운동 대신 ‘문화혁신’을 내세우는 문화운동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현실적으로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운동, 그것이 직접적인 독립운동이든 단계적인 독립운동(자치운동)이든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총독부와의 대립을 가급적 피하면서 합법적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는 운동으로 방향전환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²⁴⁾

『동아일보』 1932년 4월 18일자 사설 “문화혁신을 제창함”은 “우리는 문화의 혁신을 주창한다. 민족운동, 정치운동, 경제운동, 기타 온갖 운동이 새로운 기초 위에서는 때려야 비로소 그 진전을 볼 수 있고 활약을 볼 수 있고, 성공을 볼 수 있다”고 문화혁신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러한 문화혁신은 조선신문화 수립을 위한 ‘사상적 기초공사’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⁵⁾

이러한 우파 민족주의 계열의 변화의 중심에는 고하가 있었다. 고하는 1932년 4월 『삼천리』에 실린 “무풍적인 현하 국면타개책: 문화운동과 소비운동에 주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와의 대담에서 강력한 중심단체 건설과 그 기초 위의 정치운동은 필요하지만 첫째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 등 사상의 분열과 불일치, 둘째로는 유력한 인사들의 自重不動 때문에 불가능하며, 그 대신 정치운동의 ‘기본운동’이자 ‘준비운동’으로서 문화운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화운동의 내용으로 ‘교육기관의 충실화’, ‘신문·잡지·강습회를 통한 지식의 계몽’, ‘소비조합과 협동조합운동의 전개’ 등을 들었다. 고하는 민족운동 내의 사상적 대립과 불일치가 민중들의 의식과 자각이 낮기 때문이라고 보고 ‘민중의 자각과 문화 정도의 향상’이 사상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⁶⁾

이러한 고하의 인식과 주장은 『동아일보』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동아일

24) 윤덕영, “고하 송진우의 생애와 활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현대사인물연구2』 (서울: 백산서당, 1999), 135-136쪽.

25) “문화혁신을 제창함,” 『동아일보』, 1932년 4월 18일.

26) “무풍적인 현하 국면타개책,” 『삼천리』 제4권 제4호, 1932년 4월, 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편, 『거인의 숨결: 고하송진우관계자료문집』 (서울: 동아일보사, 1990), 87-89쪽.

보』는 1931년 7월부터 ‘브나로드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조선어학회와 함께 ‘조선어강습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했다. 또한 한글에 대한 선양사업, 충무공유적 보존운동 등 국조신앙(國祖信仰)이나 민족위인들의 유적지 보존운동 등을 활발히 전개했다. 이러한 ‘문화혁신’을 목표로 전개된 문화운동은 다분히 계몽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이 운동의 사상적 지향은 근대부르주아적 의식을 지향하는 것이었고, 민족문화에 대한 계몽은 민중의 근대적 자각을 위한 기능적·도구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하와 『동아일보』의 문화운동론은 일제가 파시즘 체제로 전화하면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내지연장주의에 따른 민족동화정책, 민족말살정책은 합법적 틀을 최대한 이용했던 문화운동의 범위를 축소시켰다. 따라서 1930년대 중반에 이르면 문화운동도 소강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고하의 운동 모색도 한계에 이르게 된다. 그는 점차 운동의 일선에서 멀어져 정치적 은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고하 송진우의 독립 방략은 정치현실주의, 자유민주주의, 실력양성론에 그 토대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하는 시세와 처지에 민감한 정치현실주의자였으며, 일본 유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체득했고 한말 이래의 자강론과 연결되는 실력양성론의 세례를 받았다.

그의 독립 방략은 이런 기초 하에서 전개되었다. 1915년 일본 유학을 마친 이후 중앙학교에서의 활동, 1917년 삼성사설립기성회를 만들어 일반사회의 민족의식 고양을 위해 애쓴 일들은 실력양성론과 기회론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고하는 이어 3·1운동 참여의 교훈을 통해 구습타파에 의한 민족적 자각과 실력양성이라는 기존 노선을 더욱 확고히 하였으며, 강력한 정치적 중심체 건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고하의 1922년 민립대학설립운동은 『동아일보』가 내건 ‘민족적 기치하의 대단결’, ‘민족적 중심세력의 결집’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으며, 민족적 중심세력 결집을 통해 민족운동의 정치적 구심체, 정치단체를 결성하고 준비하는 것의 일환이었다.

그의 정치적 중심체 건설론은 1920년대의 자치론과도 연결되었다. 일제에 의해 자치론이 부상하자 그의 노선은 자치에 대비한 합법적 정치단체 건설론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그의 방략은 분명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은 포기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단계적인 독립론, 즉 독립을 차후의 과제로 두고 우선 자치제 관철을 통해 정치적 자각과 훈련, 민중생활의 향상을 모색하는 독립론이었다. 또한 고하와 『동아일보』 계열의 목표는 자치제 실시 관철을 통해 대중의 정치적 자각과 민족주의 세력의 정치적 결집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 결집된 힘으로 총독부와 일본정부에 한편으로는 압력을 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협을 하면서 조선독립의

실질적 내용을 단계적으로 쟁취해 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정치노선이 곧바로 총독부의 자치정책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오히려 긴장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고하가 1926년 11월 실행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고하는 정치현실주의자로서 일본 내 정계변화를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조선에서의 자치론을 준비했던 것이지 총독부와 접촉하면서 그들의 논리를 수용한 것이 아니었다.

1930년 말 지방제도 개정으로 조선에서 자치제 실시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1931년부터 일본정계 및 국내외 정세가 크게 변화하자 고하는 정치운동 대신 ‘문화혁신’을 내세우는 문화운동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운동은 일제가 파시즘 체제로 전화하면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1930년대 중반에 이르면 소강상태를 맞고 고하는 정치적 은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철순: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부회장.

현재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해방 후 고하 송진우의 정치 구상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1. 들어가는 말

새로이 질서가 형성되는 시기에 지도자의 역할은 대단히 지대하다. 그 지도자의 의도와 판단은 그 이후 그 조직이나 공동체가 나아가게 될 미래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새로이 국가를 만들어내야 했던 1945년 직후의 한국에서 정치 지도자의 역할과 판단은 그 이후 전개된 한국의 정치적 진로와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고하 송진우는 한국 현대사에서 교육, 언론, 문화, 정치 등 각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행했다. 해방 직후의 정치적 상황에서 송진우는 한민당의 수석 총무였으며, 군정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복간된 동아일보의 사장이었다. 더욱이 좌파까지 아우르는 포용력 있는 정치력을 보였다. 건준이나 인공 등 해방 이후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속에서 임정을 중심으로 결집해야 한다는 그의 정치적 입장 역시 분명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해방 이후의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과 정치 질서를 모색해 가야 하는 상황에서 송진우의 역할은 매우 지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신탁통치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 속에서 송진우는 1945년 12월 30일 암살자들에 의해 죽음을 맞았다. 민족적으로 매우 중요했던 해방 이후의 시기에 그가 불과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밖에 활동할 수 없었다는 점은 그 이후 한국 정치의 전개 과정을 고려할 때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해방 이후의 그 짧은 시간동안에도 송진우는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분명한 비전과 신념을 보여주었고, 정치 지도자로서의 탁월한 시각과 정치력을 보여주었다. 송진우는 당시 미 군정의 지배라고 하는 현실적 권력과, 독립된 조국의 건설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적 열망 사이에서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던 정치가였다. 특히 중경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인 통치 권력이었던 미 군정과의 협력을 통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해방 정국에서의 정치적 갈등을 조정하려고 한 그의 노력은 당시 남한에 주어진 정치 현실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다. 그가 불의의 암살로 이른 시기에 세상을 떠남으로써 그 이후 해방정국의 방향은 상이한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비록 짧은 시간동안이었지만 해방 공간에서 송진우의 정치적 행보와 역할을 통해, 그가 정치 지도자로서 추구하고자 했던 정치적 구상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2. 해방 이후 송진우의 정치적 활동

일본의 항복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해방을 이끌어 낸 주체가 국내의 정치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록 독립은 맞이하게 되었지만 독립 이후의 정치적 상황의 전개는 처음부터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에서 벗어난 우리 민족으로서는 당연히 새로운 국가를 스스로 건설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38선 이북에는 소련이, 이남에는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질서 재편의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자주적인 국가 건설의 열망과 현실적으로 군림하는 외세의 영향력이라는 부조화가 해방 직후부터 미묘한 정치적 갈등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해방 직후 각 정치 세력, 정치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정치적 균열 속에서 서로 상반된 정치적 목표와 방향을 추구하고 있었다.

일본의 패망 선언 직전 조선총독부의 엔도 류사쿠 정무총감은 여운형을 만나 치안 유지와 일본인의 안전한 철수를 요구했다. 조선총독부로서는 여운형에게 치안 유지를 의뢰하여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그리고 안전한 귀국을 보장받으려 한 것이었다. 한편, 여운형으로서는 엔도 총감의 부탁은 해방 직후의 정치 상황에서 자신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여운형은 해방 이전 조직한 조선건국동맹(건맹)을 토대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를 결성하여 치안 유지 업무와 정부 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에 나서게 되었다. 건준은 1945년 말이면 145개 시도에 지부를 설치할 만큼 급속히 조직을 확산시켜 나갔다.

그런데 여운형은 송진우에게 건준에 함께 참여하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송진우는 여운형의 이러한 제안을 거절했다. 송진우는 “일본이 완전 철수할 때까지 참고 있을 것이며, 총독부가 연합군에 ‘조선 정권’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독립 정부’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므로 적과는 투쟁할 수 없으며, 중경 임시 정부를 정통으로 환영 추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식 2007: 360). “고하는 일본 세력이 엄연히 있는 이때 그 세력을 이용해서 정권을 세운다는 것은 일본 세력의 연장이며, 일본의 뜻을 받들어 뒤치다꺼리하려는 데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협작을 거부했다. 그리고 연합군이 들어와 일본군이 물러나고 임정 요인들이 귀국하면 이들과 손을 잡은 뒤 절차를 밟아 정권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이므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일본을 타도할 정도로 막강한 무력을 갖춘 연합군이 상륙하는 마당에 그리고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불리 행동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심지연 2013: 35). 따라서 송진우의 입장은 “연합군이 상륙하고 일본이 정식으로 항복한 후에 연합국과 논의해서 건국을 한다 해도 조금도 늦을 것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구에 연합군도 들어오고 해외에 있는 선배 동지들도 귀국하게 될 것이니 그 때까지 마음의 준비와 현상유지를 하면서 기다리자”는 것이었다 (김인식 2007: 362-363). 송진우의 이러한 입장은 연합군에 의해 해방된 조선의 현실을 정확하게 읽어낸 현실주의적 관점이었다.

미군이 곧 남한에 진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알려진 8월 말이 되면서 건준 이외의 정치 세력의 활동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건준은 미군의 남한 상륙 하루 전인 9월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소집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인공)을 발족시켰다. 미군이 남한에 들어오기 전 조선에 통치 주체 세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익 인사들 역시 인공에 대항하는 정치 단체를 결성하였다. 당시 우익 진영 내의 정당 창당은 두 갈래의 흐름을 반영했는데, 하나는 우익 내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원세훈의 고려민주당, 그리고 이후 고려민주당도 합류한 이인, 김병로, 김약수 등의 조선민족당의 줄기가 있었고, 또 다른 흐름은 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장덕수, 허정, 윤보선, 김도연 등이 윤보선 집에서 결성한 한국국민당 등이었다.

그러나 송진우는 각종 정당 결성 제안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송진우가 정치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9월 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환국 환영 준비회’를 조직하면서부터였다. 9월 4일 여기에 연합군 환영을 포함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연합군 환영 준비위원회’로 조직 명칭을 바꾸고 위원장에 권동진, 부위원장에 김성수, 허헌을 위촉했다. 그리고 미군이 진주하는 9월 7일에는 이를 ‘국민대회 준비회’로 발전시키고,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송진우가 정당 결성 대신에 국민대회를 정치 활동의 기회로 삼은 것은 “미군이 진주한 뒤 정권을 인수할 요건을 갖추고 이를 전 국민의 의사를 통합, 대변하는 일종의 국민의회로 발전시키려는 데 있었다. 그는 정치성을 띤 정당보다는 전 국민의 의사를 기반으로 삼은 형태로 대표성, 순수성을 드러내려 하였다. 송진우는 건준, 인공이 공산당의 모체라 보고 국민대회로써 민족진영의 모체 구실을 하고 연합군정에 국민의 대변을 담당하고자 하였다” (김인식 2007: 367). 이처럼 송진우는 현실적으로 연합군의 영향력을 인식했고, 특정 정당을 통한 정치 활동보다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해방 정국을 대처하고자 했다.

그런데 건준이 인공으로 변모하면서 우익 계열 정당들은 이에 대해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좌익에 맞서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1945년 9월 8일 한국민주당 창당을 위한 발기인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인공을 규탄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외에 소위 정권을 참칭하는 일체의 단체 및 행동을 단호히 배격할 것 선언하였다. 즉 한민당 세력은 무엇보다 인공에 대한 거부를 분명히 하였고 그것이 창당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로 인해 미군 진주 이후의 새로운 정국에서 두 개의 정치 세력이 대립하게 되었다.

군정의 실시와 함께 미 군정청은 자신들이 ‘남한에서의 유일한 정부’임을 명확히 했고, 송진우는 군정 출범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다 ‘공산당에 대항하기 위한 강력한 민족진영 정당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국민대회 준비회를 이끌고 한민당 창당에 참여했다. 한민당은 조선민족당, 한국국민당, 국민대회준비회의 세 세력을 기반으로 9월 16일 창당했다. 한민당의 지도체제는 집단지도체제였는데, 당수 제도 없이 수석총무제를 도입했고, 1명의 수석총무와 8명의 총무를 선출했다. 이러한 집단지도체

제는 여러 단체가 창당과정에 함께 참여한 때문이었다. 송진우는 한민당의 초대 수석총무가 되었다. 당의 영수로 이승만, 김구, 이시영, 문창범, 서재필, 권동진, 오세창 등 7인을 추대했다. 한민당은 중경 임시정부에 대한 추대를 분명히 하였다.

한민당 창당 이후에도 송진우는 국민대회 준비회를 해체시키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켰다. 이는 “해외 망명 동지들이 환국한 다음에 완전 독립의 총 협의체로 재편성하여 활용할 심산”(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편 1990: 460)이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한 후 국민대회준비회를 근거로 하여 이들을 추대 또는 흡수하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는데 (심지연 1987: 109), 한민당 창당된 이후에도 한민당이 아니라 국민대회준비회를 통해 임시정부 요인과의 연대를 고려한 것은 특정한 정치색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당보다는 보다 통합적이고 탈정파적인 국민대회를 통한 방식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12월 19일 서울운동장에서 또한 임시 정부 개선 환영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송진우는 환영사를 통해 임시정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내외정세(內外情勢)를 환시(環視)하건대 우리나라는 8월 해방(八月解放)된 이래(以來) 독립(獨立)이 약속(約束)된 채 강토(疆土)는 단절(斷絶)되고 사상(思想)은 분열(分裂)하여 용이(容易)히 통일(統一)되고 독립(獨立)될 기운(氣運)이 간취(看取)되지 않을 뿐더러 연합국(聯合國)의 분할군정(分割軍政)은 국제적(國際的)으로 미묘(微妙)한 동향(動向)을 시(示)하여 완전(完全)한 자주독립(自主獨立)의 달성(達成)에는 아직도 전도(前途)가 요원한 감(感)이 없지 않나니 정부제위(政府諸位)를 맞이하여 환영(歡迎)하는 이날에 있어서 이러한 보고(報告)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우리는 진실(眞實)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태(事態)는 시급(時急)한 해결(解決)을 요(要)하나니 그 해결방법(解決方法)은 오직 한 가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1919(一九一九)년 이래(以來) 우리 민족(民族)의 정치력(政治力)의 본류(本流)로서 신념(信念)해 왔던 임시정부(臨時政府)가 중핵(中核)이 되어서 모든 아류지파(亞流支派)를 구심적(求心的)으로 응집(凝集)함으로써 국내통일(國內統一)에 절대(絶對)의 영도(領導)를 발휘(發揮)하는 동시에 우리의 자주독립(自主獨立)의 능력(能力)을 국외(國外)에 선시(宣示)하여 급속(急速)히 연합국(聯合國)의 승인(承認)을 요청(要請)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¹⁾

송진우는 중경 임시 정부가 ‘중핵(中核)이 되어서 모든 아류지파(亞流支派)를 구심적(求心的)으로 응집(凝集)함으로써 국내통일(國內統一)에 절대(絶對)의 영도(領導)를 발휘(發揮)’행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좌익이 내세운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한 부정의 의미를 지니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중경 임시정부를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당시 남한에서 사실상의 ‘유일한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미 군정 하에서 송

1) 臨時政府歡迎辭. <東亞日報> (1945년 12월 19일)

진우가 주장한 임정 추대는 현실적으로는 ‘지금’보다 ‘미래’에 더 무게감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미 군정이 실시되면서 송진우는 군정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미군이 남한에 머물면서 군정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이들과의 관계를 도외시키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주의 노선이었다. 한민당 내부에서도 미 군정에 대한 협력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는데, 김약수, 원세훈 등은 협력하지 말 것을 주장한 반면, 조병옥, 김병로 등은 협력을 주장했다. 수석총무인 송진우는 당내 갈등을 지켜본 후, 미 군정에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미 군정과 한민당은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송진우는 건준을 모체로 한 인공을 미 군정이 부정하도록 건의했고, 미 군정은 인공의 권위와 실체를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송진우는 하지와 면담을 통해 한국인으로 구성되는 고문회의를 제안했고, 이는 한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어, 9월 22일 한민당 중앙집행위원회는 “행정과 인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군정 당국은 조선인 중 명망과 식견을 구비한 인사로서 중앙위원회를 조직하여 행정과 인사에 자문케 할 것”(심지연 1982: 138)을 결의하고 이를 미 군정에 전달했다. 한민당으로서는 미군정 자문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지만, 사실 한국에 대한 정보가 크게 부족한 미 군정의 입장에서 이러한 송진우의 제안은 수용할 만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10월 5일 미 군정은 고문회의(Advisory Council)를 구성하고 11명을 고문관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김성수, 전용순, 김동원, 이용설, 오영수, 송진우, 김용무, 강병순, 윤기익, 여운형, 조만식 등이었다. 그런데 조만식은 당시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고문 역을 맡을 수 없었고, 여운형은 한민당 일색의 구성에 반발하여 고문 직에서 사퇴했다. 이렇게 되면서 한민당과 미 군정 간의 관계는 더욱 긴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의 신탁통치안이 발표되면서 남한의 정국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남한에서는 정파를 초월해서 강력한 반탁 운동이 일어났다. 이 때 김구는 반탁 운동을 임시 정부가 미 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찾아오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당시 임시정부 내무부장이었던 신익희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김구는 전국 행정청 소속 경찰 기구 내 한국인 직원은 모두 임시 정부의 지휘 하에 놓인다고 선언하고, 전 시가의 철시를 지시했다. 이는 미 군정이 ‘쿠데타’라고 인식한 것처럼 미 군정의 권위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었다. 그러나 송진우는 임정의 이러한 전면 투쟁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 요인들은 강력한 반탁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지만 미군정과 적극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송진우는 반탁운동으로 인해 미군정과 충돌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송진우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강력한 반탁운동, 심지어는 미군정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과업만은 만류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태균 1994: 37). 반탁운동을 주권회복의 계기로 삼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정부를 수립하려는 임정 측은 “새 출발로서 독립 운동을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임했다. 이에 대해 미 군정 당국은 “공안 질서를 문란케 하고 미 군정을 접수하려 하였으며

미 군인을 군정으로부터 축출하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하여 한때는 임정 요인들을 해외로 추방하려고까지 했다 (심지연 1987: 123). 한편, 12월 29일 아놀드 군정 장관은 임시정부의 선전부장 엄항섭을 불러 자제를 당부하였고, 하지는 그가 가장 신뢰하는 자문위원 송진우를 불러 임시정부에 대한 설득을 당부하였다. 이것은 미 군정에서 과격한 반탁운동을 자제할 것은 당부한 것이었고, 송진우는 이러한 미군정의 입장을 임시정부 측에 전달한 것이었다. (박태균 1994: 38).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전개는 송진우에게는 매우 곤혹스러운 것이었다.

탁치안 발표 다음날인 28일 송진우와 김준연은 경교장을 방문하여 김구 및 다른 정치인들과 탁치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송진우의 입장은 반탁은 좋으나 그것이 미 군정과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반탁운동을 권력을 장악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김구 등 임시정부의 태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반탁의 방법에서 미 군정과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송진우의 태도는 사실 매우 현실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신탁통치를 또 다른 식민통치로 간주했던 격앙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러한 송진우의 태도는 반탁에 대해 미온적인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1945년 12월 30일 새벽 한현우, 유근배 등 집안에 침입한 암살범들에 의해 송진우는 56세 나이로 세상을 떴다.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가야 할 해방 이후의 중요한 순간에 큰 역할을 해야 할 정치 지도자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3. 송진우의 해방 후 정치적 역할에 평가

1) 임시정부 추대와 미 군정과의 협력

해방 이후 닷 달 남짓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송진우의 정치적 역할을 몇 가지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해방 직후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식민지 신세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 손으로’ 완전한 자주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열망과, 과도기라고 해도 사실상 일본을 대신한 점령군으로서의 미 군정의 존재라고 하는 현실 간에 존재하는 갈등이었다. 즉, 우리 힘으로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닌 만큼, 종전 직후 미군의 일차적 관심은 ‘일본 처리’에 있었고 식민지 조선 역시 그런 관점에서 다뤄졌던 것이다. 그러나 ‘해방’된 민족 입장에서는 외세에서 벗어나 우리 손으로 새 나라를 건설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존재했다.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부정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송진우는 이러한 어려운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정치적 노선을 추구해 왔다.

송진우는 한민당 수석총무로 있으면서 당시의 통치세력이었던 미 군정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현실적인 영향력을 확보해 갔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국가 건설의 주체로 중경 임시정부를 추대했다. 건준과 인공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시기에

송진우의 이러한 노선은 민족주의 진영에서 취할 수밖에 없는 매우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이런 점은 송진우가 결성한 ‘국민대회 준비회’에서부터 잘 나타나고 있다. 애초에 정당 활동에 소극적이었던 송진우는 처음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환국 환영 준비회’를 결성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미군의 진주를 환영하는 것까지 포함한 ‘국민대회 준비회’로 발전시켰다. 송진우는 정치 활동의 처음부터 중경 임시정부와 미 군정이라는 두 축을 함께 고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임시정부와 미 군정의 입장은 갈등이 내재화된 것일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 공간 속에 두 개의 실재하는 권력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 군정을 인정하면 ‘임시정부’는 경쟁하는 여러 정치세력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면 현실적인 통치세력인 미 군정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 입장에서 본다면, 미 군정은, 송진우가 ‘훈정기(訓政期)’라고 부른 대로, 당시의 국제정세로 볼 때 피할 수 없는 ‘오늘’의 권력이었다. 반면 임시정부는 ‘우리 민족의 정치력의 본류’이며 ‘모든 아류지파를 구심적으로 응집하는 중핵’이지만, 당시 현실에서는 경쟁하는 여러 세력 중 하나였으며, 새로운 국가 건설의 중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일’의 문제였다. 이 두 가지 세력은 ‘오늘’과 ‘내일’이라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받아들이는 한에서는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협력하며 지낼 수 있는 것이었다. 송진우는 자신의 역할을 현실 권력으로서의 미 군정과 미래 권력으로서의 임시정부 간의 협력과 소통의 중재자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해방 직후의 공간에서 송진우의 이러한 정치적 태도는 국제정치적 상황과 민족주의적 염원 간의 절묘한 결합이었다.

그런데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이 되면서 이 두 세력 간의 조화로운 공존이 깨져버리게 되었다. 남한에서 전 사회가 탁치안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는 것은 일제의 식민지 상황에서 막 벗어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이상할 것이 없었지만, 김구가 탁치 반대 운동을 미 군정으로부터 권력을 쟁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면서부터 송진우가 구상한 두 세력의 협력과 공존의 틀이 무너져버리게 되었다. 송진우는 미 군정의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고 있었고 이들과 대립하거나 도전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들의 영향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탁 운동과 함께 송진우가 해방 공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두 개의 힘이 서로 충돌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다면, 탁치안에 반대하더라도 미 군정과 대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당시 한국 사회에 주어진 넘을 수 없는 한계였다. 조선인 민공화국을 선포한 좌익의 시도를 미 군정이 인정하지 않고 그 이후 저항을 힘으로 분쇄했던 것처럼, 김구와 임시정부의 권력 쟁취 시도 역시 그 결과가 보여주듯이 현실적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목표였다. 송진우가 당시 탁치안에 대한 토론에서 보여준 모습 역시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감안한 것이었다. 탁치안에 반대하더라도 당시의 현실적 권력이었던 미 군정과 대화와 논의까지 거부할 필요는 없는 것이었

다. 그런 점에서 송진우가 탁치 찬성자로 오해를 사고 암살까지 당한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인식을 가진 것은 송진우뿐만이 아니었다. 반탁운동이 기세를 떨치고 있을 때 이승만의 입장 역시 다음에 인용한 글에서 보듯이 유사한 것이었다.

미국 정부에 대하여 결코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니 이는 우리가 군력(軍力)을 두려워하거나 또 친미주의를 위함이 아니라 다만 미국군 정부가 우리를 해방한 은인이요 군 정부당국은 절대 독립을 찬성하는 고로 신탁문제 발생 이후 자기 정부에 대하여 반박과 공격의 공문을 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 독립의 친우를 모르고 원수로 대우하면 이는 도리어 독립을 저해하는 것이다 (동아일보 1946.1.2.; 박태균 1994: 43에서 재인용)

송진우의 구상대로, 중경 임시정부의 추대와 미 군정과의 협력은 당시 민족주의 진영에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신탁통치 결정으로 정치적 갈등이 고조된 시점은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11월 23일 귀국한 이후 불과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황이었다. 남한 현실에서 미 군정의 힘과 국제정치적 상황에 대한 현실적 인식보다는 민족주의의 명분과 원칙, 이상주의가 임시정부 지도자들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김구는 반탁으로 인한 민족주의 열기를 고조를 이용하여 미 군정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취했고,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현실적 역학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던 송진우는 그러한 정치적 흐름 속에서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2) 좌우 협력의 시도

송진우에게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임시정부를 주축으로 좌익을 포함한 통일전선을 구성하려고 노력한 점이다. 1945년 12월 송진우는 이념적 차이를 떠나 당시 국내의 주요 정치 세력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시도했다. 자신이 수석 총무로 있는 한민당과 안재홍의 국민당, 그리고 여운형의 조선인민당, 그리고 이영, 최익한의 장안파 공산당 등 네 정당 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좌우 통합 운동을 펼쳤다. 송진우는 ‘이 4개 정당을 임정의 테두리 안에 뭉치게 하여 국민대회를 열고 행동의 통일을 보여 정부 수립의 밑바탕을 이루려고 한 것이었다’ (심지연 1987: 120-121).

이런 그의 노력은 죽음과 함께 무위로 끝나고 말았지만, ‘보수적’이라고 하는 한민당이 인민당이나 장안파 공산당 등과 함께 좌우 협력하는 시도가 가능했던 것은 송진우가 수석총무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의 죽음 이후 한민당을 이끌었던 다른 정치 지도자에게서 찾기 어려운 송진우의 정치적 역량의 크기와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그가 죽은 이후 한국 정치의 이념적 양극화가 급속하

게 진행되었다. 송진우의 피살 이후 한민당은 더욱 더 극우적인 노선으로 치달았고, 좌익 진영을 물론 중간 진영 그리고 임시정부의 김구까지도 공산주의자로 비난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심지연 1987: 131). 송진우가 다른 이념의 정치세력과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격, 신념뿐만 아니라 그가 폭넓은 인간적 유대 관계를 가진 탓이었다. 송진우는 일제 강점기부터 『동아일보』 중심의 민족 운동을 전개했지만, 민족주의 좌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여운형,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였던 원세훈, 김병로, 홍명희 등과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박태균 1994: 45). 하지만 송진우의 이와 같은 좌우 협력의 시도에는 그의 정치적 이상, 신념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송진우가 한민당 수석총무로서 1945년 12월 22일 중앙방송국에서 행한 한민당 정견 발표 방송은 그의 정치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아일보 1945년 12월 22-23일)

첫째, 우리 민족의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 수립을 기(期)합니다. 전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임시정부를 절대지지함으로써 완전한 독립국가로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물론 사상이 다르고 정책이 다른 점도 있겠지만 현 단계에 있어서 3천만 민중의 신성한 임무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독립을 완성함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여야 사상의 정사(正邪)를 운위하고 정책의 시비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아니될 것입니다. 지엽 문제로서 민족의 대도(大道)를 그릇한다면 그 죄과는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이 사상을 귀일하고 단결을 공고히 하고 행동을 통일하여 내쟁(內爭)을 종식시킴으로써 민족의 정신과 역량을 충분히 충분히 발휘할 때 그 자치의 능력은 세계에 선시(宣示)될지니 외모(外侮)는 자연 삼재(災際)될지요. 따라서 자주독립은 승인될 것입니다. 이에 비로소 우리나라는 세계에 완전히 평등된 인격으로 자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정체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비록 독립한 국가가 되더라도 그 권력이 일인(一人)의 손에 집중되어 전횡하게 되고 일계급의 독재로 된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회에는 오직 마찰과 대립이 있을 뿐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만인이 회구하는 민주적 정치체제를 확립하지 않으면 아니될지니. 민중에 의하여 민중을 위한 민중의 정치가 실현됨을 따라서 민중적 자유는 확인되고, 민중적 평등은 보장될 것입니다. 이 인권발휘와 행복향수의 기회가 균등화할 것임에 진정한 의미의 공화○만한 국가가 조성될 것으로 믿는다.

셋째, 경제적으로 근로 대중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는 자유에만 치중하고 균등에 있어서는 진실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자본가가 이윤추구에 방분(放棄)한 나머지 경제적 균등의 기회는 파괴되고 따라서 근로 대중의 생활은 그 안정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독재적 전횡을 타파하는 데 있는 것과 같이 경제적 민주주의는 독재적 전횡을 타파하는 데 있는 것이니,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민주주의는 그 정책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계획 경제와 일치된 점을 발견치 못하리라고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자본을 요하고

독점성을 띤 중요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해야만 할 것이요. 또한 토지 정책에 있어서도 종래의 불합리한 착취 방법을 단연 배제하기 위하여 일본인 소유 토지의 몰수에 의한 농민에게 경작권을 부여는 물론이거니와 조선인 소유 토지도 소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동시에 매매겸병(買賣兼併)을 금하여 경작권의 전국적 시설을 촉진하여 민중의 생활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외에도 송진우는 방송연설에서 민족문화를 양양하여 세계 문화에 공헌하는 것, 국제헌장을 준수하여 세계평화의 확립을 기하는 것 등의 모두 다섯 가지의 내용을 정강으로 제시하였다.

정치적으로 보다 중요한 세 가지 강령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임시정부를 절대지함으로써 완전한 독립국가로 승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상의 정사나 정책의 시비를 논할 때'가 아니며 '내쟁을 종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송진우의 정치적 지향점이 잘 나타나 있다. 두 번째는 정치체제에 대한 송진우의 분명한 시각이 드러나 있다. 계급이든 개인이든 하나에 의해 독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계급독재를 강조하는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분명한 거부이다. 이런 체제 하에서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가 보장'될 수 없으며 '마찰과 대립'만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송진우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링컨이 말한 대로, '민중에 의하여 민중을 위한 민중의 정치'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의 경제 분야에서는 매우 진취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물론 해방 직후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탓도 있겠지만, '정치적 민주주의가 독재적 전횡을 타파하는 데 있는 것과 같이 경제적 민주주의는 독재적 전횡을 타파하는 데 있는 것'이라는 지적은 새로운 국가 건설에서 송진우가 지녔던 분명한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민주주의는 그 정책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계획 경제와 일치된 점을 발견치 못하리라고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고 주장하면서 국영, 공영화에 대해서까지 언급했다. 결국 송진우의 정치적 사상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으로 특정 계급이나 개인에게 그 힘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분명한 거부를 표명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적어도 온건한 입장을 가진 좌파들과도 상당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유연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송진우의 좌우 협력 시도의 좌절이 안타까운 것은 해방 공간의 정치가 좌우의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이끌려가지 않고, 좌우의 온건 세력들이 협의를 통해 정치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미 군정과의 상호 대화를 통해 보다 이념적으로 포용력이 큰 정치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미소 냉전이 본격화되던 시기라는 점에서 좌우 간 협력의 지속이 과연 얼마나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좌, 우 모두 극단주의 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갖고 보다 격렬한 형태로 갈등을 고조시켜 가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더욱이 송진우는 중경 임시정부를 주축으로 하는 권력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임정이라는 정치적 명분하에서 온건 좌파가 상호 공존하면서 정국을 이끌어 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송진우가 우파 민족주의자였지만, ‘여타 맹목적 반공주의자, 우파 민족주의자들과 달리 우파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인정한다면 공산주의 세력까지 포용하는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덕영 1999: 322) ‘따라서 그의 죽음은 1946년 2월 초 이후 38선 이남의 정치세력이 좌우익, 즉 모스크바 3상 협정 지지 세력과 반탁운동 세력으로 나뉘어 격렬한 쟁투를 벌이게 되는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송진우가 암살되지 않았다면, 4당, 5당 회합의 현장에서 현실주의자이면서 온건한 정치를 추구했던 송진우가 여타 정치세력과의 협상에서 보다 타협적인 자세를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박태균 1994: 45).

또한 임시정부나 김구로서도 송진우의 피살 이후 그 영향력을 점차 상실해 가게 된 일도 안타까운 일이다. 신탁통치를 둘러싼 격론 직후 송진우가 암살당함으로써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김구와 임시정부는 암살을 둘러싼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더욱이 해외에 오래 머물러야 했던 임시정부로서는 국내 정치 세력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에 자신의 기반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었지만 송진우의 피살과 함께 그 연결 고리가 크게 약화되었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당시의 통치 권력이었던 미 군정과의 관계 역시 임시정부로서는 송진우를 통해 보다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정치적 도움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송진우가 좌우 협력의 시도를 통해 임시정부를 다양한 정치세력을 망라한 명실상부한 미래 통치세력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한 국민대회가 예정대로 1946년 1월 10일 거행될 수 있었다면 임시정부의 정치적 위상은 크게 높아졌을 것이고, 임시정부나 김구는 그 이후의 정국 전개에서도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송진우는 12월 10일 ‘대한독립애국금헌성회’를 조직해서 모금운동에 들어갔으며, 이후 애국헌금회와의 통합을 통해 12월 23일 ‘애국헌금성회’로 발전시키고 국민대회준비회에 그 본부를 두도록 했다. 즉 임시정부 측의 정치자금을 한민당 계열 인물들이 모금하여 전달하는 것이었다. 애국헌금성회를 통해 모금된 자금은 모두 임시정부에 전달되었다. 송진우의 피살로 임시정부는 국내의 재력가 등을 통한 정치자금의 모금에서도 커다란 손실을 보게 되었다. 결국 중경 임시정부를 추대하려고 노력한 송진우의 피살은 결과적으로 김구와 임시정부의 정치적 위상을 크게 약화시켰다. 따라서 송진우가 정치적 전면에 사라진 것은 단지 한 거물 정치인의 죽음에 그치지 않고, 복잡하고 미묘했던 해방 정국의 전개 방향에 상당한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4. 결론

송진우가 해방 이후 불과 4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활동하지 못하고 불의의 암살로 세상을 떠난 것은 그 이후의 한국 정치의 전개와 관련해서 볼 때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해방 정국에서 송진우는 국제정치적인 역학관계와 해방 이후 폭발한 국내의 민족주의적 열정을 모두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상황은 서로 대립할 수도

모순될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송진우는 중경 임시정부의 옹립과 현실적 권력인 미 군정과의 협력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당시의 정치적 난제를 해결해 나가 고자 했다. 따라서 송진우가 수석총무로 있던 당시의 한민당은 미 군정의 협력자이 면서도 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그러나 신탁통치 문제로 임시정부가 미 군정에 도전하는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노선을 취하면서 송진우의 입장은 곤혹스럽게 되었다. 당시 김구와 임시정부를 에 워싼 강력한 민족주의의 명분과 열정, 그리고 귀국 후 얼마 되지 않은 짧은 현실 정치적 경험이 임시정부와 미 군정 간의 직접적 대립이라는 비현실적인 결과로 이 끌었고, 그러한 와중에 송진우는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했다.

송진우의 피살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은 김구와 임시정부였다. 송진우가 시도했던 좌우 협력을 통한 국민대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임시정부의 정통 성과 정국의 주도권은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또한 그의 죽음 이후 나타난 대로, 좌우의 극단주의 세력이 정치를 이끌어 가는 양극화의 정치도, 그가 살아 있었다라 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좌우의 온건파의 입지가 나름대로 강력하게 구 축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정치는 이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지만,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두 발은 현실이라 는 지표에 발을 딛고 있어야 한다. 송진우는 해방 직후의 어지러운 정국에서 미래 의 이상과 오늘의 현실을 모두 살펴볼 수 있었던 보기 드문 정치 지도자였다. 한민 당은 결국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치 세력이 되지만, 그가 더 오래 당을 이끌 수 있 었다면 한국의 정치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의 이른 죽음이 더욱 애석한 까닭이다.

참고문헌

- 古下先生傳記編纂委員會 編. 1990. 『古下宋鎮禹傳記』. 동아일보사.
- 김인식. 2007. “한국민주당의 중경임시정부 절대 지지론자: 송진우.” 유준기 편. 『한국 근 현대 인물강의』. 국학자료원. 349-384.
- 동아일보. 1945년 12월 22일자, 23일자.
- 박태균. 1994. 『현대사를 베고 쓰러진 거인들』. 지성사.
- 심지연. 2013. 『해방정국의 정치이념과 노선』. 백산서당.
- 심지연. 1987. “고하 송진우.” 한국사학회 편. 『한국현대인물론 I』. 을유문화사, 89-140.
- 심지연. 1982. 『한국민주당연구 1』. 풀빛.
- 윤덕영.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근대국가 건설의 꿈: 송진우.” 역사학자 18인. 『역사의 길목 에 선 31인의 선택: 삼국시대부터 해방 공간까지 전환기의 인물들』. 푸른역사. 303-322

강원택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졸업, 영국 런던정경대(LSE) 졸업, 정치학 박사.

승실대학교 교수, 한국정당학회 회장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국정치학회 회장.

저서: 한국 선거 정치의 변화와 지속,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대한민국민주화이야기 등
다수.

근대를 향해, 국민국가를 향해, 민주주의를 향해: 송진우의 길, 중용적 진보의 길¹⁾

박명림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1.

21세기에 돌아보는 고하 송진우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념하게 하는가? 2차 대전 종전70주년과 함께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는 올해 그에 대한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특별히 남북분단 70주년에 더해진 대한민국의 심각한 이념갈등과 남북갈등의 현실은 중용적 통합적 진보의 길을 갔던 이 뛰어난 선각의 길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송진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추모와 평가의 언설들이 있었다. 필자는 먼저 장구한 역사발전에서 훗날 드러나고 마는 선견(先見), 선각(先覺), 선두, 선구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무겁게 새기고자 한다.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볼 때 이 말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들 선구자들의 앞선 깨달음과 실천,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만들어지고, 후대의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때론 생명을 바치기도 한다.

우리는 오늘 역사 속의 한 사람 고하 송진우를 선각자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그가 자기 삶을, 앞서간 자로서 미리 맞는 별금으로 역사에 제공하였음을 뜻한다. 그 별금들은 감연한 헌신을 넘어 때로는 생명 자체의 희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2.

고하 송진우의 공적 삶을 이해하는 골간은 곧 근대와 국가건설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생애 동안 이를 묶어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 핵심가치는 곧 개인적으로는 중도였고, 사회적으로는 진보였다. 그는 언제나 당대 민족과 사회의 현실 속에서 중도적 중용적으로 진보를 실현하려 한 중용적 진보를 추구하였다. 여기에서 그의 선견성은 진보성은 물론 중용성까지도 만난다.

한국의 근대 국가건설과 발전의 역사를 제 1단계, 1876년 - 1953년 사이의 국가형성 시기, 제2단계, 1953년 - 1987년의 산업화 시기, 셋째 1987년 - 현재까지의 민주화 시기, 넷째 현재 이후의 복지화·인간화의 시기로 나눌 때 고하는 일찍이 이 과제들을 모두 꿰뚫고 멀리 내다본 인물 중의 한 사람이었다. 매우 신중하고 정확하게 전체를 통찰하되, 그는 자기 시대의 임무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직시하고 실

1) 본 발표는 2011년 고하 송진우 탄신 121주년 추모식의 강연내용을 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천해간 인물이었다. 전체에의 통찰과 당대적 실천을 결합하기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고하는 주지하듯 일제 유학시절부터 제일 유학생의 지도자였다. 청년의 시기 이래 그는 국민심성 개조를 중시하여 유교를 반대하고 공적 심성의 발양이 중요함을 깨우쳐왔다. 나아가 국민의 단결, 문화, 봉공, 곧 공적 헌신을 주창하였다. 이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 시대를 맞아 다시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공공성을 일찍부터 표설한 것이었다.

고하는 일제하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자주 평가 받아왔다. 교육과 언론에 종사하면서 민족의 지도자로 부상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새로이 진주한 미군 역시 여러 문건에서 그를 민족주의 진영을 대표할 인물로 평가하고 있었을 만큼 식민통치 시기 고하의 걸음은 가위 압도적인 것이었다.

그가 주도하거나 참여했었던 초기 문화운동들은 넓은 의미의 근대를 향한 국민교육과 국민계몽운동이었다. 이를테면 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 건립운동, 문맹퇴치운동, 브나로도 운동, 단군-세종대왕-이충무공의 삼성사 건립추진 등은 민족문화 창출과 근대국민 형성을 위한 운동들이었다. 민족의 복원을 위한 후대 교육과 계몽의 중요한 기반과 토대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3.

정치적으로 고하는 식민시기 동안의 좌파 배제, 해방 직후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 및 조선인민공화국(인공) 불참에서 볼 수 있듯 공산주의에 대한 분명한 반대노선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경영과 논조를 주도하였던 동아일보에 다수의 사회주의자들도 기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념적 포용의 폭을 보여주었다.

고하는 중국의 초기 공화주의 운동과 범아시아주의를 대표하는 쑨원을 가장 존경하였는 바 그는 중국 근대 민족주의의 원형이자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제스와 마오쩌둥, 중국의 좌파와 우파가 쑨원의 자녀들이었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여기에서 고하가 쑨원의 한국적 길을 상념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론해본다.

그는 48인 민족대표로서 3·1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리고는 친일로 변절하지 않고 일관된 민족주의자의 길을 고수하였다. 필자는 종종 3·1운동 민족대표는 33인이 아니라 48인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상념하곤 해왔다. 조심스런 평가이지만, 33인은 단지 공적 대표성 이외에는 없지 않았나 싶다. 48인으로 확대되는 것이 더 나은 것도 그 때문이다. 33인 대표 중에서도 적지않은 인사들이 변절하였으나 고하는 그들을 뛰어넘는 올곧은 민족주의자의 길을 걸어갔다. 많은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전향할 때 고하의 지조와 일관성은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정신적 자산으로 남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고하는 한국에서 자유주의 수용과 발전의 한 중심채널이었다. 오늘의 시점

에서 한국사회를 총체적으로 돌아보건대 이 점은 두드러지게, 그리고 충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영국과 일본 유학을 통해 고하 송진우 - 인촌 김성수 - 설산 장덕수 - 해공 신익희 - 유석 조병옥, 그리고 윤보선과 장면 - 민주당 - 동아일보로 대표되는 한국의 초기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포괄하면서 초기 반독재투쟁과 4월혁명의 중심 지주 역할을 수행하였다.

고하와 인촌이 놓은 초기 자유주의는 건국 이후 한국의 가장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담론과 세력으로 자리 잡았고, 급진공산주의와 우파독재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대안 담론이자 운동이었다. 북한의 공산독재와 이승만정부의 보수독재를 상념할 때 한국에서 이들 자유주의 그룹이 민주주의 발전에 끼친 영향은 결정적이었다. 북한의 독재와는 다른 민주주의의 길을 가는데 이들 초기 자유주의 세력이 끼친 기여는 크게 상찬받아 마땅하다.

동아일보를 포함해 부분적으로는 박정희 시기의 반독재 담론 역시 이들 그룹이 주도하였다. 이 초기 자유주의 그룹은 70-80세대, 또는 86세대(60년대 출생의 80년대 학번들)의 자유주의와 민중주의의 등장 이전시기에는 한국의 반독재 민주화 담론과 자유주의 운동의 한 분명한 중심 주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우리사회는 연속성과 지양의 관점에서 심층연구를 수행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4.

해방 직후 고하는 정부수립 모색 단계에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 및 조선인민공화국(인공) 반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정) 봉대, 그리고 국민대회 준비회를 추구하였는 바, 그 핵심 이유는 세 가지의 중요한 원칙 때문이었다. 첫째는 공산당 주도에 대한 분명한 반대였다. 고하는 공산세력의 주도를 용납하지 않았다.

둘째는 일본 후원 - 총독부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즉 고하는 총독부의 제안을 수용하여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은 민족적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고하의 고결성과 탁견이 돋보이는 점이였다.

셋째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민주적 절차와 민중적 참여의 결여 때문이었다. 세 가지 모두 중요한 점이였다. 당시 일부 인사들이 두 번째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총독부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의 견해로 보건대, 당시에 만약 모든 진보-보수주의들, 민족주의자들-사회주의자들이, 고하처럼, 한 목소리로 총독부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념을 넘어 통합적으로 하나의 건국준비조직을 건설하였다면 건국의 과정은 훨씬 더 단합되었고, 더 통합적 비분열적이었을는지 모른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였다. 민주주의자로서 고하에겐 세 번째 이유 역시 결정적으로 중요하였는바, 총독부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곧 민중이 정부를 건설해야한다는 민주적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때문이었다.

대신 이 때 고하의 길은 3면 종합이였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정부 수립 시점까지 임정의 정통성과 과도성을 인정한다(여기에는 임정의 국내기반이 전무하

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둘째 “의회 차원에선” 국내적 기반을 거의 독점한 주류로서 국민대회를 통한 결성을 추구한다, 셋째, 연후에 민주적 절차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독립국가를 수립한다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고하의 정교한 3단계 구상은 그의 사후에 남조선 입법의원이나 남조선 과도정부를 통해 거의 그대로 관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임정의 정통성 인정과 존중, 그리고 의회주의,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라는 세 경로를 통한 독립국가 건설 구상이었던 것이다.

특히 고하는 당시 정당과 정치세력에 관한 급진좌파와 극우반동을 제외한 좌우 공존과 경쟁을 모색하였다. 즉 의회제 내에서의 진보·사회주의와 보수·자유주의의 건강한 경쟁을 추구한 것으로서 그가 좁은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훨씬 넘어서 영국의 진보자유주의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이미 수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사상과 관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령 및 정책과 일치하며, 동시에 1948년 등장하는 건국헌법에 근사(近似)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고하의 건국 구상은 해방과 건국의 시점에 당대 시대정신의 고갱이었다.

고하는 한국민주당 수석 총무 및 국민대회 준비회 위원장이라는 민족세력의 중핵으로서 활동하면서 미군점령을 고려한 상황에서 ‘민주주의적 민족국가’를 추구한 것이었다. 광복 70주년에 통일을 추구하며 다시 건국 시점을 반추해야하는 우리는 고하에 대해 두 가지 요체에서 전면적인 재해석·재음미·재평가를 시도해야한다고 판단된다. 이제 진보-보수 정부를 두 번 씩 경험한 현 시점에서 고하의 시야와 관건, 국량과 지향은 역사로서 머무르지 않고, 이념을 넘어, 통일을 향한 현실적인 미래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5.

먼저 고하는 당시 한국민주당의 건설을 주도하였는 바 최근의 한 주목할만한 연구(윤덕영)에 따르면 창립 당시 한민당은 80%가 민족운동 관련자였고, 10%는 사회주의자였다. 친일파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들은 고작 14%로서 이는 당시 좌파 조직 못지않게 적은 비율이었다. 즉 한민당을 친일파 정당으로 본 일부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었다. 또 동아일보-보성전문 계열의 인사들은 42%였고, 나머지 상당수는 기독교 계열이었다. 이들이 한민당의 양대 세력으로서 극우도 아니고 친일파도 아니었다.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초기 한민당의 구성과 성격은 일종의 우파주도의 좌우연합 정당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초기 한민당의 구성과 성격은 그것을 주도한 고하의 성향과 국량, 능력과 의도, 체제구상을 잘 보여준다. 즉 그는 탁월한 능력과 폭넓은 인맥을 갖고 해방 초기 국면을 주도하던 균형있는 중도주의자요 민주주의자요 민족주의자였던 것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 우리가 맥락적 재해석을 통해 더욱 깊이 음미해야할 점은 초기 한민당의 정강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정체 수립,

근로대중의 복리증진, 주요 산업의 국영 또는 통제 관리, 토지제도 합리적 재편'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당시 한민당의 정강정책은 사실상 사회민주주의의 정강정책으로서 이는 역시 임정 헌법 및 건국강령, 대한민국 건국헌법과 거의 동일하였다. 즉 근대 이후 주류 체제구상의 본령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북한이 체제경쟁에서 패배하고 탈락한 현실에서 의회주의를 통해 평등과 복지체제를 추구한 고하의 선견은 오늘에 충분히 되살릴 가치로 살아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의 좁은 관점에서 균등경제와 복지강화를 사회주의경제체제라고 비판하는 오늘의 보수 담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초기 보수 건국세력과 건국헌법에 대해 얼마나 크게 곡해하고 있는지를 한민당의 정강정책은 잘 보여주고 있다.

고하는 1945년 12월 22일 방송된 [한국민주당의 정견]을 통해 “비록 독립한 국가가 되었다더라도 그 권력이 일인의 전단한 바 되고, 일계급의 독재한 바 된다면 무엇으로서 우리의 생명재산과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민중에 의하여 민중을 위한 민중의 정치가 실현됨을 따라서 민중의 자유가 확인되고 민중의 평등은 보장될 것.” “과거에는 자유에만 치중하고 균등에 있어서는 진실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자본가가 이윤추구에 광분한 나머지 경제적 균등의 기회는 파괴되고 따라서 근로대중의 생활은 그 안정을 잃었던 것” “우리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독재적 전횡을 타파하는데 있는 것 같이 경제적 민주주의는 독점의 자본을 제압하는데 있는 것”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민주주의는 그 정책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와 일치된 점을 발견치 못하리라고도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정통 자유주의진영, 보수세력의 폭과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놀라운 언명이 아닐 수 없다. 개인독재와 계급독재를 넘어 자유와 평등을 두 날개로 삼아 민중과 근로대중을 위한 강력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고하에 이르면 이미 당시 참여하던, 건국에 대한 좌우의 차이는 소멸되어 하나로 융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전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복지체제를 살린 수정자본주의, 루즈벨트 뉴딜 민주주의,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사회국가·사회적 시장경제 노선과 정책의 핵심 골간이었던 것이다. 기실 공산주의의 붕괴 및 신자유주의의 양극화와 독점체제가 심각해지는 오늘날 들어도 고하의 웅변과 관견은 놀라운 선진적 혜안이 아닐 수 없다. 사실상 북구(北歐) 복지국가-사회적 시장경제-사회민주주의의 모델을 반세기 전에 이미 천명하였기 때문이다.

6.

한민당의 정책세목에는 실제로 기업의 경영 및 관리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 토지사유의 극도제한 및 농민본위의 경작균등권 확립, 광공업 육성을 위한 계획경제수립, 주요 공장 및 광산·철도의 국영과 같은, 임정 헌법-건국헌법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노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 세목은 사실 사회민주주의를 넘어 부분적으

로 사회주의에 근접하는 수준이었다. 이런 한민당을 극우정당으로 해석한 그동안의 해석들은 오류였던 것이다. 동시에 오늘날의 좁은 극우주의, 반공주의, 보수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중심 건국정신으로 해석한 것도 오류였던 것이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넓은 체제와 노선과 이념과 헌법 지평 위에 탄생한 것이 대한민국이었던 것이다.

한민당은 1945년 12월 16일에 1946년 1월 10일 국민대회 개최를 결정하였고, 18일에는 지역 및 단체대표를 발표하였다. 동시에 더욱 중요한 것은 1월 10일의 국민대회에 상정할 대한민국 헌법대강을 준비하기 위한 헌법연구위원 11명을 선임하였다. 모두 고하 생전의 일이었다. 당시 선임된 헌법연구위원들은 김병로, 김용무, 이인, 강병순, 송진우, 김준연, 장택상, 서상일, 정인보, 이극로, 백남운이었고, 후에 추가로 선임된 10명은 조병옥, 윤보선, 백남훈, 함상훈, 김약수, 원세훈, 고창일, 한근조, 안재홍, 김여식이었다.

이는 해방 이후 최초의 헌법제정 논의이자 당대 최고 수준의 구성이었다. 이념의 폭 역시 극좌와 극우를 제외하고는 진보-보수 모두에 폭넓게 걸쳐 있었다. 한마디로 시점과 폭과 수준에서 놀라운 건국교부-헌법제정교부들(founding fathers) 진용편성이었다. 이는 12월 20일 임정이 조직한 헌법기초위원회와 함께 활동을 개시하였다. 정당창당(대의기구), 국민대회 개최(민중참여), 헌법 준비(법률제정)라는 치밀하고 정교한 고하의 삼면 국가건설 구상은 곧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당시 고하 송진우만이 이 셋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다. 물론 그는 임정의 정통성과 과도성 및 미군정의 현실적 점령을 인정한 상황 위에서 38선 철폐와 양군철폐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를 추진하고 있었다. 38선 철폐와 양군철폐는 매우 이른 주장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서 신탁통치(탁치)문제의 전면 등장과 좌우 과격파의 득세로 인한 이념적 양극화와 절대화의 흐름 속에 송진우의 치밀하고 원대하며 현실적인 중용진보적(中庸進步的) 건국구상은 좌절되고 말았다.

좌우극단주의가 범람하는 현실에서 송진우 암살은, 개인적 좌절을 넘어 해방국면에서 한국사회의 미래비전, 특별히 중용적 진보의 실패를 의미했다. 이는, 현실 속에서 이상을 추구하여 둘을 화학적으로 결합하려했던, 해방 직후 가장 뛰어난 현실적 이상주의(practical idealist)의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그가 치른 대속적(代贖的) 벌금이었다. 그러한 근대구상을 상실한 것은 한국으로서는 너무나도 큰 손실이었다.

7.

고하는 생명을 벌금으로 내고 후대들에게 과업을 남겨주었다. 역사는 늘 뛰어난 선두주자들에게 벌금을 요구하고 그 벌금을 통해 후대들은 삶을 영위한다. 동시에 그 벌금들은 늘 후대들에 의해 다시 살아난다. 선두주자들의 벌금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력을 갖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당시 세계적으로도 가장 선진적 경로였던, 의회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결합을 추구했던 고하의 길은, 좁은 이

념의 잣대나 자유민주주의의 틀에서만 접근해서는 정확하게 파악될 수 없다. 동시에 통일을 향한 미래지향적 가치를 추출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이제 고하를 보는 고루하고 협애하며 편벽된 해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산주의는 반대했지만 사회민주주의는 수용하여, 민주적 의회적 방법으로 복지와 평등의 길을 갔던 그를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 우리는 그로부터 형평과 공영, 노동과 균등을 강조했던 길을 먼저 복원하여 황금과 자본과 돈 만능의 세상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그 길이 독립운동과 민족세력, 초기 한국민주당을 바르게 되살리는 길인 동시에 대한민국 건국 정신의 고갱이를 다시 살려내는 요체가 아닐 수 없다. 동시에 통일시대까지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것이 자신을 던져 역사적 벌금을 먼저 지불한 고하가 오늘의 우리에게 묻고 또 요구하는 역사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송진우를 바로 읽고 제대로 평가하는 지혜로부터 우리는 (과거의) 건국정신을 옳게 자리매김하고, (미래의) 통일정신을 바로 찾는 넓고 깊은 수원(水源)을 찾게 될 것이다. 갈라지고 다투고 증오하는 오늘의 우리 사회, 공동체, 조국, 민족의 현실을 돌아보매 넓고 길고 깊은 역사대화와 미래비전을 마련해주고 떠난 고하의 길 앞에 다시 숙연해지는 所然이다.

후대를 위해 벌금으로 생명을 치른 한 고결한 선각의 삶을 되새기며,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조국을 ‘지옥’, ‘불반도’, ‘망한 민국’으로 부르는 이 민망한 조국의 현실 앞에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은 오늘의 우리세대가 선대와 후대를 향해 함께 옷매무새를 매만지고 모두 옷깃을 여미어야 하는 까닭이다. 저 후대들에게 우리는 정녕 어떤 나라를 물려줄 각오로 오늘 자기 희생적 벌금과 대속을 치르고 있는가? 우리 세대의 몽매와 아집, 고루와 이기가 저들의 희망을 꺾고 있는 집단적 죄악은 아닌지 같이 묻자는 것이다.

박명립 :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민간인으로는 최초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작성, 발표함.

고하 송진우선생 서거 70주기
추모 학술세미나 토론문

	제 1부 : 고하 송진우의 독립 사상에 대한 재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하 송진우의 근대국가 사상과 민족운동가로서의 위상 발표 : 윤덕영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토론 : 김현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고하 송진우의 독립 방략에 대한 고찰 발표 : 이철순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 : 김명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심지연 : 동북아역사재단의 김현철 연구위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김현철 : 예, 안녕하세요. 동북아역사재단의 김현철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원래 구한말 개화파 인물 또는 갑오개혁 시기를 주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 러일전쟁 시기에 계몽운동과 관련하여 논문도 쓰고 관심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윤덕영 연구관님의 발표 논문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하 송진우 선생님이 서거하신지 7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마침 어제 동아일보 기사에 나온 것처럼 ‘고하는 한국 자유민주주의 뿌리, 그의 좌우협력 정신 절실.’ 이런 기사에 맞게끔 윤 연구관님의 논문을 읽다보면 고하는 우파 민주 민족주의자 입장에서 좌파까지도 포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좌우대립을 극복하려는 굉장한 시도를 했던 우리 정치사에 몇 몇 안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하는 해방 후 1945년 말에 흉악범에 의해서 서거하심으로서 좌우가 분열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돌이켜 볼 때, 다시 생각하게 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논문을 읽어보니 윤 연구관님께서 굉장히 잘 쓰셨으며, 고하와 관련된 궁금한 점에 대해선 이철순 교수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써주셨기 때문에 논문의 내용 자체나 사실 자체에 대한 어떤 코멘트라기 보다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윤 연구관님의 논문에서는 고하 송진우선생님이 일본 유학생이었던 것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설명해주시고 계십니다. 1910년대, 20년대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 유학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또는 서구의 지적 흐름도 배웠고 또 여기 나온 것처럼 일본 내에서 진보적 지식인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 시기에 일본에 유학한 한국 지식인들의 상당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유학을

간 학생들중 한 쪽에서는 영국식의 자유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동아일보를 통해서 실현시키려는 계획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일부이지만 사회주의를 통해서 그 나라대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학생 중에서도 서로 어떻게 보면 좌우가 분립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서부터 좀 더 서로 노력하였다면 좌우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송진우 선생이 그 당시에 유학 갔던 다른 좌익계열의 지식인들과도 어떤 식의 교류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이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자께서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결국 고하 송진우 선생은 신간회 운동에 관여를 하셨고 거기서 좌우 합작의 통합을 시도했다가 잘 안 되셔서 그만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논문의 끝부분에 보면 국내 우파 세력을 통합하는데도 몇 가지 한계점을 얘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호남 정치세력이라든가 동아일보 계열을 언급했을 때 호남 정치세력은 지역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자료집의 30여 쪽에 보면 고하가 일반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고하가 동아일보를 이끌어갔으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대중적으로도 지식인 사회에 큰 영향력이 있고 잘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은 당시 고하의 정치 활동에 있어서 제약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사회적 위치가 그런 건지, 아니면 많은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좀 잘 안 된 건지, 그리고 그런 것이 나중에 그의 정치적 입지와 활동을 하는데 제약요인이었는지 궁금합니다. 1930년대, 40년대 우파들의 좌우합작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와 관련 국내 정치에서 우파간의 통합 노력 자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발표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과 관련되어서, 논문의 끝 부분, 자료집 36쪽에 보면 고하 송진우 선생님은 해방 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했고 또 상해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과도정부를 수립하려는 구상을 갖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70년 전을 돌이켜보면 그 당시 남한 내에선 김구와 이승만으로 분리돼 있고 또 한민당, 한독당 같이 여러 당으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고하 선생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면서 이런 입장을 견지했다면 어느 쪽에 더 가까웠을 것인가? 또 그 당시에 미군정도 고하 송진우선생과 같은 입장을 과연 지지할 수 있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해봅니다. 고하 송진우 선생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분의 통합노력 자체가 시도가 안 된 걸 안타까워했지만,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좌우가 어떤 식으로든 통합했으면 그나마 분단이라든가, 지금의 이런 분열과 대립을 좀 더 막을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이 정치적으로 좀 미묘한 사항이 될 수 있지만 윤연구관께서 이와 관련하여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박사과정 졸업 (정치학 박사).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원,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의 연구교수,
 일본 東京大學의 외국인 객원연구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의 강사 역임.
 현재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위원 겸 동북아역사속도교육연수원장으로 재직중.

심지연 : 예, 자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김명섭 교수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김명섭 : 예, 심지연 교수님 감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고하 송진우 선생님 서거 70주기를 맞이해서 귀중한 학술대회를 정성껏 준비해주시고 또 저희의 사전모임을 통해서 이 학술세미나의 의미를 되새겨주신 김창식 이사장님, 그리고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전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전모임에서 저희가 미리 모여서 오늘 학술회의를 할 때 두 개의 발표문에 대해서 다 토론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개의 토론, 발표문을 묶어서 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고하 송진우의 독립방략을 고찰하신 이철순 교수님의 논문과 그리고 고하 송진우의 근대국가사상과 민족운동가로서의 위상을 다룬 윤덕영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의 논문은 세계적 사상연쇄의 흐름 속에서 당시 고하의 고뇌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물론 오늘 발표하신 윤덕영 선생님과 몇몇 선생님들의 고하에 대한 단독연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고하를 단독으로 연구한 업적들이 아직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두 분의 오늘 발표는 비단 고하를 선양하는 기념적 의미에서 뿐 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발표였습니다. 토론자로서 두 발표문을 함께 읽으면서 4가지 질문 또는 쟁점들을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 두 발표문은 모두 고하가 동양전통사상으로부터의 영향과 더불어 일본 유학시절을 통해 형성된 민주주의 사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일 유학생 기관지 <<학지광>>을 통해 남겨진 고하의 글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윤덕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면 윤덕영 박사님께서 인용하신 바와 같이 5-60년대 서구사상의 도입을 통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저작의 예를 들면 Gregg Brazinsky라고 하는 사람이 2007년에 출간한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 - The Making of a Democracy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광복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부분 미국의 도움을 통해서 이뤄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수작입니다. 오늘 윤덕영 박사님, 그 다음에 이철순 교수님이 지적해주시는 학지광을 통해 전개되었던 고하의 민주주의 사상의 흐름을 반추해보면 이때 이미 어떻게 보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동시에 일본으로부터 이러한 민주주의를 수입해왔던 통로가 있었다 라고 하는 새로운 상당히 중요한 세계학계에 던질 수 있는 화두를 제시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하 송진우선생이 전통적인 동양사상과 일본을 통해서 한 번 걸러진 서구적 민주주의를 도입시키려고 노력했다 라고 하는 점은 최근에 국제학계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관념사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그러한 동아시아의 전통사상과 민주주의를 접목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고민이 바로 신문을 창간하면서 그 신문의 이름을 <<동아일보>>라고 했던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의 수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하여 우리가 내일 윤보선 고택에서 에든버러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발표하신 분 중에 김병로, 이인 등 2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일제말기에 지조를 지켰던 그러한 민족주의 지도자로서 역시 해위 윤보선도 빼놓을 순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최연소 의원을 지냈고 말년까지 끝까지 친일하지 않았던 해위 윤보선,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던 인물이기 때문에 한국 민주당 관련 인물들을 얘기하면서 해위 윤보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든버러 심포지엄의 의미도 영국을 통해 들어왔던 민주주의 사상의 흐름을 반추하고 있고, 마그나 카르타 800주년을 맞이해서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에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이승만 일기 발간기념 국제화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당시의 한국 민주당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바지했던 주요 인물들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위 윤보선과 우남 이승만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수입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윤덕영 박사님이나 이철순 교수님의 발표는 그런 기준에 있었던 영미식 민주주의의 수입이 아닌 일본을 통해 들어온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선 상당히 의의가 있으나, 역시 근대 민주주의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윤보선이나 이승만에게 영향을 미쳤던 개신교의 도입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이 가지고 있었던, 가톨릭과는 달랐던 그 민주주의적 지향성이 19세기 후반에 전파되면서 상당히 민주주의적인 토대가 닦여나가고 있었다 라고 하는 측면들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고하의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철순 교수님께서서는 고하가 일본 유학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를 채택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윤덕영 박사님께서서는 고하가 일본 유학시절을 통해 서구적 민주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보다는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최근 교과서 서술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논쟁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만 당시 고하가 생각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였느냐, 민주주의였느냐 하는 대립점이 두 분의 발표에서 도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의 발전은 사실 공산주의자들이 표방했던 인민민주주의와 대립하면서 발전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10년대 1920년대 상황에서는 지금 <<학지광>>을 통해서 발전하는 고하의 사상이 발전되던 무렵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보다는 역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시의 민주주의 자체가 겨냥하고 있었던 대립적 개념이 군주정, 그리고 봉건주의와 같은 분명한 대척점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나중에 등장하는 인민민주주의와의 대결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한 번 더 발전하는 그러한 단계로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민주주의라고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있었던 그대로의 용어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에 있어서 이것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고하의 사상을 자유민주주의적이었다라고 해석하느냐 하는 차이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내지는 논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오늘 <<동아일보>>에서도 부각시킨 좌우 협력의 문제입니다. 좌우 협력의 문제에 대하여 윤덕영 박사님께서도 송진우

의 주장은 “자유사회주의를 주장하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의 통합을 추구했다” 라고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송진우는 글로벌한 차원의 자유주의, 반공주의의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었다” 라고도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하는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 동시에 반공주의자였다 이런 해석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17년 우리가 흔히 러시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1917년에 러시아 차르 체제를 무너뜨린 2월 혁명입니다. 그 2월 혁명의 결과 수립된 정부는 사회민주적 성격의 케렌스키정부였습니다. 이 사회민주적 성격의 정부를 다시 정변을 통해 정권을 장악했던 것이 바로 볼셰비키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정권을 잡고 나서 레닌이 21개 조라고 하는 강령을 발표합니다. 그 강령 속에는 앞으로 우리 코민테른에 속할 정치단체들은 사회주의라는 명칭을 써서는 안된다 라고 분명히 못박아두고 있습니다. 이 레닌의 21개조가 발표가 된 이후에 프랑스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이 투르(Tours)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이 레닌의 21개조에 나와 있는 이것을 다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인가를 놓고 3박 4일 동안 격론을 벌입니다. 그 격론의 결과, 레닌의 21개조를 계속 받아들여서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이 공산당으로, 공산주의자라고 이름을 바꾸자고 하는 쪽과 아니다, 우린 사회주의자다 라고 고수하는 쪽으로 갈리게 되는데 다수파가 공산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프랑스 공산당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그 때, 거기에 반기를 들었던 것이 프랑스 사회당 전통입니다. 그 프랑스 사회당 전통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 전에, 20년전에 있었던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고 지금 현재 프랑스의 대통령 올랑드 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소수파였던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명확히 구별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 사상사적 맥락에서 고하의 사상을 윤덕영 박사께서 분석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세계 사상사적 맥락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명확히 구별되고 있었을 뿐 만 아니라 당시의 프랑스 사회주의는 반공좌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윤 박사님 발표문에서처럼 고하의 그런 사회주의적인 색채라고 하는 것과 반공주의적인 색채라고 하는 것이 공존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김창순, 김준엽의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에서 수없이 공산주의자라고 명명되어왔던 인사들을 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국가보훈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인사들을 사회주의자로 명명을 변경하여 보훈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반공적 분위기 때문에 사회주의라고 명칭을 변경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공산주의자라고 표명을 했다면 그 분들은 공산주의자인거고 스스로가 사회주의자라고 표명을 했다면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반공사회주의를 통합하려고 했던 이러한 고하의 고민이 잘 드러난 것이 바로 1945년 12월 22일 라디오로 방송된 한국 민주당 정견 발표 방송입니다. 이것을 잘 읽어보면 이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인물이 한 명 숨어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설산 장덕수입니다. 설산 장덕수가 1936년 콜롬비아 대학에서 “영국의 산업평화”라

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박사학위논문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사회민주적인 성격, 그러나 철저하게 반공적인 성격의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설산 장덕수가 송진우가 한국 민주당 수석 총무로서 이러한 정견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아무런 역할도 안 하고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국민주당을 만들면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하면서도 또 늘 던지는 질문이 몽양의 조선인민공화국, 그 다음에 김일성이나 박헌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파였던 평양의 고당 조만식의 조선민주당 등 이러한 모든 단체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명칭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주당은 굳이 다수의 민중들에게 익숙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한국’이라는 명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수에게 익숙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이라고 하는 명칭을 따라가는 것이 더 민주적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고하 송진우는 조선민주당 대신 한국민주당이라는 명칭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 :

Université Paris 1 Panthéon-Sorbonne 박사.

서울대학교 지역중합연구소 특별연구원,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부교수,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장,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 역임.

현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기 한국정치외교사학회장, 국제학술지 Geopolitics 편집위원.

저서 : <<전쟁과 평화: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대서양문명사>> 등.

심지연 : 예, 두분의 토론에 대해서 각각 해당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들을 해주세요. 예, 우선 윤박사님부터 해주시죠.

윤덕영 : 네, 두 분 선생님의 토론 감사합니다. 우선 김현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과 김명섭 선생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질문은 사실은 좀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섭 선생님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회주의내에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그 내부에 대단히 다양한 사상적 조류와 경향을 포괄하는 넓은 범주의 개념입니다. 그 안에는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무정부주의 등 여러 계통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사상임에도 상당히 반공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민테른 제6회 대회 이후 공산주의 세력이 ‘계급 대 계급’ 전술로 전환하면서 사회민주주의를 과시즘과 연결시키는 ‘사회과시즘’론을 주장하자,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공산당과 심각하게 대립하게 되거든요. 자유주의도 사회주의만큼 넓은 범주의 개념입니다. 그 안에는 존 로크와 애덤 스미스로 대변되는 고

전적 자유주의도 있고,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세계를 휩쓸었던 하이예크와 프리드먼으로 대변되는 Neo-liberalism의 신자유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회주의적 경향을 일부 받아들여 자본주의적 테두리 내에서 고전적 자유주의를 수정하고자 했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의 그린과 홉하우스, 홉슨으로 대변되는 New-liberalism의 신자유주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케인즈류의 수정 자본주의는 이와 연결되어 있지요. 고하는 New-liberalism의 신자유주의와 1910~20년대 일본 다이쇼 테모크라시의 개혁사상, 그중에서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사회를 개혁하려는 개혁사상에 일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은 이런 사상적 조류가 명백히 구분되지만, 사실 이런 구분은 1930년대 이후 분명해진 것입니다. 아까 김명섭 선생님이 말씀하신 설산 장덕수의 경우, 박사논문에서는 사회민주적 경향과 반공적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1930년대 중반의 공산주의 세력과 여타 사회주의 세력과의 대립,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덕수의 경우 1910년대 후반에서 20년대 초반에 이미 1930년대와 비슷한 영국의 신자유주의적 또는 사회민주주의 우파적 사상과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초반 상해파 고려공산당에 가입해서 국내파 책임자를 역임합니다. 이는 한국 민족의 3·1운동이라는 전 민족적 항전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계 열강이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를 묵인하였던 것에 반해, 소련과 코민테른은 식민지 민족운동에 대해 지원을 하고 독립을 지지한다고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곧 그는 공산주의 이념에 찬동해서가 아니라, 세계열강이 외면한 한국 독립과 민족운동을 위해, 그들의 지원을 얻기 위해 공산당에 가입해서 활동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회주의자 내부에서도 소위 '사기 공산당사건'으로 드러난 것 같이 설산의 이념적 성향이 상당히 문제가 되면서 제명을 당하게 됩니다. 한국의 민족운동에 있어 1920년대 중반까지는 공산당이나 그 관련 조직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사상과 내용은 공산주의와 무관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심지어 1925년 결성된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람들 중에도 공산주의 사상이 아닌 무정부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것이 1930년대 들어서입니다. 공산당 재건운동이 전개되면서 공산주의와 비공산 사회주의의 구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1920년대 활동을 보고 바로 공산주의자로 연결시키는 것은 역사적 실제와 크게 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1930년대 이전과 이후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1920년대 국내에서 전개된 사건과 민족운동들, 예컨대 김윤식 사회장 사건이나 민립대학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신간회운동 등의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내부에서 다양한 논의와 논쟁을 전개합니다. 사회주의자들 중에는 민족주의자들의 협력에 적극적인 사람과 세력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는 당면의 민족혁명과 독립운동에서 민족주의자들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상적 경향이나 행동에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자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고하 송진우의 경우는 당면 민족혁명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주도권을 주장하는 공산세력과는 명백히 선을 긋고 대

립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산세력과 구별되는 여타의 사회주의 세력들은 가급적 포괄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일제 강점기에도 그러했고 광복직후에도 그러했습니다. 특히 이는 광복직후 고하 주도로 결성된 초기 한국민주당의 경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초기 한국민주당에는 김약수, 원세훈, 유진희, 서정희 등 일제 강점 하에서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다수 참여합니다. 물론 이들 다수는 고하 사후에 한민당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고하는 더 나아가 당면 민족혁명 과정에서 민족주의자들의 주도권을 인정한다면 공산주의자들도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중국에서 전개되고 있던 제1차와 2차 국공합작에 따른 국제적 정세 변화를 고려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신정부 수립에서 공산당의 주도권을 주장하는 세력들과는 대립하였다는 측면에서는 반공주의자임이 분명하지만, 사회주의내의 다양한 이념적 경향을 선별해서 수용하는 등, 광범한 세력과 인물들을 망라하기 위해 폭넓은 스케일과 활동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김현철 선생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질문은 요약한다면 정치인 또는 민족운동가로서의 고하의 모습들에 대한 의견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고하는 일제 강점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민주주의 대중 정치를 지향했던 사람입니다. 비밀결사에 의한 민족운동이 아닌 대중적 지지와 결집에 의한 대중적 민족운동을 추구했습니다. 중국 국민혁명군의 북벌이 개시되면서 동아시아 정세가 크게 변동하는 1926년 9월의 시점에 그는 그런 민족적 중심단체로 일컬어지던 이런 조직을 결성하기 위해 좌우의 세력, 심지어 조선공산당의 일부 세력과의 협력하여 주도적으로 운동을 추진하였지만 여러 이유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대중적 정치조직, 민족운동 조직은 1927년 2월 신간회 창립으로 결실을 맺게 되지만, 공교롭게도 고하는 그 준비과정 기간중에 일제에 의해 감옥에 구속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 후 신간회에 가입하기도 하고, 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김병로가 1930년 이후 신간회의 중앙지도부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고하는 이런 민족운동의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동아일보라는 민족 언론의 합법적 틀에만 머물러 있었고 이는 1937년까지 계속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민족운동가로서, 대중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당시 한국인들한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가 당시 동아일보 계열과 호남출신 민족운동가들의 가장 대표적 핵심인물이었음에도, 서북세력의 대표적 인물인 안창호나 기호세력의 이승만과 달리 별도의 민족운동 조직을 직접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의 세력 기반은 조직적이지 못했고, 그 영향력이나 대중적 인지도도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는 국외의 민족운동 세력과의 연계도 거의 하지 않았고요.

고하가 주도하던 동아일보에는 아일랜드 민족운동에 대한 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고하는 아일랜드 민족운동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민족운동의 일종의 모델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일랜드 민족운동을 주도한 것은 혁명적 민족주의 정치세력인 신페인당이었습니다. 신페인당의 경우는 영국의 자치의회에 참여해서 합법적 활동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직접 군대를 조직해서 영국과 무장투쟁을 병행합니다. 신페인당은 합법과 비합법, 의회투쟁과 무장투쟁을 조합하면서 아일랜드의 민족운동을 주도합니다. 고하가 신페

인당을 보았다면 실제 이런 활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하는 실천적 정치인, 민족운동가로서의 모습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그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데 제약적인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김현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입니다. 광복 후의 과정에 있어서 고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고하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국제 정세, 특히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대단히 주목하고 그 추이에 민감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국공합작과 북벌, 그리고 제1차 국공합작이 깨지면서 국공내전이 전개되는 과정들을 보아 왔고, 그 이후 제2차 국공합작과 환난사건 이후 국공의 대립과정을 이미 광복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복 이후의 신정부 수립과정에 있어서 한국에서도 중국과 같이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국가건설이 제기될 가능성과 그 위험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정부수립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광범위하게 모으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유효한, 그리고 광범한 정치세력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명분과 기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시의 임시정부를 얘기하면 김구 선생님만을 얘기하지만 당시 임시정부는 김구의 한국독립당과 김규식 및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이 연합한 일종의 민족협동전선 정부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시정부 지지는 공산당 주도의 정부 수립을 지향하는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고하는 이런 임시정부 절대지지론을 기반으로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한 1945년 12월에 이르면 광범한 정계개편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산당을 제외한 좌우의 대부분 정치세력을 망라하려고 합니다. 그의 정계개편운동이 제대로 성공했으면 이후 한국의 정치지형은 상당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섭 선생님이 두 번째 질문으로 당시 고하가 생각했던 것이 '자유민주주의'였느냐, 아니면 '민주주의'였느냐 하시면서, 이를 교과서 서술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논쟁과도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1910~1920년대 상황에서는 고하의 사상을 자유민주주의라는 의미보다는 역시 민주주의라는 의미에서 용어를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에 동의합니다. 저는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고, 역사학은 기본적으로 실증에 기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는 '자유민주주의' 용어와 그 개념은 1950~60년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표방했던 인민민주주의와 대립적 의미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며, 그 이전에는 이런 용어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니다. 때문에 광복 이전의 자유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용된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역사학의 기본적 태도라 생각합니다.

심지연 : 예, 이 교수님.

이철순 : 많은 말씀이 있었으므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아까 저에게 한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김현철 선생님께서 만약에 고하가 해방 이후에 계속 살아 있었다라면 역사적 가정이지만 어떤 분들하고 더 가까웠겠나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그 분들이 김구선생이나 이승만 박사라고 하였을 때, 역사적 가정이니깐 편하게 말씀드리지요. 제가 보았을 때 이승만도 굉장한 정치적 현실주의자고 당시 반탁 국면에서도 보면 반탁운동을 주도하지만 미군정하고는 대립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노선이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고하하고 이승만이 더 친화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925년 하와이 범태평양회의에서 고하와 우남이 이미 한 번 만남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세 사람의 관계에서 보면 고하와 우남이 더 친화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역사적 가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명섭 교수님께서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용어를 잘 구분해서 써야 한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치학자로서 역사학도 좀 합나다라는 역사 해석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시의 용어 대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아 “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자유민주주의”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런 건 제가 앞으로 글을 쓸 때, 맥락에 따라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썼던 용어로 써야할 땐 당시의 용어로 쓰고, 또 해석을 해야 할 때는 해석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 것을 구분 없이 섞어 쓰게 되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연 :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의 발표, 두 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p>제 2부 : 고하 송진우의 건국 사상에 대한 재조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방 후 고하 송진우의 정치 구상 발표 :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토론 : 김영명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 근대를 향해, 국민국가를 향해, 민주주의를 향해: 송진우의 길, 중용적 진보의 길 발표 : 박명림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토론 :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교수)

심지연 : 먼저 한림대학교 김영명교수님의 토론이 있으시겠습니다.

김영명 :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김영명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고하 송진우 선생에 대해서 연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한국 현대정치사 공부를 조금 했기 때문에 아마 토론자로 섭외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강원택 교수의 발표는 제가 특별히 반대의견을 낸다든가 이럴 만한 것이 없고, 송진우 선생의 활동과 사상을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탁치 문제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국사 교과서 문제 때문에 지금 이념 논쟁인지 정치적인 논쟁인지 이런 싸움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탁치문제도 그 중에 하나의 핵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강원택 교수가 발표했듯이, 또 송진우 선생의 사상에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볼 수 있듯이 이 탁치안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한 것은 결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앞날에 이익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스크바 선언을 받아들여라,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많은 가능성을 놓고 타협과 협상과 토론과 공론 형성과 그 다음 경쟁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탁의 정서라는 것이 강원택 선생이 지적했듯이 그 당시에 우리 한민족의 정서상으로는 누구나 당연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정서상으로 당연한 것이었고 과연 그것이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볼 때,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아니죠, 한민족의 앞날에 그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가장 분명한 이유로, 그러면 당시 반탁의 대안이 무엇이었느냐, 아무도 그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냥 모스크바 선언 반대, 반탁, 탁치 반대.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결국은 좌우대립의 심화, 미국과 소련의 경쟁과 대립의 심화, 결국은 분단의 고착,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고 실제로 다른 길을 내놓은 사람도 없었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전 그 당시 김구 선생의 현실인식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인제 이것을 누구누구의 잘못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당시의 상황이라는 게 있고 제가 그 때 살았어도 아마 반탁 시위에 나가고 뒤로 물러서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깐 그거는 한 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건데, 그 현실주의라는 것 하고 민족의 이상이라는 거 하고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또 민족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송진우 선생의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좀 현실주의적이면서도 이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조금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런 점에서 미군정이라는 실력자, 실세의 엄연한 존재,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후세에 객관적으로 보면 그걸 인정한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전략 같은 것을 짚어야 되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데에는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심했고 우파에게도 이런 정서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과연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었느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러면 단지 우리가 즉각적인 자주 독립의 염원이 있었는데 이러한 염원을 미군정이라는 실질적인 정부, 국가기구의 존재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그 당시 남한의 모든 정치세력의 과제였을 텐데,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임시정부를 추대한다고 하는 것과 미군정과 협력의 협력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었을까. 이런 걸 혹시 강원택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조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정과 대립하지 않고 현실적인 노선을 걸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과연 대립이라는 것을 여기서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하면 대립이고 어떻게 하면 대립이 아닌가. 아까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미군정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민족의 자주독립 국가를 세워나가는 방도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를 쭉 들어보니까 송진우 선생의 그 사상노선이라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필요했고 이것이 좀 더 세를 확보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박명림 박사가 발표하실 때 11개 나라 중에서 한국이 아직도 분단이 돼 있고 전쟁을 했는데도 분단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왜 우리만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은 한 번 비교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마 박사님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발표자나 토론자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을지는 몰라도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의심이 가는 것이 그 당시에 한국인의 실력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겁니다. 그 식민지 11개 나라 중에 식민통치를 극복하고 바로 독립한 나라가 몇 나라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도자와 민중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민족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실력이 부족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식민사관도 아니고 저는 친일사관을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였을까 하는

것을 좀 더 고민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게 별 소용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앞날을 위해서도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우파와 좌파가 굉장히 투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좌파, 우파라고 하는 것이 이념의 격차로 보면 별로 거리가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은 이런 세력들이 전혀 타협을 하지 못하고 극단으로만 가는 것은 역시 우리 정치권만이 아니고 시민사회도 아직 미성숙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극복하고 타협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국가, 또 통일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 교훈을 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송진우 선생이 살아있었다면 좀 얘기가 달라졌을 수 있다, 우리가 이런 희망사항 비슷한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데 물론 송진우 선생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아 가지고 조금 더 세력을 키우고 했더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당시에 송진우 선생의 정치적인 위치, 비중,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만약에 피살을 안 당하셨더라면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인지. 그런 것을 한 번 짐작으로라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명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뉴욕주립대학교 졸업, 정치학 박사.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국제학대학원 원장 역임.
 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글문화연대 대표 역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외솔상 수상.
 현재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저서 : <한국의 정치변동>(2006), <정치를 보는 눈> (2007), <좌우파가 논쟁하는 대한민국사 62> (2008), <담론에서 실천으로: 한국적 정치학의 모색> (2010), <단일 사회 한국: 그 빛과 그림자> (2011), <이게 도무지 뭘 하자는 소린지 모르겠고: 한국 불교, 이것이 문제다> (2012), <대한민국 정치사> (2013).

심지연 : 예,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정윤재 : 예, 지금 소개받은 정윤재입니다. 오전부터 아주 중요한 논문들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저도 함께 쪽 듣고 읽었습니다. 우선 박명림 교수님의 정말 진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고하에 대한 글은, 고하에 대한 나름대로 입장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이 발표문은 조술확충(祖述擴充)이나 법고창신(法故創新)과 같은 온고지신(溫故知新) 차원의 연구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하(古下)라고 하는 송진우선생의 아호가 우리한테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 것의 밑에 내가 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지나간 역사를 찬찬히 살피면서 현재와 미래의 길을 탐색하는 그 진실함과 신중함이 오늘 학술회의를 쪽 함께 하면서 느낀 제 소감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형태

의 정치든, 또는 어떤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든 갖춰야 할 덕목이겠죠. 우선 저는 박 교수님의 글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고하 선생이 남긴 큰 가르침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한 찬찬한 따짐이 또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3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에 있어서 조직력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고하는 일본유학의 시기, 그 다음에 동아일보 시기, 그 다음에 문화운동 시기, 그 다음에 신간운동의 시기, 그 다음에 한민당 시기 등에서 고하는 조직적인 차원의 재능 또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적어도 해방 직후 우리의 정치가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염원과 가치를 지니고 있던 정치세력들 또는 지도자들이 조직력이 매우 빈곤했기 때문에 통합의 정치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성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꾸만 공산당 박헌영 쪽 조직이 강했다고 비판하고만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이른바 비혁명적 건국세력, 비계급혁명적 건국세력들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탁월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하여 아까 얘기한 민중 속으로의 전개, 이것이 비교적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하 선생은 후배들한테 그게 꼭 학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만 실천적으로 이 나라를 건강하고 멋있게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일이 뭐냐, 사상도 중요하고 가치도 중요하지만 실천적인 조직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정치 혼란기를 거치면서 많은 뜻있는 유지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자교육이 필요하다, 지도자를 길러내는 어떤 체계가 필요하다는 걸 많이 말씀하셨죠. 이 체계에 저는 조직력 있는 지도자들, 조직력 있는 지식인들, 조직력 있는 유식자들을 길러내는데 정말 맘을 많이 흘러야 하고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치를 윤택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과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고하는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지만 신학문을 배웠고 신학문의 중요성을 가르쳤지만 역시 전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단군, 세종,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운동,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근현대 암흑기를, 민족의 암흑기를 견디며 지내는 동안에 우리의 선배들께서는 “나 됨” 즉, 족대의 확인, 나 됨을 역사 속에서 확인하는 그 일을 골똘하게 해왔습니다. 그것은 고하만의 일이 아니었고 그 시대의 민족적 과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고민하고 분투하고 울분을 토했던 많은 선인들에게 있어 공통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우리 정치가 부족한 부분, 즉 전통에 대한 깊은 배려. 그 뿌리 속에서, 뿌리 깊은 나무가 나오고 자라는 것이 곧 국가 발전이요, 개인의 발전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게 해준 분이 고하 선생님이십니다. 그런 예는 앞부분에 논문들의 발표를 통해서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누구든지 동의하든 않든 적어도 1948년 8월 이후의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사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민주주의의 정치가 윤택하지는 못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자유 민주주의의 정치를 하는 분들의 행태가 지극히 단선적이고 지극히 배제적이었습니다. 그건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 위배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하는 현대사의 맥락에서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사에 포함되는 인물입니다. 박 교수님은 고하를 보수적 진보라고 평가하여 그 분의 진면목을 드러

내고자 하였지만은 정치사적으로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정치사 속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배제적이고 정치적 타방을 근거 없는 용어로 매도하는 그런 분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하와 같은 분들의 리더십이 다시 드러나고 다시 기려져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운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했을 때 사상적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고하는 이미 영국의 뉴 리버럴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암흑기 속에 주권을 빼앗긴 우리 조선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그 글이 바로 자유권과 생존권의 실천적 조화를 고민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서양사상에서 만나지 못하는 자유의 가치와 평등의 가치가 우리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탐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근현대사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아까 어느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근현대, 이른바 대한제국 전후기와 식민지 시대 때의 우리 선인들이 남겨놓은 지적 성찰은 매우 두껍습니다. 그 속에 고하가 있고 그 속에 민세가 있고 그 속에 소양이 있습니다. 이 분들, 결코 빨갱이가 아니고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물론 비폭력, 비계급혁명적 사회주의자의 면모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의 여론조사에서 많은 국민들은 사회민주주의를 70퍼센트 정도 지지했습니다. 그런 층에서 보면 고하도, 그런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열망과 그 열망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와 관련해서는 사회민주적인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의 스펙트럼에 있었다 하더라도 매우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양분은 충분히 이미 식민지시대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고하에 대한 이 논의는 단순히 고하 개인에 대한 기림이 아니고, 첫째는 우리 근현대사 속에 앞으로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남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양이 이 속에, 바로 우리 선인들의 역사의 자취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확인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런 세 가지 차원에서 저는 박명림 교수께 하나 코멘트를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출범하기 이전까지 그제 식민지 시대든, 해방정국에서든 분명히 이데올로기적인 스펙트럼으로 보면 민주공화주의의 도입과 전개과정이었습시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손문이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주의 혁명을 성공시켰습시다. 그 때에 동경 메이지대학에 있던 조소양, 와세다대학에 있던 안재홍, 역시 메이지대학에 있던 고하 등, 그 당시 조선 유학생 학우회 회원들은 신해혁명 소식에 흥분했습니다. 아니, 기대에 벅찼습시다. 왕이 폐위된 다음에 갈 길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손문을 통해서 내가 나서면 나라도 다시 찾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연장된 것이 3·1독립운동입니다. 그 앞에 2·8독립선언이 있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근현대사는 민주공화주의의 도입과 전개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3·1독립운동 이후 192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우리 민족사 속에서도 민주공화주의가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민족진영이 대표하는 이른바 자유주의적 계열. 저는 이 자유주의적 길속에 식민지 시대 때는 타협적, 또는 비타협적 길을 통했던 민족진영 사람들이 포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민주공화주의를 실천하는 사회주의의 길 (socialist road to democracy)을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의 공통

된 특징으로 우리가 간주해야 할 부분은 반제국주의, 반일 투쟁이라는 차원에서 공통적입니다. 물론 거기에 친일동화주의자들은 제외되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근현대사 속에서 대한민국 역사와 식민지 시대 역사를 구분해서 냉정하게 평가하며 우리의 근현대사를 윤곽하게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맥락에서 저는 고하 송진우 선생은 민족진영 속에 있는 분으로서 해방 직후에, 또는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를 훨씬 건강하고 포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고하를 다시 보면서 굳이 진보적 중용이라고 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중용이라는 말은 정치적 좌우 중도를 다 포함해서 누구든지 실천하게 해야 할 우리 전통의 고전적, 보편적 가치입니다. 즉, 누구나 포용적 정치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중용이란 중간치기가 아니라 자기 기준을 분명히 하며 상대방을 배려한다, 저울질한다, 그런 보편적 가치입니다. 중용의 추구는 누구나 해야 할 가치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차라리 그런 가능성과 사례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진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쓸 필요 없이, 그냥 중용의 정치, 또는 중용의 길, 이렇게 하면 박명림 교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의 역사적인 과제들을 좀 해결하는데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보라고 함으로 해서 이런 통합적인 노력을 고민하는 이 자리에서 오히려 그것이 생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말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붙잡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재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미국 하와이대 정치학 박사.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영국 케임브리지대 국제문제연구소 방문교수 역임.
 한국정치학회 회장, 현대사상연구회 회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국가경영연구소 소장,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 회장 역임.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과학부 교수, 신간회기념사업회 부회장.

심지연 : 예, 두 분의 발제에 대해서 두 분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토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분께서 말씀들을 해주시죠.

강원택 : 네, 김영명교수님 감사합니다. 역시 중요한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논쟁적이지만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기하셨던 탁치에 대한 반대가 반드시 옳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사실은 탁치 반대 이외의 다른 선택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탁치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들어 이에 관련된 논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희경 박사 논문도 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논문들은 그 당시에 탁치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분단

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방법이 아니었겠는가. 그걸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소수의 목소리이긴 합니다마는 이러한 논의는 중요합니다. 사실 당시 고하의 판단이나 고하의 접근 방식은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재조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하가 세상을 떠나고 탁치안에 대한 반대로 세상이 쪼개지면서 남북한은 분단의 길로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된 국가를 만들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시기에 조금 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지적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학술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질문은 미군정과 어떻게 조화할거냐 그리고 미군정과 대립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라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구 선생 그리고 임정 세력은 탁치안이 나오게 되면서 탁치안에 대한 반대 운동을 미군정을 제압하고 임정세력이 권력을 잡는 기회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깐 이걸 대립이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무력을 갖춘, 군사력을 갖춘 그런 통치세력이 있는 상황에서 임정의 포고문을 통해서 뒤집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 국제정치적 상황을 고려를 했다면 쉽지 않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범은 그런 대립하는 방향으로 나갔던 거지요. 백범 이외에도 인민공화국, 각 지역에 있는 인공의 지부, 혹은 나중에 박헌영의 남로당이 미군정과 대립하는 형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하 선생의 경우에는 한민당이라는 당 조직을 이끌면서 의견이 안 맞거나 요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미군정에 요구를 하는 거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주어져있는 현실적인 틀을 인정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또 당시에 우리가 필요로 했던 여러 가지 요구조건들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하가 4개의 정당, 나중에 5개가 되긴 하지만, 4개의 정당을 중심으로 국민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는 한민당도 있고, 안재홍 선생이 이끈 정당도 있고, 장안파 공산당도 있고, 인민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좌우가 다 망라된 형태죠. 좌우가 망라된 정당들이 모여서 임정이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미래의 권력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의 권력이다, 라고 선언했으면 아마 김구 선생이나 임정이 갖게 되는 국내정치적인 영향력이나 기반이 굉장히 강화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정과 김구선생이 가졌던 초기의 가장 큰 어려움은 외부에서의 활동에 대한 높은 평가는 있었지만 국내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 국내정치적 기반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던 분이 고하 선생이었던 거죠. 그럼 거기서 임정과 국내정치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돈, 실제로 애국금 헌성회와 것들을 만들어서 자금을 모아 임정세력에게 돈을 기부하면서 그 세력이 내부에서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은 김구선생이나 임정세력 입장에서는 고하가 세상을 떠났을 때 대단히 안타깝고 억울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무력을 갖춘 기관, 통치기관으로서의 미군정은 존재하지만 우리 내부에는 여러 가지 정치세력들이 뜻을 같이 해서 임정이라는 존재를, 우리의 미래권력이라고 자리매김

을 해줄 수 있었다면 국내정치적으로 그 이후에 있어서의 정치적 리더나 혹은 국내 정치적 상황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이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게 온 질문은 아닙니다만, 고하의 위치나 비중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이승만이나 김구와 같은 대중적인 형태의 활동을 하셨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대중적 지도자로서 김구나 이승만과 비슷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동아일보라든지 교육 분야라든지 문화 활동 등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고, 또 일제와도 거리를 두었고 등등.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신망을 쌓았지요. 또 언론 등의 활동을 통해서 당시 좌우익을 막론하고 상당히 많은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과 좋은 교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고하 선생은 정인보 선생이나 가인 김병로와 같은 분들이랑 가까웠고, 뿐만 아니라 홍명희, 원세훈 이런 사람들하고도 가까웠습니다. 인촌 선생은 말할 것도 없고. 이처럼 상당히 폭넓은 교류관계를 갖고 있었고 정치적 신망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느냐를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 예컨대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찾아와서 치안이나 안전귀국 등의 일을 맡아달라고 먼저 부탁했던 일을 들 수 있습니다. 고하가 거절하자 그 다음에 여운형에게 부탁을 해서 여운형이 맡기로 했는데 몽양이 몇 번 찾아와서 고하 선생 보고 같이 하자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처음에 당을 만들 때 참여하지 않았던 고하 선생이 정작 한민당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수석총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그 당시에 고하가 해방 정국에서 갖고 있었던 정치적 무게감,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정치 엘리트 수준에서는 상당 정도의 명망과 신망을 갖고 있었던 정치지도자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해방 정국에서, 그리고 그 이후의 정치적 변화 과정에서 고하선생이 할 수 있었던 역할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운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저도 박명림 선생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박명림 선생님은 지금의 시각에서 봤을 때, 진보적 입장을 많이 부각을 하셨는데 해방 공간에서의 고하를 본다면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라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영국의 보수당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때 영국 보수당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보수라고 하는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를 양보를 해가면서 시대적 변화를 수용을 해야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보수주의자들이 현명한 것은, 모든 걸 다 지키겠다, 하나도 난 바꾸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혁명으로 확 뒤집혀지는 게 프랑스와는 다르게, 영국의 보수당, 영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시대적 변화가 올 때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거나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하 선생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보수주의자였지만, 그 당시 1945년 해방공간에서 우리 조선의 인민들이 원했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요구들.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또 봉건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요구가 거

췌던 시대적 상황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 요구에 대해서 보수주의이긴 하지만 시대적으로 필요한 아픔이고, 시대적으로 필요한 요구라면 이것을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졌던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올바른 보수 정치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명림 : 예, 감사합니다. 두 선생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하 송진우의 길에 관하여 제가 처음에 췌던 용어는 원래는 ‘중용적 진보’의 길이라 아니라 ‘중용적 혁신’의 길 이었습니다. 진보의 길이나 보수의 길이라 아니라 중용을 강조하려했던 것입니다. 진보라는 말은 본래 “한 걸음 더 나아가다”라는 뜻인데 혁신은 “안에서 새로워진다” “안으로부터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하 선생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자기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당대 현재의 우리 공동체의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안에서 성찰하고 안에서 새로워지려는 구상을 가졌던 분으로 보았습니다.

처음에 정당을 주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주당 수석총무로 추대가 되는 것도 고 하라면 여러 사람을 묶어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 보는 것을 보아, 안에서 새로워 질 수 있는 지도자라고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용적 혁신의 길은 그걸 말하 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분이 가려고 했던 길 이, 임시정부의 사회경제노선이나 건국 헌법처럼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측면에 있 어서 ‘중용적 진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무슨 노선으로서의 진 보보다는 시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혁신의 길을 가려고 했던 지도자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학문적으로 존경하는 정윤재 교수님의 말씀은 거의 전부 동의합니다. 교수님의 <<정치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는 이미 이 분야에선 가장 고전적인 저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고하 송진우선생을 동아시아 정치와 사상 지평에 서 보자는 말씀과 그의 전체적인 위상 지적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신해혁명 이후 민주공화주의가 동아시아에 확산될 때 최초로 중화민국이라는 용어는 등장할 수가 없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민국’(republic)이라는 근대국가형태에 어떻게 ‘중화’(中華)라는, 2500년 동안 중국의 국가나 제국에게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종족중심적 민족중심적 용어를 썼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금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도 마찬가지지요. 당시 중국의 근대국가건설 노선 중에 중화주의와 인 민공화국을 접맥하려는 사상은 사실은 없는 거였지요. 초기에 손문의 경우는 중화 민족 주의와 중화세계주의가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일부는, 메디슨이나 제퍼슨이나 빅 토르 위고처럼, 중국에서도 중화연방(USC. United States of China)과 같은 연방주의 구 상을 가지고 훨씬 더 넓고 거대한 평화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사실 같습니다. 차차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조소앙의 세계일가(世界一家) 사상도 이런 것 으로부터 좀 영향을 받은 것은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을 깊이 들으면서 당시 민주공화주의의 두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 길과 사회주의 길이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길의 접합노력이 바로 해방 이후 고하의 초기 고뇌의 지점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고하 같은 자유주의자들은 일본식 근대성(Japanese modernity), 즉 전체주의와 군국주의를 넘은 다음에 미국식 근대성(American modernity)을 포함한 서구식 근대성(western modernity)으로 나아가려 했는데, 사회주의자들은 일본식 근대성을 소비에트식 근대성(Soviet modernity)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유주의적 근대성 만큼의 주체적 선택권이랄까 자율성이 없었다는 게 비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알바니아인민공화국, 헝가리인민공화국, 불가리아인민공화국, 유고슬라비아인민공화국 ...처럼 국가형태와 명칭이 완전히 일치하였다는 점입니다. 소련의 관점에서 당시 신생국들을 볼 때 일률적인 국가형태를 요구하되 “너희는 사회주의국가가 아니다”는 지침이었지요. 제가 1945-46년 사이 2차 대전 직후의 신생 국가건설에 대한 문서들을 워싱턴에서 뒤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명칭과 헌법초안들이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에서 92년 사이에 동유럽 국가들이 붕괴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국명에서 인민공화국을 다 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소련한테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생적 민중혁명의 시기에 전부 삭제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회주의의 길이 민주공화국의 길이었는지 요즈음 본격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운재 선생님 말씀대로 근대 사상체계로부터의 해석, 즉 저 역시 루소부터 헤겔, 맑스로 이어지는 게 (민주)공화국과 공화주의의 급진주의의 길이었고 로크부터 칸트, 매디슨, 제퍼슨으로 이어지는 게 공화국·민주공화국의 자유주의의 길이였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의 길이 과연 소련의 규정력을 벗어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당시 소련의 영향력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저는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민주주의를 풍부하게 하는 고하 사상의 측면은 깊이 고뇌하신 탁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정당 문제는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승만은 정당을 4색 당파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만들지 않고 계속해서 대중조직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당과 시민과 헌법, 이 3가지를 동시에 고민한 거의 유일한 인물이 고하였습니다. 45년 해방 직후의 시점에 헌법을 이렇게 정교하게 구상한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의 자유주의나 자유민주주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자유민주주의 용어는 자유주의자들이나 건국의 교부들에 의해 사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회민주주의나 의회주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유와 평등, 민주와 공화, 개인과 국가를 결합하는 그 지점에서 고하가 민중과 정당과의 결합을 사유하지 않았나, 당시 거의 유일하지 않았나, 이런 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새로워진 자유민주의 정치사상을 어떻게 통합적인 자유민주주의로 자리 잡게 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폐쇄적이지 않게요. 이런 점에서 저는 고하를 좀 다르게 보아야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현재에 대한 재해석뿐만 아니라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중요한 지점, 즉 고하가 헌법과 건국을 구상하면서 포용범위가 매우 넓었다는 점입니다. 헌법 조직을 구성할 때도 좌파의 이극로, 백남운, 김약수까지 들어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고하는 대단한 국량을 소유했다고 보여집니다. 공을 위해서 사를 넘는 거지요. 11명 구성원들을 보면 저는 깜짝 놀라서, 이념이 달라도 다 포용하고 일제시대에 조금 불투명한 사람들도 명백한 친일이 아니면 수용하는 점, 그래서 건국에 대한 포용력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공산주의도 독특한 지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는 반대하지만 실체는 인정하는 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하가 건준이나 인공은 들어가지 않지만 자유와 평등, 즉 자유민주주의나 의회주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유와 평등을 함께 실현하려고, 즉 의회주의를 통해서 진보주의자들마저 다 포용하는 길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그게 아마 결국은 통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은 탁치문제인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대전 직후 연합점령, 분할점령을 당한 국가들 중에 도대체 1945년 말 1946년 초 시점에 민족과 국제, 좌파와 우파, 반탁과 찬탁이 이렇게까지 서로 불구대천의 낙인찍기를 하고 상대를 애국과 매국으로 가르고 싸운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까지 증오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걸 단지 한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국제결정일 뿐인데 그러한 국제결정에 대해 이렇게 격렬하게 찬반논쟁을 하면서 내부에서 너는 친소, 너는 친미, 너는 매국, 나는 애국하면서 불구대천으로 싸운 나라는 아무리 돌아봐도 없습니다. 저는 탁치논란은 정말 심각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볼수록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당시 북한의 비밀문서를 보아도 “이승만, 김구 반동과 타도하자”는 거는 없죠. 1948년 건국 이전에는 대부분 “김구 이승만 반동과 타도하자” 였습니다. 김구의 탁치에 대한 격렬한 반대,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1946년 3·1절 때 임정이 김일성을 살해하려 자객을 보내고, 그들 6명이 현장에서 잡히고 하는 과정에서 김구에 대한 증오는 절정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런 김구가 훗날 이승만에게 패배하는 시점에서 남북협상하자고 하고 제안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는 김구에 관하여서는 여러 공개, 비공개 문서들을 갖고 깊게 재해석해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 탁치논쟁은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컸습니다. 좌파건 우파건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연합과 공존의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고하를 찾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입니다. 전 결코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우 이념의 격차가 아직 크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권력 구성의 문제에서 다른 생각을 갖더라도 양보하고 공존하려는 고하의 정치적 통합성과 인간적 국량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김구는 임정봉대를 위해 반탁을 하고, 나아가 쿠데타까지 일으키고, 또 일제시대에는 위임통치를 주장하던 이승만 역시 반탁을 하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아야합니까?

마무리를 짓자면 저는 고하처럼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노선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도 서로 포용을 하면, 남한 내부도 통합되고 남한 내부가 통합되면 당연히 저는

평화공존과 통일의 길이 크게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서 길을 찾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 1부와 2부의 사회를 보면서 토론자들이 제기했던 질문에 대해 발표자께서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부 토론에서 김명섭 교수께서 “당시는 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보편적으로 쓰였는데 왜 당명을 한국민주당이라고 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선 대신에 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백남훈 선생이 집필한 「한국민주당 창당 비화」에 따르면 한민당은 해방 후 결성된 여러 정당들이 연합해서 출범을 한 당입니다. 그 가운데 규모가 큰 정당으로 고려민주당과 한국국민당이 있었는데, 어느 한 정당의 이름만 쓸 수가 없어 한국국민당에서 ‘한국’이라는 글자를 따고 고려민주당에서 ‘민주’라는 글자를 따서 한국민주당으로 당명을 정한 것입니다. 양당이 서로 자기 당명을 주장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나씩 따서 한국민주당으로 하기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명을 정했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 2부 토론에서 김영명 교수님께서 “반탁의 대안이 결국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찬탁이나 반탁이나”라는 이분법적인 상황에서 과연 대안은 없었겠느냐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 우사 김규식 선생이 제시한 견해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사 선생은 모스크바 3상 협정의 내용이 “미소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한반도의 임시적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비록 4개국의 신탁 관리 하에 있기는 하지만, 외교권과 국방권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 기능 전부는 그 임시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사 선생은 “일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적극 돕고, 신탁통치 문제는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그 임시정부가 자주적인 정신에 의해서 선택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당시 여론이 “찬탁과 반탁”으로 워낙 양극화된 상황이어서 우사 선생의 대안이 수용이 되지 않았고, 그 결과 ‘임시적 민주정부’가 수립되지 못해 남북 분단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고하선생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극단적인 논리를 배제하는 합리적인 분이시니까, 아마도 우사 선생님의 대안을 지지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더라면 분단도 되지 않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 삶이 훨씬 좋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 1부, 2부에 걸쳐서 고하 송진우 선생의 사상과 독립 정신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해주신 네 분의 교수님, 토론해주신 네 분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랜 시간 방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고하 학술세미나를 마련해주신 고하 송진우 선생 기념 사업회와 송상현 교수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지연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정치학 박사.

동아일보 기자, 한국정치학회 회장, 국회입법조사처장 역임.

현재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